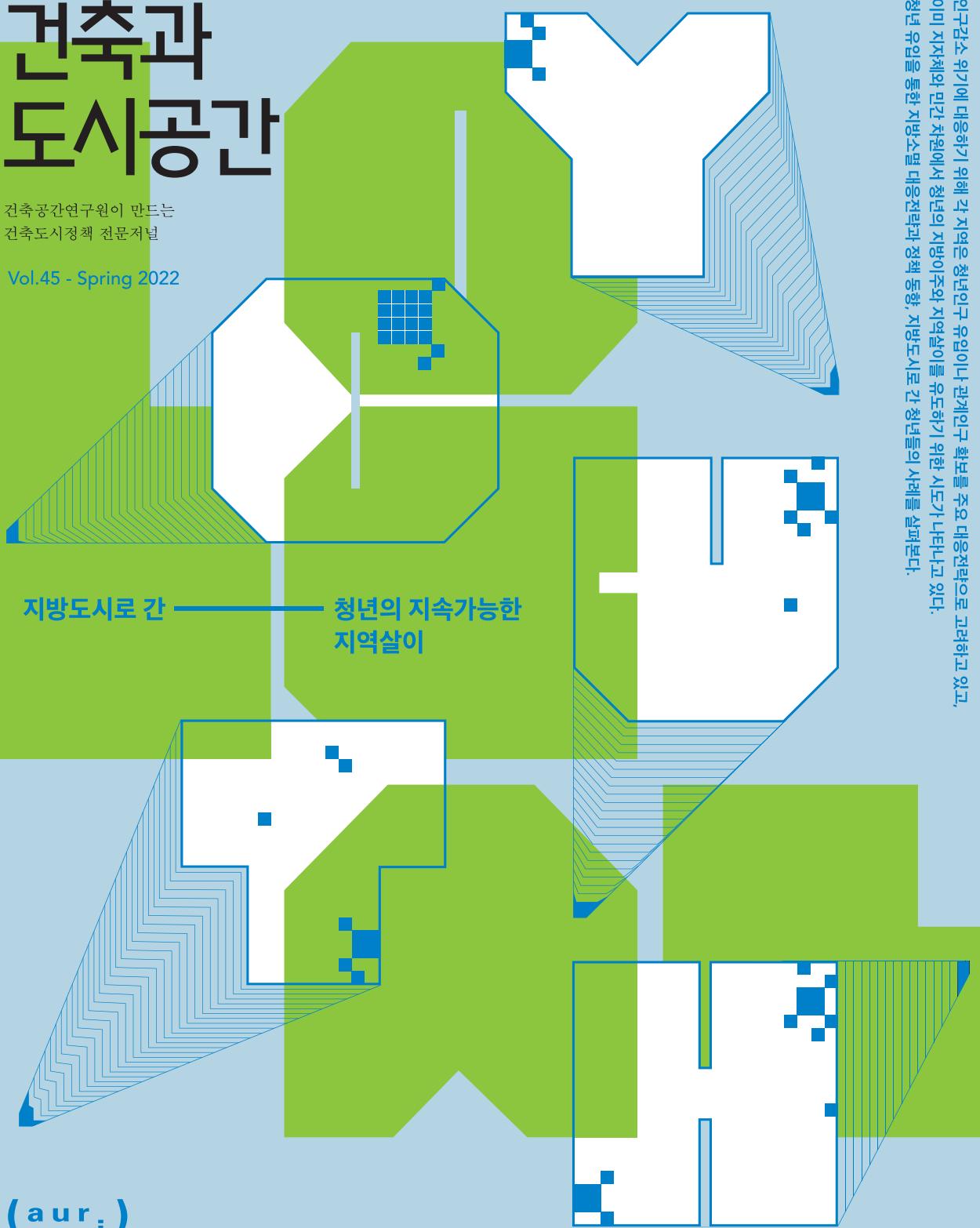


#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공간연구원이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Vol.45 - Spring 2022



연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은 청년인구 유입이나 관계인구 확보를 주요 대응전략으로 고려하고 있고,  
이미 지자체와 민간 차원에서 청년의 지방이주와 지역살이를 유도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청년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전략과 정책 동향, 지방도시로 간 청년들의 사례를 살펴본다.

# 건축과 도시공간

Vol.45 - Spring 2022

( a u r \_ i )

# 건축과 도시공간

Vol.45  
Spring 2022

발행

2022년 3월 31일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발행인

이영범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건축공간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책임

고효진

정책이슈 기획

장민영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편집

이미영, 김민자

본 연구원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빼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리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기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가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 표지

청년들이 종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역을 새로운 눈으로,  
지역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청년들의 활동이,  
청년과 지역의 만남과 시너지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방안과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CONTENTS

## 지방도시로 간 청년의 지속기능한 지역살이

시론: 로컬에서 더 행복한 청년들	정석	006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황석연	014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은 청년들의 이야기	송윤정	024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과 청년이 주도하는 지방창생	임화진	032
청년의 지방이주와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위한 과제	장민영	040

## 통계자료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공공운동시설이 얼마나 많을까?	이경재	052
-----------------------------	-----	-----

## 건축도시동향

<b>해외동향</b>	육아 지원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일본의 새로운 주택지원사업	권용수	058
	파리의 벨로폴리탄 사업 성과와 새로운 자전거 계획	유무종	063
<b>국내동향</b>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송호균	068
<b>해외단신</b>	주택난 속 비어가는 베를린의 주택, 원인과 시사점	김태환	072
	스페인, 지속가능한 도시 위한 '건축품질법' 승인 외		074
<b>국내단신</b>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 제시 외		077

## 세계의 건축·도시 싱크탱크

현장 기반 연구의 플랫폼, 캐나다 도시연구소	문보람	082
--------------------------	-----	-----

## 장소탐방

풍경이 흐르는 책 마루 – 양천공원 책쉼터	김정임	090
고령자와 도시환경을 위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모델 – LH 해심당	김성훈	104

## auri 소식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18
· 2022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개최	125
· AURI 마을재생 포럼 '넥스트 도시재생: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개최	126
· 2021 아시아도시경관상 국내 수상작 시상식 개최	127
· 2021 AURI 우수 연구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128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129
· 건축공간연구원-(사)한국사회주택협회-재단법인 동천 업무협약 체결	129

# 지방도시로 간 청년의 지속가능한 지역살이

# 1

우리나라 국가 총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하면서 지방도시의 인구감소와 소멸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주도의 계획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이나 관계인구 확보를 주요 대응전략으로 고려하고 있고, 이미 자체 또는 민간 차원에서 청년의 지방이주와 지역살이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청년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전략과 정책의 동향, 지방도시로 간 청년들의 사례를 살펴본다.

위하농하우스 의원



청년 대상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 공간



청년들이 기획한 프로젝트 전시나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팝업 공간



시론: 로컬에서  
더 행복한 청년들  
006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014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은  
청년들의 이야기  
024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과 청년이 주도하는  
지방창생  
032

**시론: 로컬에서 더 행복한 청년들** | 로컬살이의 불편한 점이나 불리한 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로컬이 기회의 땅이라는 것, 이미 그 기회를 발견하고 많은 청년이 로컬로 오고 있다는 것이다. 로컬을 선택한 청년들이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살면 좋겠다. 그들을 보며 더 많은 청년이 로컬로 올 수 있게.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사라져 가는 자원을 활용해 가치 있고 창의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된 정책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은 청년들의 이야기** | '인서울'을 외치던 청년들이 '지역'에 열광하는 다소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지역'의 경험은 청년들에게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또한 그동안 외면 받았던 지역의 가치를 보다 가까이에서 발견하게 된 청년들은 체험을 넘어 정주의 의미로서 '지역살이'를 쉽게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과 청년이 주도하는 지방창생** |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나 관광으로 찾아온 교류인구가 아닌, 지역 및 지역민들과 다양하게 교류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관계인구에 주목하였고, 여기에서 지역재생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정책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다.

**청년의 지방이주와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위한 과제** | 청년의 지방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책은 지역 맞춤형의 세부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으로서 지방이주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 로컬에서 더 행복한 청년들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로컬에서 만난 청년들

지난해 연구년을 맞아 지역에 머물며 한 달을 살아보는 ‘로컬 한달살이’를 이어왔다. ‘로컬에서 더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기 위해서였다. 서울과 수도권을 떠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도시를 떠나 중소도시에서, 사람 많은 신도시가 아닌 텅 빈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가 아닌 농산어촌 시골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고,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100개 이상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 ‘도시의 정석’에 올렸다.

벗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3월에 하동 악양면 시골마을에 와서 보름을 살았고, 뜨거운 여름 7월에 다시 와서 보름을 마저 살았다. 8월 하순부터 한 달은 목포 원도심 만호동에서, 10월에는 전주 원도심 중노송동에서 한 달을 살았다. 올해 1월 중순에는 강릉으로 옮겨가 마지막 한달살이를 하고 왔다.

며칠씩 머물면서 지역을 느끼고 사람들을 만나며 로컬을 새롭게 경험해 본 곳들도 많다. 경상남도 남해와 창원, 전라남도 순천·장흥·함평·무안·나주와 신안군의 여러 섬들, 경상북도 상주·문경·영천·칠곡을 다녀왔고, 충청남도 아산, 충청북도 진천, 제주 원도심과 서귀포 월평마을·추자도, 강원도 동해, 대전 어은동, 전라북도 순창·임실·진안에서도 로컬에서 더 행복한 사람들을 만났다.

청년들도 많았다. 하동에서, 영천에서 그리고 목포와 나주에서 만난 청년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간략히 옮기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로컬은 아

주넓고 또 깊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고, 그렇게 다채로운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청년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이었다.

## 하동의 작은 여행사에서 일하는 젊은 PD들

부산과 창원 등 대도시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시골의 작은 회사에 취업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 바다까지 가장 빼어난 자연을 두루 가진 하동의 로컬 콘텐츠를 멋지게 살린 여행과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공정여행협동조합 ‘놀루와’에서 일하고 있는 양지영·전윤환 두 PD를 하동 한달살이 중에 만났다.

양 PD는 창원에서 나고 자랐다. 대학 졸업 후 산청에서 3년을 보낸 뒤 2019년 3월 하동에 왔다. PD가 하는 일이 무어냐고 물으니 “피 터지고 디지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답하며 웃는다. 기획과 실행, 현장 막노동, 디자인까지 못하는 게 없이 뛰든 다하는 사람이란다.

청년 로컬살이 5년 차에게 행복한지 물으니 행복하단다. 가장 행복한 이유로 집을 꼽는데, 실은 집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하동살이 2년 4개월 동안 이사를 세 번 했다니 알 만하다. 운 좋게도 얼마 전 화개계곡 입구 언덕 위의 예쁜 단독주택 전세를 구해 이사했는데, 맘에 쏙 드는 집이 생겨 무척 행복하단다. 대지가 100평이 넘고 건물도 30평 이상인 저택을 1억 원이 안 되는 전세로 얻었고, 전세금의 90%를 청년 대출 지원을 받아 한 달 주거비는 대출이자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 대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다.

놀루와에서 하는 일을 물었다. 대표와 실장 그리고 두 명의 청년 PD가 함께 일하는 놀루와는 아주 작은 회사여서 직장이라기보다 공동체에 가깝다고 한다. 일을 매개로 하는 생활공동체 느낌이란다. 일과 삶이 구분되지 않아 불편할 때도 있지만 좋은 면도 많다고 한다. 청년의 시골살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의 문제일 텐데, 외로울 겨를 없이 일이 많은 데다 주변 어른들이 가족처럼 보살펴 줘 가족처럼 공동체처럼 지낸단다. 자신은 고향의식이 없는 세대로 살아왔는데 이곳에서 ‘고향’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놀루와의 막내 전윤환 PD는 인터뷰 당시 입사 5개월 차 새내기 PD였다. 태권도 4단의 스포츠맨, 선교사의 꿈을 지닌 독실한 개신교 신자,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부산 청년이다. 대학 졸업 후 채용사이트에서 놀루와를 알게 됐고, 블로그와 SNS와 유튜브를 통해 놀루와를 ‘열공’한 뒤 치열한 경쟁을 끝나고 PD로 채용됐다.

시골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다길래 이유를 물었다. 가장 큰 행복은 역시 집이란다. 악양면 하신흥마을의 시골집(대지 70평, 건물 20평 규모)을 월세 25만 원(보증금 200만 원)에 얻어 살고 있는데, 2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거비 지출을 줄인 대신 그 돈을 시골집을 고치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고 있단다.

“이 집에 사는 게 아주 행복해요. 대학생 때 살던 원룸과 달리 여긴 나만의 공간이고, 내 맘대로 꾸밀 수 있어서 좋아요. 원룸에 살 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는데, 여긴 이웃과 친하게 지냅니다. 옆집에 홀로 사시는 85세 할머니와 친구가 됐어요. 출근할 때 아침 인사 나누고, 퇴근할 때 인사 나눠요. 식사했는지 물어주시고, 음식도 챙겨주세요. 할머니에게 하루 동안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까 싶네요. 매일 말동무가 돼 주시는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시골살이의 불편한 점도 물었다. “불편한 점도 아주 많지요. 편의점 가려면 차로 20분, 마트는 동네 슈퍼 수준, 영화를 보려면 읍내 알프스하동에 가야 하고, CGV는 차 타고 광양까지 가야 합니다. 불편함은 많지만 불편함을 모두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 생활은 불편하지만 불편을 느끼지 못할 만큼 행복한 곳입니다.”

부산을 떠나 하동에 와서 느낀 하동의 특별함도 물었다. “며칠 전 친구가 하동에 와서 함께 지낸 뒤 제게 그랬어요. ‘하동이 하동했다!’ 친구 말처럼 하동은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 특별함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하동만의 특별함, 하동사람들만의 특별함, 놀루와만의 특별함, 나만의 특별함이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전 PD의 꿈은 무엇일까? “위로예요. 요즘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위로는 위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것이죠. 위에서가 아닌 아래에서 바라봐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것이 진정

한 위로일 겁니다. 나도 아래로 가서, 힘들고 아파하는 누군가의 곁에 가서 위로해주고 싶어요. 놀루와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 경북 유일의 수제 초콜릿 가게, 영천의 산과 보롬

제주 우도에서 우연히 만나 친구가 되고 5년을 함께 일했던 산과 보롬. ‘산’은 김강산 씨의 별칭이고, 바람을 뜻하는 제주도 말 ‘보롬’은 김은경 씨의 별칭이다.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 몸을 상한 보롬은 초콜릿을 끊고 금단 증세로 힘들어하다가 몸에 좋은 건강한 초콜릿을 직접 만들 생각을 했다. 카카오 열매에서 초콜릿 바까지 전 과정을 거쳐 초콜릿을 만드는 ‘빈투바’ 초콜릿 전문점을 창업하기 위해 두 사람은 제주 빈투바 전문점에서 3년 공부를 한 뒤 경상북도의 청년창업 지원사업 ‘도시청년시끌파견제’ 2기 (2019)에 참여해 2020년 4월 보롬의 고향 대구와 가까운 영천시에서 시립도서관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어 경북 지역 유일의 수제 초콜릿 전문점 ‘산과 보롬’을 열었다.

산과 보롬은 입만 즐거운 초콜릿이 아닌,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공정무역 방식으로 직수입한 카카오 원두를 발효하고 불에 볶는 ‘로스팅’ 과정을 거친 뒤, ‘그라인딩’과 ‘위노잉’ 과정을 통해 껍질을 깨고 분리한다. 잘게 쪼개진 카카오 닌스를 50여 시간 맷돌에 가는 ‘콘칭’을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초콜릿 바를 비롯해 닌스, 푸딩, 아몬드, 로쉐, 카카오차 등 다양한 초콜릿 제품이 만들어진다. 초콜릿에는 친환경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포장재도 일회용품을 최대한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한다.

산과 보롬은 영천에서 책 읽기 모임도 이끌고 있고, 영천의 청년 창업가들과의 네트워킹도 활발히 하고 있다. 책 쓰기 모임과 영화 모임도 열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카카오와 초콜릿 교육에도 열심이다. 안타깝게도 2021년 8월 가게에 화재가 발생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영천 지역 청년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 도와줘 추석 무렵 다시 문을 열었다.

## 서울에서 목포로 옮겨와 창업한 여섯 청년들

“지역이 원하는 서비스를 우리 방식대로!” 서울을 떠난 여섯 청년들이 목포에 와서 창업한 회사 ‘유후컴퍼니’의 캐치프레이즈다. 로컬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채워 주되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한다는 아주 멋진 비즈니스 전략이다. 목포 한 달살이 중이던 지난해 9월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은호 센터장과 함께 유후컴퍼니 서동효 본부장을 찾아가 만났다. 목포역에서 아주 가까운 로데오광장에 면한 상가 건물 1층 ‘오쇼잉’이란 이름의 배달 전문 커피숍에서였다.

목포에 와서 창업한 지 3년 차를 맞는다고 했다. 목포에서 지낸 3년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물었다. “목포에 와서 살면서 제가 서울에서 많이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많이 참으면서 살았고, 또 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기선 훨씬 덜 힘들게 살고 있고, 제가 가진 힘을 더 좋은 곳에 쓰면서 좋은 사람들과 나누며 삽니다. 이런 삶이 만족스러워 주변에도 추천하고 있어요. 더 많은 청년이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목포에 와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뭔지 물었더니 집 얘기부터 한다. “서울에서는 집이 제 인생에 너무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집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결혼을 결심하면서 더욱 절망적이었지요. 그런데 목포에 와서 달라졌어요. 서울 집값의 7~8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집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졌고,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서울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일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였어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 내뱉는 감탄사 ‘유후’에서 이름을 따와 유후컴퍼니로 이름 지은 여섯 청년들의 회사 영업장은 현재 세 곳이다. 가장 먼저 문을 연 곳은 사진관 ‘유후스튜디오’인데, 목포에 뿌리를 둔 ‘보해양조’가 지원해 조성한 ‘오쇼잉 청년빌리지’ 골목길에 위치한 상가 건물 1층과 2층을 쓰고 있다. 그다음 문을 연 곳이 배달 전문 커피숍 ‘오쇼잉’이고, 이 건물 2층에 한창 준비 중인 미디어 체험 키즈카페도 곧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는 3개 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고, 또 주민들이 찾아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 비즈니스는 점점 더 커질 것 같다.

여섯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3년이 지났는데 먹고살 만큼 버는지 물었더니 월평균 250만~3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다며 만족한다고 했다. 집값과 임대료 부담이 훨씬 적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많은데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으니, 비즈니스 아이템을 잘 찾아내기만 한다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보다 훨씬 유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로컬 아닐까. 수도권의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면 오를수록 로컬창업은 더욱 늘게 될 것이다.

## 전주에서 나주로, 강릉에서 나주로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 ‘나비스(NABIS)’ 뉴스레터의 커버스토리 원고 청탁을 받고 앞서 게재된 커버스토리 글들을 찾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2021년 8월에 실린 제33호에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의 글 ‘지역 창업 커뮤니티를 주목하라’는 글에서 나주 르네상스를 꿈꾸는 전주 사람과, 강릉에서 나주로 온 청년들 이야기를 읽고는 바로 페이스북을 검색해 친구 신청을 했고 연결이 됐다. 나주에 와서 복합문화공간 ‘39-17 마중’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 사람 남우진 대표와 전화 연락까지 이어졌고, 지난 2월 1박 2일 일정으로 나주에 가서 인터뷰를 했다.

전주 사람이 나주와 인연을 맺게 된 경위가 궁금해 물었다. “2015년에 나주 원도심의 건물을 매입하려는 선배를 따라 나주에 왔다가 전혀 몰랐던 나주의 매력을 발견하고 반했지요. 선배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져 제가 나주 정씨 종택이던 목서원과 난파정과 뒤틀까지 2,500평을 매입하게 됐고, 어찌어찌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잡목이 우거진 채 버려진 공간들을 고치고 되살리다 보니 폐가로 남아 있던 경주 최씨 종택과 광산 김씨 종택까지 매입하게 됐고, 4,000여 평 넓은 땅을 갖게 됐지요. 2017년에 쌀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카페로 오픈했고, 목서원도 같은 해 개스트하우스로 되살렸습니다.”

‘39-17 마중’이란 이름이 궁금했다. “마중한다,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나주에서 할 일도 ‘마중’인 것 같아요. 나주는 멋진 곳입니다.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곳에 와서 나주를 발견하도록 맞이하는 곳,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서원은 1939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2017년에 되살아

났으니 39-17을 붙여 ‘39-17 마중’이 된 것이고요.”

남우진 대표와 인터뷰를 마치며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마중 이곳 뿐만 아니라 나주읍성이 함께 살아나는 것이 꿈입니다. 4,000여 평 넓은 공간 마중은 저희 부부 둘이 쓰기엔 너무 큰 땅입니다. 이곳을 청년창업의 플랫폼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마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비즈니스 생태계가 꿈틀꿈틀 살아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신나는 문화발전소’를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우진 대표의 꿈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 그가 꿈꾸는 플랫폼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강릉에서 나주 원도심으로 와서 2018년에 ‘골목청년’으로 시작한 뒤, 2020년에는 ‘니나노플래닝’을 창업한 노건희·임재환 대표도 만났다. 노 대표는 나주의 매력으로 한적함과 조용함을 꼽았고, 임 대표는 개발이 안 되는 게 신기한 동네라며 강릉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원 그리고 아주 풍부한 스토리까지 가진 곳인데도 이를 못 살리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답했다. 보석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보석인 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단다. 직원은 모두 5명이고 월급도 중소기업 평균 수준인 250만 원 정도라고 한다. 회사 경영철학도 물었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재미있게 일하다 3~5년 사이에 독립하도록 권합니다. 각자 성장한 뒤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간다면 아주 멋지지 않겠어요?”

## 로컬에서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로컬에서 만난 청년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물론 로컬살이의 불편한 점이나 불리한 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로컬이 기회의 땅이라는 것, 이미 그 기회를 발견하고 많은 청년이 로컬로 오고 있다는 것이다. 로컬을 선택한 청년들이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살면 좋겠다. 그들을 보며 더 많은 청년이 로컬로 올 수 있게.

니나노플래닝의 노건희·임재환 대표 둘 다 음악을 좋아한다. 임 대표가 직접 ‘이 한적한 거리’라는 노래를 작사·작곡했다고 하길래 뮤직비디오를 찾아 감상했다.

어느 방송국 일기예보 담당 기자의 밝지 않은 목소리를 지적하는 PD, 친구들에게 나주 가서 힐링 좀 하자며 문자를 보내는 기자, 드디어 옛 나주역에 도착한 주인공을 반기는 듯 노래가 흐른다.

“이 한적한 거리, 우린 그려보네, 너와 내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 꿈꾸는 것을.” 갑자기 등장한 아저씨는 밥은 먹었는지 물으며 밥 먹으러 가고 하신다. 나주 서성문과 향교길을 밟은 표정으로 걷는 청년들. 노래는 계속 흐른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 그저 우리의 발자취일 뿐, 중요한 건 여기에, 이미 소중한 우리의 얘기가 있다는 걸.” 어두운 목소리로 일기예보를 했던 주인공이 밝은 목소리로 다시 일기예보를 한다. “이곳은 전라남도 나주, 청년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일상을 통해 생기 있는 지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주는 맑고 따뜻합니다.” 예보는 끝나고 노래는 계속 이어진다. “이 한적한 거리, 우린 그려보네, 너와 내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 꿈꾸는 것을, 모두가 손을 잡고서 다 같이 바라보는, 너와 내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 웃는 이곳을.”

#### 참고문헌

- 1      로컬에서 행복한 사람 – 놀루와 양지영 PD.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9wK8RSY-0jQ>
- 2      로컬에서 행복한 사람 – 놀루와 전윤환 PD.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GKdj7s\\_zlDY](https://www.youtube.com/watch?v=GKdj7s_zlDY)
- 3      로컬에서 행복한 사람 – 산과 보름.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_i-qZGK5EZQ](https://www.youtube.com/watch?v=_i-qZGK5EZQ)
- 4      로컬에서 행복한 사람 – 유후컴퍼니 서동효 본부장.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OrsmrKyFCg&t=44s>
- 5      나주 르네상스를 꿈꾸는 진주사람 – 남우진, 기애자 부부.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JIZYUmS3YzQ>
- 6      강릉에서 나주로 온 청년들 – 니나노플래닝 노건희, 임재환.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g3Ulgoz2TT4>
- 7      MV 한적한 거리, 향교길 프로젝트.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6cW4CqjdZtU>

#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황석연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서기관

##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의 목표와 방향, 성과

2021년 합계출산율<sup>\*</sup> 0.81.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상황을 이처럼 간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는 없다. 결혼해서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안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2020년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역사상 처음으로 출생자(27만 5,815명)보다 사망자(30만 7,764명)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Dead-Cross)’가 발생해 인구 증가율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을 보여주는 사회적 인구이동의 결과를 보면 더욱 답이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인구비율이 지난 2019년 사상 처음으로 50%(2,592만 5,799명)를 넘은 데 이어 2021년에는 50.39%(2,602만 3,283명)로 지방의 인구수를 추월했다.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면 인구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방의 합계출산율<sup>\*\*</sup>이 수도권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증가추세에 놓여 있고 지방의 인구는 역설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살아도 머지않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소득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된 탓이다. 반면에 수도권에서 돈을 벌어도 주거와 교통, 식자재 구입 등 생활비가 많이 들어 삶은 꽉꽉하기만 하다. 수도권 청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

\*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의 평균

\*\* 2021년 지방도시의 합계출산율은 세종특별자치시 1.28, 전남 1.02, 강원 0.98 등으로 서울 0.63, 부산 0.73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도 소득에 비해 주택 구입비<sup>\*</sup>가 더 빠르게 상승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주택구입에 20년이 넘게 소요된다.

인구밀도가 높고 삶은 꽉꽉한데 이런 수도권에 청년들이 모여드니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그나마 출생자 수도 적다. 합계출산율 0.81이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 문제와 인구절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사회문제 해결과제로 채택<sup>\*\*</sup>되면서 2018년 처음으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지역활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전국 단위 공모사업<sup>\*\*\*</sup>으로 전라남도 목포에서 처음 시작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저출생과 사회적 인구이동으로 지방소멸의 위험에 처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을 벌굴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사라져 가는 자원을 활용해 가치 있고 창의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된 정책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지역을 살리는 청년의 발굴

청년마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 자료는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sup>\*\*\*\*</sup>다.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전 일본 총무상이 주장한 ‘소멸 가능성 도시’ 지표에 따르면, 20~39세 이하의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비율이 0.5 미만이면 30년 이내에 그 지방이 소멸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일본 전체 시구정촌의 49.8%(896개)에 달하는 높은 수치여서 고령화 사회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다.

**\***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 구매가격 비율(PIR)은 중간 수준 3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로 나타났다. 즉 서울에서 중산층이 20.1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해당 지역의 중간 가격 수준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조직으로 사회혁신추진단이 행정안전부에 설치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가 실시돼 지방소멸 대응과제로 쇠퇴한 지역공간을 민간의 참여로 활성화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 2018년 시작된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가운데 지방소멸 대응과제는 ‘민간참여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전국에서 민간주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됐는데 (주)0장0장 등 10개 팀이 응모해 원도심 활성화를 제안한 목포시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 2014년 5월 일본에서 발간된 보고서로,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이끄는 일본창성회의가 낸 일명 ‘마스다 보고서’다.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2040년까지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된다는 경고를 담았다. 이 내용을 정리한 책 <지방소멸>은 한국에서도 출간돼 있다.

우리도 고용정보원(2020)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2013년 75개에서 2020년에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105개가 지방소멸 위험에 처할 것으로 분석됐다.

마스다 보고서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목한 것은 바로 청년인구였다. 특히 젊은 여성인구가 지역 생존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인구가 감소해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은 청년인구, 특히 출산이 가능한 젊은 여성인구를 적극 유치해야 하고, 이들에게 지역에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일자리와 주거환경 및 자녀교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 문제를 겪은 일본에서 ‘지역부흥대’와 같은, 청년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았다. 더불어 ICT 기업의 위성사무실을 유치해 청년인구 늘리기에 성공한 일본 도쿠시마(徳島)현 가미야마(神山)정의 ‘그린밸리’와 시마네(島根)현 아마(海士)정의 ‘자립촉진 플랜’처럼 청년들이 찾아와 기존 주민과 하나되는, 즉 활력 넘치는 커뮤니티를 조성해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들이 활력을 되찾은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례연구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사업은 크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공동체지원 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일본의 지역부흥대처럼 지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면 지역의 기업에 2년간 급여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종의 씨앗기 사업인 청년공동체지원사업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청년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들이 지역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개 시·도 100개 팀 지원에서 2022년에는 15개 시·도 140개 팀 지원으로 사업이 크게 확장됐다.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과 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을 연결하는 사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

구분	지역정착지원형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의의	지역 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정착 유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 및 고용 창출적 생태계 조성	공공·민간 부문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 연계	비대면·디지털 영역에서 일 경험 및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의 역량 향상
취·창업 분야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 기반 법인·단체	신규 창업 및 민간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예: 미술관 큐레이터, LPG 점검)	비대면 디지털 분야(예: AR/VR, AI, ICT 등 디지털 분야 직무)
지원 기간	2+1년(3년 차 취·창업 시 추가지원)	2년간(취·창업 지원)	1년 이내(일 경험 후 민간 취·창업 연계)	1년 이내(비대면 디지털 분야 일 경험 및 전문교육 후 취·창업 연계)
지원 내용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	취·창업 지원: 인건비 외 (교육비, 임대료 등)	인건비, 직무교육비, 자격증 취득비용 등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

\* (2018~2021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2021년 예산: 2,350억 원)

- 참여인원: (2018년) 1.1만 명, (2019년) 3.6만 명, (2020년) 3.6만 명, (2021년) 2.6만 명(목표)

\* 추진 일정: 사업공모(2020.10), 심사 선정(2020.12), 사업추진(2021.1.12), 성과분석(2021.12)

출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기본계획(2022)에 따른 행정안전부 실행계획

업으로, 인구 유입과 지속가능한 정착을 위한 지역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힌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2018년에 처음 시작됐다. 원도심 쇠퇴 지역인 목포 만호동 일대에 둉지를 튼 ‘팬찮아마을’ 청년들로 하여금 실패해도 팬찮은 또래 청년들을 초대해 지역살이를 경험하게 하고 지역 축제와 섬 전문 잡지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살이 열풍을 몰고 온 <sup>(주)</sup>0장0장이 첫 주자로 나섰다. 이후 2019년 인구감소 지역인 충남 서천군에 ‘삶기술학교’가 세워져 청년들의 지역살이 열풍을 이어갔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인구감소 지역인 경상북도 문경시에 ‘달빛탐사대’라고 이름 붙은 지역 청년 중심의 지역살이 실험이 진행돼 8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역을 누비며 지역정착 가능성을 타진했다.

## 청년마을 주요 성과(당해연도 말 기준)

구분	참여인원	정착인원	공간활용	교류행사
(2018년) 목포 팬찮아마을	60명	32명	3개소	3,457명
(2019년) 서천 삶기술학교	93명	47명	13개소	5,000여 명
(2020년) 문경 달빛탐사대	84명	31명	16개소	759명

-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 20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에 입학해 그중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했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사업에 참여한 청년, 지역 유휴공간 활용, 교류행사 등 각종 지역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3개년에 걸친 청년마을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 청년마을 확대와 지역활력 제고

2021년은 청년마을의 중흥기가 시작된 첫 해라고 볼 수 있다. 해마다 1곳씩 선정돼 시범실시의 성격이 강했던 청년마을이 2021년부터 한 해 12곳<sup>\*</sup>으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청년마을이 확대된 데에는 우선 인구감소 지역이 대폭 늘어나 지역불균형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세대 간 갈등의 여파로 공정이 큰 화두가 된 가운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도 청년마을이 확대된 배경 중 하나이다. 때마침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 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청년기본법」<sup>\*\*</sup>이 제정되면서 청년의 참여와 권리가 더욱 강조됐으며,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청년기본법 시행계획에 반영되면서 청년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청년마을의 이런 성장에는 독특한 사업구조도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가장 큰 특징은 사업의 기획과 예산집행의 권한, 즉 주도권을 청년들에

\* 2021년 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부산 동구(초량동), 인천 강화군(강화읍), 울산 울주군(상북면), 강원 강릉시(중앙동), 충북 괴산군(감물면), 충남 공주시(중학동), 충남 청양군(청양읍), 전북 완주군(고산면), 전남 신안군(안좌면), 경북 상주시(남원동), 경북 영덕군(영해면), 경남 거제시(장승포동) 이상 12곳으로 공모사업에 전국 144개 팀이 지원해 1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안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청년마을 1곳당 5억 원의 사업비가 직접 교부되고, 그 집행도 교부금이 아닌 일반용역 예산으로 편성해 애초 약속된 사업의 성과 위주로 결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도모했다.

지역살이 장소 선택도 자유롭다. 청년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지역을 직접 선택해 행정안전부에 제안하는 방식이어서 청년들의 선택권을 더욱 강화했다. 고용도 자유롭다. 기존 사업들의 경우 자자체나 기업을 통한 우회적인 지원인 데 반해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재정집행의 권한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청년이 중장년을 고용하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청년의 시각으로 지역자원을 새롭게 살펴보고 실패해도 용인되는 과감한 지역 정착 실험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고자 했다.

세 번째 특징은 다부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살이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또래 청년들을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 초대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거와 공유사무실을 구축하고 나면 자자체와 다른 부처의 지원사업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받게 된다. 별도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체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는 새로 뽑히는 청년마을을 대상으로 단일 연도 예산지원 방식을 탈피해 3년간 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좀 더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5년까지 해마다 12곳의 청년마을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연대를 강화한 후속 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감소 지역 89곳<sup>\*</sup> 모두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조직을 결성하고 공동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지역활력 제고 사업으로 본격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가 지역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0월 18일 지정고시한 인구감소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 등 전국 89곳으로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해 종합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향후 자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 국고보조사업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하게 된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방으로 돌려 지역자원에 눈뜨게 하고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도케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청년마을이 인구감소 시대 대한민국에 던진 희망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간결하다. 그것은 ‘지역에서 충분히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지역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길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우리 사회가 이들 청년에게 어떤 토양을 제공해야 할까?

### 신인류의 등장

“기후위기 시대에 30년 뒤 지구의 운명은 10대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학업을 중단하고 탈탄소 사회를 주장하고 나선 스웨덴의 기후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처럼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 고민을 달리하고 삶의 방식도 다른 ‘신인류’라고 부를 수 있다.

청년마을은 이런 신인류,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청년 세대를 발견해 내고 응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기성세대와 다른 이들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이들의 시각에서 지역사회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측면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지역혁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시작돼 5년 차에 접어든 청년마을이 새롭게 정의된다면 ‘신인류가 만들어 가는 새로운 지역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충북 괴산군의 논두렁에 만든 농부학교 ‘뭐하농’에서 자라는 작물은 표고버섯과 감자, 옥수수뿐만이 아니다. 나비와 반딧불이를 키워 지역 아이들이 보고 함께 성장하도록 돋는다.

오징어와 잡어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던 경상북도 영덕군 작은 어촌의 ‘뚜벅이마을’에 모인 청년들은 전국에서 찾아온 청년들과 함께 해안을 따라 해양쓰레기를 치우며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간다.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도의 섬마을 폐교에는 거북이와 앵무새가 사는 동물원이 만들어지고, 젊은 청년 작가들의 판타지 예술촌 ‘주섬주섬 마을’이 들어섰

다. 1,500년 된 백제의 고도 충남 서천 한산면에서는 ‘삶기술학교’ 청년들이 이 소곡주를 새로 포장해 와인이나 위스키와 견줄 만한 세계적인 상품으로 다시 탄생시켜 노인들이 명맥을 근근이 유지해 오던 지역 전통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청년들과 청년마을은 상상력 넘치는 새로운 스토리를 지역 안에서, 지역과 함께 써 내려가고 있다.

###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하기

지역에서 청년들이 오래 머물고 소득을 창출하며 살아가려면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잘 만한 팬찮은 일자리는 지역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으며, 지역산업은 청년들이 있어야 개선되고 혁신될 수 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오래된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밀짚모자 제조로 유명한 이탈리아 몬타포네(Montappone)는 인구 1,7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1년에 약 6,000만 개의 모자를 제조해 2,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세계 패션산업의 아이콘이 됐다. 마찬 가지로 일본의 화과자나 그리스의 올리브 오일처럼 단일 품목만으로도 세계인이 즐겨 찾는 소중한 미래산업을 지역에서 만들 수 있다.

1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충남 금산의 인삼 산업이나 강경의 젓갈 산업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롭게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통산업이다. 유럽에서 배워 온 제빵 기술을 활용해 남녘 바다 섬마을에 세계적인 관광산업을 일으킬 힘도 청년들에게 있다.

금동대향로를 만들어 낸 백제 장인들의 후예답게 청년들이 전북의 산에서 귀금속 산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넷플릭스를 통해 한류돌풍을 일으킨 K-드라마가 웹툰을 소재로 한 것처럼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머금고 웹툰 작가들이 만들어 가는 청년마을이 전남이나 경남의 오래된 시골마을에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청년마을과 오래되고 낡은, 때로는 잊힌 지역산업을 연결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만 있다면 한국은 스위스나 이탈리아처럼 작지만 강한 콘텐츠 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이 될 수도 있다.

**지역의 유휴공간,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발굴 등  
인구감소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 아닌 낯선 지역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가족을 이뤄 살아나가려면 일자리와 주거가 지원돼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 청년들을 받아들이려는 지역 사람들의 환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청년마을의 성공 여부는 지역주민의 환대문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환대의 시작은 ‘여지(餘地)’를 주는 것이다. 여지(餘地)란 한자를 풀어쓰면 남은 땅을 내어주는 것이다.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땅을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빈집과 빈방을 내어주어 잡잘 곳을 해결케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권한을 주어야 한다. 예산을 함께 나눠 쓰게 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생각과 견해를 받아들여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마을은 이런 기본적인 환대와 유휴공간의 제공,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충남 서천군에 만들어진 청년마을 삶기술학교가 그 좋은 본보기다.

청년들의 앵커공간으로 쓰이는 ‘노란달팽이’와 ‘한산한 오늘’이란 사무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내어준 경우이며, ‘그림 한담’은 비어 있던 가게를 지역에 내려온 청년에게 내어주어 예술가의 갤러리로 쓰게 한 사례다.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들에게 비어 있던 집과 가게를 내어줌으로써 죽은 공간이 살아나고, 이 공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 청년들이 지역을 활보하자 24시간 편의점이 새롭게 문을 여는 등 지역에 활력이 되살아났다. 청년들은 이 지역 전통주인 소곡주를 재포장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고를 높이기 시작했고, 상인들이 사라져 오래전 문을 닫은 여관을 개조해 지역 호텔인 ‘호텔-H’를 새롭게 열었다. 이곳은 전국의 청년들이 묵고 가는 교류의 장으로도 쓰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버려진 공간을 살리려는 이런 청년들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호텔-H’를 만들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민자산화 사업’을 통해 민간의 유휴공간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공공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 청년들이 일하면서 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디지털노마드 센터’가 문을 열었다.

특히 한산 소곡주처럼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재해석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청년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중소기업벤처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이 살아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주거공간도 있어야 한다. 학교와 병원도 있어야 한다. 이런 지역활력 제고 사업의 중심에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주민이 있어야 하고,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는 그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젊은 청년들이 둥지를 틀고 살아가야 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본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함으로써 이들 신인류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용기, 이런 용기가 지속될 수 있다면 청년마을은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정책사업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황광훈. (2021). 지역별 청년노동시장 동향 및 일자리질 비교. 한국고용정보원.
- 2     배규식. (2022). 지역소기업/자영업자 혁신을 통한 노동시장의 격차 축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3     간다 세이지. (2020). 마을의 진화: 산골 마을 가미야마에서 만난 미래. 반비.
- 4     박소영. (2019).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공유 유휴공간 민간활용 제고 방안. 국토연구원.
- 5     마강래. (2017). 지방도시 살생부. 개마고원.
- 6     마스다 히로야. (2015).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와이즈베리.

#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은 청년들의 이야기

송윤정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 지역, 대안적 삶의 가능성

‘한달살기’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한달 살기’는 장기 체류 여행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으며,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서 지역 곳곳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지인처럼 지역에서 생활해 보는 여행 방식은 체험소비를 지향하는 청년들의 니즈(needs)와 딱 맞아떨어지며, 새로운 문화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도시에서의 경쟁적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지역의 라이프스타일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되는 듯하다. ‘인서울’을 외치던 청년들이 ‘지역’에 열광하는 다소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지역’의 경험은 청년들에게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또한 그동안 외면받았던 지역의 가치를 보다 가까이에서 발견하게 된 청년들은 체험을 넘어 정주의 의미로서 ‘지역살이’를 쉽게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 ‘살아보기’를 넘어 ‘살아가기’를 위해

최근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서는 청년들에게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으로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충남형 청년캡이어 프로그램, 전남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 등 지역에서 ‘살아보기’는 정책화된 사업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지 청년들은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 자

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에서는 그들의 새로운 시도를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길 희망한다.

한편 체류를 넘어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서는 보다 주체적으로 지역과 관계 맺기를 기획해 나가야 한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찾아갈 때, 비로소 지역과 청년의 상생을 기대할 수 있다.

청년들의 이러한 역할은 지역에서의 몇 가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우선 그들의 신선한 시각으로 유무형의 지역 자원을 새롭게 브랜딩하거나 상품화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흔히 ‘로컬 크리에이터’라 불리는 이들은 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먹거리, 지역축제 등을 콘텐츠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역의 매력을 담은 굿즈를 디자인하여 판매하거나 기존의 지역 특산물을 리브랜딩한 ‘춘천일기’의 사례도 그중 하나이다. 충남 서천의 전통주인 한산 소곡주의 패키지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온라인 판매 경로를 개척한 사례도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한 문경 산양양조장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이주한 청년들은, 지역민들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간파하고 있던 지역 자원의 가치를 외지인의 시각으로 새롭게 발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발견한 지역의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자신들의 이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사한 사례를 늘려 가고 있다. 괴산군의 ‘뭐하농’은 농업의 가치를 홍보하고 재미있는 농촌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공주시의 ‘퍼즐랩’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투어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이다. 강릉 ‘파도살롱’과 목포 ‘괜찮아마을’은 위케이션(Work와 Vacation의 합성어)과 스터디케이션(Study와 Vacation의 합성어)을 지원하면서 지역살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또 다른 청년들의 ‘지역살이’를 견인하는, 지역과 청년의 매개자로서 청년의 역할을 보여준다.

이러한 많은 사례 가운데 지역 자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에 서의 입지를 다진 ‘춘천일기’와 귀농 경험을 양분 삼아 지역으로 청년들을 이끌고 있는 뭐하농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춘천일기: 지역의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다

### 인생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워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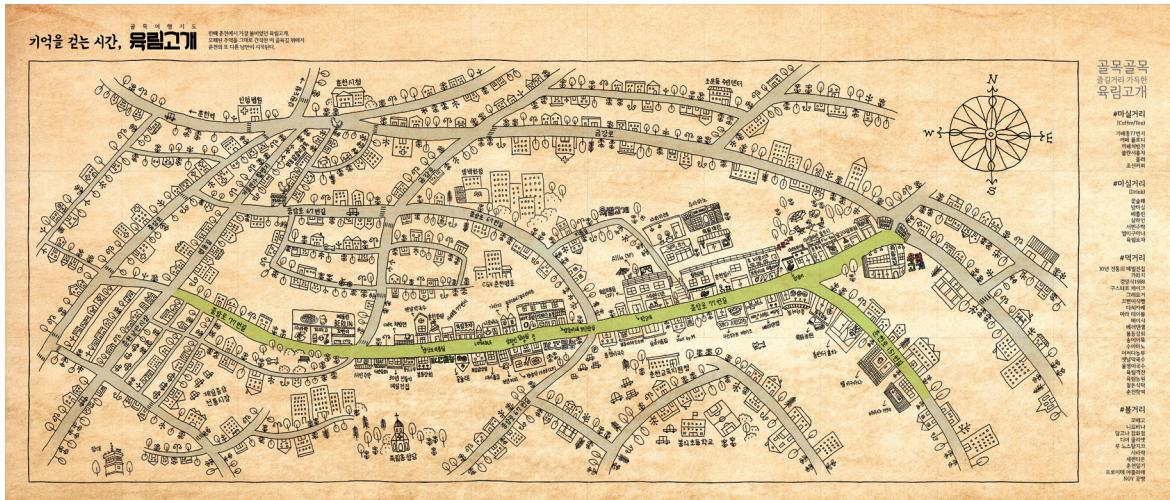
2018년 춘천일기는 춘천 원도심에 위치한 육림고개에 춘천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소품들을 선보이며 로컬상점의 문을 열었다. 그들이 우연한 기회로 춘천을 여행한 지 불과 2년 만의 일이다. 그들은 과거 광고업계에서 쌓은 경력과 디자이너의 전공을 살려 로컬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여행자로서 느꼈던 춘천의 매력을 다른 여행객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춘천에 대한 그들의 애정과 관심은 로컬상점을 통해 여행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까지 전달되었고, 더 나아가 로컬상점은 지역의 다양한 예술가와 교류하는 거점이 되었다. 이렇듯 춘천일기는 ‘콘텐츠(Contents)/디자인(Design)’, ‘리메이크(Remake)’, ‘커뮤니티(Community)’라는 키워드로 춘천을 비롯한 강원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지역예술가와의 협업, 지역문화 기반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 확장

춘천일기가 로컬상점을 넘어 지역문화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 확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지역예술가와의 협업’에서 찾을 수 있다. 춘천일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문화창작의 기회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자, 청년예술가와 로컬 브랜드를 연결하여 새로운 예술 소비의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작가뿐만 아니라 요리사, 지역 주민, 어린이들과 협업하여 춘천을 주제로 한 지도·엽서·마그넷·책을 기획·



춘천일기 로컬상점(좌)과 춘천 여행을 담은 에코백(우)



울림고개 골목지도

제작하는 등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예술가들과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는 체계를 만들어 직간접적으로 지역예술가들의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춘천은 호수와 산을 비롯해 풍부한 ‘볼거리’와 닭갈비·막국수라는 대표적인 ‘먹거리’, 마임축제와 인형극 등의 ‘놀거리’를 가진 데 비해 여행객들이 선뜻 사 가지고 싶은 지역 제품, 즉 ‘담을 거리’가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춘천일기는 이에 주목하였고, 이들이 선보인 아트 컬래버레이션 제품들은 여행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춘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춘천일기의 ‘땡큐베리로컬’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향기 전문 브랜드와 협업해 춘천의 장소를 주제로 한 패브릭퍼퓸을 제작하고 ‘화천의 들기름’, ‘평창의 빵’, ‘홍천의 스파클링와인’ 등 강원도의 로컬브랜드와 연계하여 기존의 제품을 리메이크함으로써 로컬브랜드를 현대화하였다. 이렇듯 춘천일기는 지역민들은 잘 발견하지 못하는 지역의 가치를 이방인의 시각으로 재발견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작의 기회를 지역예술가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생태계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다.



춘천일기스테이(좌)와 로컬아트스테이 전시작품(우)

### 로컬콘텐츠를 담는 그릇, 공간

춘천일기의 다양한 작업들에서 새어 나오는 지역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다. 춘천일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사업으로 조성한 로컬상점에 이어 다양한 작가들과의 창작 공간이 되는 콘텐츠스튜디오, 그리고 최근에는 여행자들과의 접촉을 넓혀 나가기 위한 ‘춘천일기스테이’ 공간을 마련하였다. 지역을 제대로 느끼고 경험케 하기 위해서는 보다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을 깨닫고,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여행객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들이 조성한 스테이 공간에서도 협업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난다. 지역예술가의 그림이 걸린 객실이자 전시관은 춘천의 멋을 소개하며, 로컬 음식점과의 패키지 상품은 여행객들에게 춘천의 맛을 추천한다. 또 직접 제작한지도와 미니 여행가이드북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로 춘천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의 시각으로 해석한 로컬 콘텐츠는 공간을 가득 채우며, 공간을 통해 여행객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과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다.

### 뭐하농: 또 다른 청년의 지역살이를 견인하다

### 농촌의 삶과 문화를 새롭고 즐겁게

뭐하농은 괴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6명의 청년농부들이 모인 농업회사법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책 연구원, 조경 설계가, 국제회의 기획자, 파티셰 등 서로 다른 일을 하던 청년들이 표고버섯농부·반딧불농부·쌀농부·유기농부가 되어 만났다.

보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도시를 떠나 귀농을 선택한 뭐하농의 대표는 귀농귀촌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농사 교육을 수강하는 등 안정적인 농부의 삶을 갖게 되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지속가능한 농촌의 삶을 고민하던 끝에 새로운 농촌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뜻을 함께하는 청년농부들과 힘을 모으게 되었다. 그렇게 2021년, 그들의 이야기와 지역의 농산물로 꾸며진 ‘뭐하농하우스’가 첫발을 내디뎠다. 직접 개발한 음료와 디저트로 구성된 팜(Farm)카페는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말 그대로 ‘핫플’이 되었다.

### 청년들과의 교류, 짧은 농촌 만들기

뭐하농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해 농업의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농업 콘텐츠를 통해 농부의 삶을 소개한다. 행정안전부의 청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그들이 청년농부들의 플랫폼으로서 농부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하농 아카데미’는 그들이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비농부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워크숍과 세미나이다. 이를 비롯한 ‘두달살이 프로그램’과 ‘3박 4일 프로그램’은 농촌에서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농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가르침을 준다.

옥수수 수확하기, 모판 제작하기, 씨앗 파종하기 등 농사짓기를 위해 필요한 기술에서부터 시골에서 꼭 알아야 할 기계 다뤄 보기, 시골 어르신과 안면 트기, 지역 청년과 인연 만들기, 관공서에서 필요한 정보 획득하기 등 도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시골살이’에 제대로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특히 그들이 기획한 ‘강철농부 특화 프로그램’은 내 성격과 맞는 작물

④승현정



뭐하농하우스 내부



### 뭐하농 현장

1. 뭐하농은 함께 살아가는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
1. 뭐하농은 즐거운 사람들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이다.
1. 뭐하농은 농촌문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한다.
1. 뭐하농은 청년농부들의 플랫폼으로서 농부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1. 뭐하농은 사람과 자연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힘을 쓴다.
1. 뭐하농은 지역 아이들이 좋은 문화를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돋는다.
1. 뭐하농은 괴산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고르기, 작물별 재무제표 만들기, 작물별 유통 판로 정보 구하기 등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하지만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실질적인 고민들을 함께하는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예비농부를 꿈꾸는 청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농산물로 술을 빚고자 하는 주조사, 농부를 위한 앱을 개발하는 농부, 농촌의 공간을 기획하는 농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들이 따로 혹은 함께 농촌에서의 새로운 일상을 기획하고 있다. 뭐하농을 중심으로 모인 청년들은 농부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동료이자 친구가 된다. 그리고 각자 농부로서 자립하는 것을 넘어 농촌에서 함께 나이들어 가기 위해 농촌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주체가 된다. 그 결과 그들은 포럼·플리마켓·페스티벌 등 농촌문화에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듯 뭐하농은 시골살이를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며, 함께하는 시골살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 농부의 삶을 실험하는 공간

뭐하농은 막연히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의 로망을 꼼꼼한 교육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실화해 준다. 그들은 팜(Farm)가든과 팜(Farm)카페에 이어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팜(Farm)호텔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예비농부들은 팜가든을 통해 농사를 이해하고, 팜카페를 통해 농산물의 활용을 실험하며, 교육공간에서 창업을 위한 디자인과 콘텐츠 개발을 학습한다. 그리고 팜호텔은 교육생들이 농부의 삶을 시도하기 위한 첫 발판이 되어 줄 것이다. 즉 그들이 기획·조성하는 공간들은 시



워하농하우스 조성 과정(좌)과 외관(우)

골살이를 체험하는 청년들을 늘려나가고 청년들이 시골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 된다. 이렇듯 워하농은 농촌과 청년의 매개자로서 어렵게만 생각되는 농촌살이의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청년, 지역과 함께 살아가기

두 사례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가기’를 위해 지역과 관계 맺는 방법을 보여준다. 춘천일기는 관광객을 위한 로컬 콘텐츠를 제작하며, 워하농은 농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농업 콘텐츠를 개발하며 지역과의 관계 맺기를 시작하였다. 이때 로컬상점과 워하농하우스는 그들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장이자 사람들과의 만남을 형성해 주는 거점이 되었다. 오프라인 공간은 그들이 지역사회 문제와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후 춘천일기는 지역예술가와 연대를 통해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워하농은 농촌의 청년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주체적으로 농촌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들의 지역살이는 지역예술가나 예비 농부와의 ‘함께 살아가기’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결국 ‘청년들의 지역 살아가기’는 곧 ‘지역의 살아가기’를 위한 기회가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1 장민영, 임보영, 송윤정, 윤주선. (2021).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2 최정혜, 강승용 춘천일기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2021.7.13., 2021.8.31.)
- 3 이지현 워하농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2021.9.9.)

#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과 청년이 주도하는 지방창생

임화진  
도쿄도시대학교  
도시생활학부 부교수

## 지방창생과 지역부흥협력대

지방소멸. 합계인구출산율의 저하로 인구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하고 문제를 제시한 ‘마스다 보고서’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마스다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지방창생지방활성화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본의 지역경제 침체를 타파하고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메뉴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반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아베 정권의 경제완화 정책과는 사뭇 다르게 보이는 지방창생은 관광입국과 지역마케팅 등 지역의 경쟁 구도를 도입한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창생은 일본판 지역재생 정책이며, 크게는 데이터 기반 구축과 지역재생 보조금을 통한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재생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내각부가 추진한 지방창생 정책에 앞서 2009년부터 총무성이 실시한 지역부흥협력대는 10년간 5,300명의 청년을 전국의 농어촌과 지방도시로 파견하여 청년들이 지역재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실시한 사업이다. 파견 기간 내내 총무성에서 이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자유롭게 파견지역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각 지역에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고, 지역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인재를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한 정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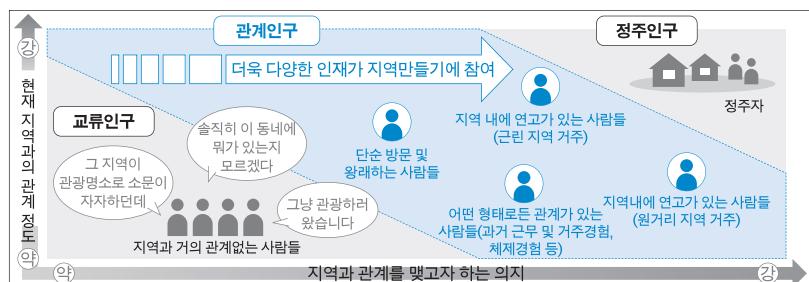
지역부흥협력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지역의 관계인구 증진 정책이다. 관계인구라는 개념은 특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여하는 인구(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2020년 개정판 p.50)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겹업이나 부업을 통해 외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일을 추진하거나 지역축제 또는 이벤트를 함께 운영하고 즐기며 교류를 증진하는 등 여러 형태를 일컫는다.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지역재생을 논할 때 함께 논의되는 지방창생 정책과 지역부흥협력대에 관련된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정리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재생 사업인 지역부흥협력대와 관계인구 도입에 대해 살펴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방창생 정책의 전환기: 관계인구 개념 도입과 코로나19의 영향

관계인구가 주목받게 된 것은 2016년 총무성에서 개최한 ‘앞으로의 이주 및 교류 시설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검토회(これから移住・交流施設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에서였다. 검토회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나 관광으로 찾아온 교류인구가 아닌, 지역 및 지역민들과 다양하게 교류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관계인구에 주목하였고, 여기에서 지역 재생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정책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20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사업의 모델을 만들게 된 것이 본격적인 관계인구 중심 정책의 시작이다.



### 관계인구의 정의와 개념

출처: 総務省, 関係人口ポータルサイト, '関係人口とは'.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about/index.html>  
(검색일: 2022.3.9)

이후 관계인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지방창생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014년 시작한 지방창생은 2019년에 제2기를 맞이하면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으로 장기 비전과 종합전략이 수립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의 반성도 이루어졌는데, 각종 사업 간의 관계성이 희박하고 전체적인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KPI 핵심성과지표로 도쿄 집중을 완화하는 기본목표를 달성한 이후에야 지방의 재정적인 문제 및 정보, 인재 지원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2016년부터 총 1,000억 엔(약 1조 230억 원)이 넘는 지방창생추진 교부금과 연간 600억~900억 엔의 지방창생거점정비교부금은 각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되는 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채택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중앙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며 기존의 국토정책과는 달리 의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주를 장기적인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2015년에 시작된 지방거점강화세제를 활용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고, 교부금은 주로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집중되었다(森川, 2020). 결론적으로 지방창생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인 '2020년 도쿄권과 지방권과의 전출입 초과를 0으로 수렴하도록 한다'는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창생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 중에는 이 정책이 관계인구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여 내생적 발전을 이루고, 일촌일품운동처럼 일부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가져왔다는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였다(月尾嘉男, 2017). 이 밖에 도쿄권 집중을 문제 삼으며 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듯 지방창생 정책은 정책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평가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며 지방창생 전략의 간신히 도래하게 되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지방창생 제2기의 주요 키워드는 미래기술, 인재 및 조직의 육성과 관계인구, 지역경제사회 시스템과 일자리 창출 및 일터 환경, 저출산대책, 전체 세대가 활약하는 마을만들기 등으로 각 분야의 소위원회를 통해 종합전략이 수립되었다. 2기에 들어선 지방창생에서는 여전히 도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으며, 활력 있는 지역

사회를 실현한다는 중장기 목표 아래 지역 외부에서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지역 내 경제순환을 실현하는 지역경제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성장을만 언급한 1기와는 확연히 다른 방침이었다.

이러한 기본방침이 수립된 직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7월에 개최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회의에서는 기본방침의 안을 대폭 수정하게 되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추진을 큰 목표로 도쿄집중 완화 및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관련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는 지방창생임시교부금(3조 엔)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책과 함께 새로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사업들을 시작한다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도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대폭 줄어 들었는데, 이는 지방창생에도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었다.

현재의 지방창생 정책은 DX와 함께 탈탄소사회, 지방창생을 위한 원격근무, 지방 대학의 경쟁력 증진,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관계인구 유입, 기업판 후루사토(고향) 납세, 슈퍼시티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재의 지방창생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도시권보다 지방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생활에 정착된 디지털 기술을 더욱 활용하여 관계인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 지역부흥협력대의 성과와 과제 및 관계인구

지역부흥협력대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지역에 공헌하려는 사업으로, 지방창생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성과 실시체계를 가지며, 추진하는 부처 등도 다르다. 10년간 지역부흥협력대에 참여하고 임기가 만료된 대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sup>\*</sup>를 살펴보면 특징이 잘 나타난다.

참여한 청년들은 남성이 약 60%, 여성이 약 40%였으며 70% 이상이 20대와 30대였다. 임기 만료 후 거주지를 살펴보면 약 60%의 청년들

\*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地域自立応援課(2020)

이 동일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참여 인원 중 약 30%가 창업을 선택하였고 43%가 취업을 선택하였다. 주요 창업업종은 음식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으며, 예술활동이나 아티스트 및 사진영상과 숙박업이 그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은 많지 않았다. 사업을 계승한 청년도 일부 존재하였으나 전체에서 11명뿐이었다.

취업한 청년 중에서는 공적 영역으로 취업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숙박을 포함한 관광업과 농림어업이 뒤를 이었다. 농업에 종사하게 된 청년도 음식점 창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착률에서는 지역 차가 뚜렷하였다. 가장 많은 청년이 파견된 히카이도(北海道, 704명)는 70%가 넘는 정착률을 기록하였으나, 당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오키나와(沖縄)나 규슈(九州) 지역은 약 50%의 정착률을 보였다. 가장 정착률이 높은 지역은 시즈오카(靜岡)현으로 83.3%를 기록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도시권과 가까우면서 기후가 온화하고 관광산업과 1차산업 기반이 확실한 지역에서 청년들의 정착률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지역 관계인구는 2016년부터 2017년에 펴진 개념이다. 이때 관계인구 개념을 처음 소개하는 자료들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 사회에 널리 퍼지면서 총무성의 정책 기조로도 채택되었다. 정주인구를 늘리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평가해야 했던 지자체의 인구 비전에 대해 명확한 대체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총무성의 주장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계인구는 ‘관광 이상, 아주 미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주인구와 교류인구 사이 ‘중간의 인구’를 정의함으로써 필요한 개념을 제시해 주었다. 관계인구가 정책적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정주인구를 보완하는 기능과 질적인 측면에서의 도시·농촌 관계론적인 기능 및 로컬 이노베이션 기능을 커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作野広和, 2019).

\* 高橋博之(2016), 指出一正(2016), 田中輝美(2017) 이상 세 개의 문헌에서 등장한 것이 관계인구 등장과 연관이 있다.

## 관계인구 관련 정책과 관계인구의 기능별 분류

중시하는 관계인구 유형	A. 지역 지원 지향형	B. 슬로 라이프 지향형	C. 지역 공헌 지향형	D. 비거주 지역 유지형	
중점적인 타깃 공간	농산어촌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농산어촌지역	사업 수
중시하는 요소	가치창출	가치창출	생활유지	생활유지	
관계인구 보유하는 기능	가) 정주인구 보완기능			후루사토 워킹 휴리데이 관계안내소	2
	나) 도시·농촌관계론적 기능	도시·농촌 교류사업 후루사토 주민표 제도 후루사토 기금	후루사토 납세 후루사토 응원단	후루사토 서포터스 클럽 응원시민학교 후루사토 지원요원	20
	다) 로컬 이노베이션 기능	시험적 위성 오피스 후루사토 네트워크 응원시민제도 플래티나 국민			8
	사업 수	13	7	10	0
					30

\* 총무성 2018년도 관계인구 창출사업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작성

\*\* 사업명은 채택된 모델사업과 총무성 등의 정책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 수는 2018년도에 채택된 모델사업의 총수를 나타냄

출처: 作野広和(2019, p.18)를 바탕으로 저자 번역

기능별·유형별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인구 정책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나 크게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목적과 메뉴가 존재하나 도농 관계 구축 면과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재생 실현을 위한 일본 사례의 시사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함께 논의되는 지방창생, 지역부흥협력대, 관계인구에 대해 각각의 정책 흐름과 정의 및 의의를 다시 짚어보고 각 정책이 전혀 다른 방법과 관할 부처 등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지역진흥을 목표로 하나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때로는 이들 정책이 혼선을 빚는 일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하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 정책이 주는 시사점으로 예산 및 지원 메뉴의 다양성을 꼽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진흥으로 자발적인 응모를 통해 의욕 있는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인재, 기반 정비, 후루사토 납세와 같은 세금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메뉴로 다층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이들 정책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지역부흥협력대나 다른 측면에서 본래 정주인구를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만큼 정주인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 관계인구라고도 할 수 있다. 정주인구나 교류인구(관광으로 찾아오는 방문객 등)가 아닌, 그 사이의 인구를 정책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현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나 목표를 재설정하여 정책 달성을 올리려고 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우수사례로 볼 수 있는 성공한 지역은 극히 일부로, 이 성공에 정책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그리고 도쿄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의 지방이주와 지역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리얼리티 쇼크(Reality Shock),<sup>\*</sup> 즉 현실과의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결국은 정착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업종료 이후 창업을 통해 지역에 남는 청년들도 계속 경제적인 자립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는 특효약이 없으며, 각 지역에 맞는 현황과 특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계주민과의 협의와 중간지원단체의 적절한 지원을 통한 동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즉 단순한 보조금, 단기적인 인재 파견, 실체 없는 교류사업만 지속해서는 장기적인 지역재생을 실현할 수 없다. 또한 단기적으로 지역활력을 가져오는 인재로만 청년층을 인식해서는 상호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환영받고 청년 또한 독자적인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시도가 시급한 시점이다.

\* 柴崎浩平 외(2018)

참고문헌

- 1 松原宏.(2021).第2期における地方創生に向けた考え方と地域学<sub>学術の動向</sub>.
- 2 日本学術会議地域研究委員会, 人文・経済地理学分科会. (2020). 国土構造の将来像を踏まえた第2期地方創生施策の実施に向けて. <http://www.scj.go.jp/ja/info/kohyo/pdf/kohyo-24-t294-5.pdf>(검색일:2022.3.9.)
- 3 月尾嘉男.(2017).転換日本—地域創成の展望—.東京大学出版会.
- 4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地域自立応援課. (2020). 令和元年度 地域おこし協力隊の定住状況等に係る調査結果.
- 5 高橋博之.(2016).都市と地方をかきませる：食べる通信の奇跡.
- 6 指出一正.(2016).ぼくらは地方で幸せを見つける.
- 7 田中輝美.(2017).関係人口をつくる.
- 8 作野広和. (2019). 人口減少社会における関係人口の意義と可能性. 経済地理学年報, 65, 10-28.
- 9 柴崎浩平, 中塚雅也. (2018). 地域おこし協力隊のリアリティ・ショックと克服過程. 農林業問題研究, 54(2), 25-35. <https://doi.org/10.7310/arfe.54.25>
- 10 総務省, 関係人口ポータルサイト, '関係人口とは'.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about/index.html>(검색일:2022.3.9.)

# 청년의 지방이주와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위한 과제\*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방소멸 위기, 청년을 붙잡는 지역

‘마을이 사라진다’는 경고와 함께 한국의 지방소멸에 대한 분석 자료가 발표된 지 4년이 경과한 202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처음으로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면서 지방소멸 문제를 현실로 마주하게 되었다.<sup>\*\*</sup>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지금,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 늘리기 대책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이상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지난 10년간 전국의 청년인구는 매년 2% 수준의 감소율을 보였고, 특히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감소율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sup>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대부분이 청년층으로 나타나면서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지방도시에서는 지역의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청년 정책 마련에 힘을 쓰고 있다. 23개 시·군 중 82.6%(19곳)가 소멸위기지역인 경상북도는 가장 많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연구센터를 개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년인구 정착을 모색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청년인구 순유입이 발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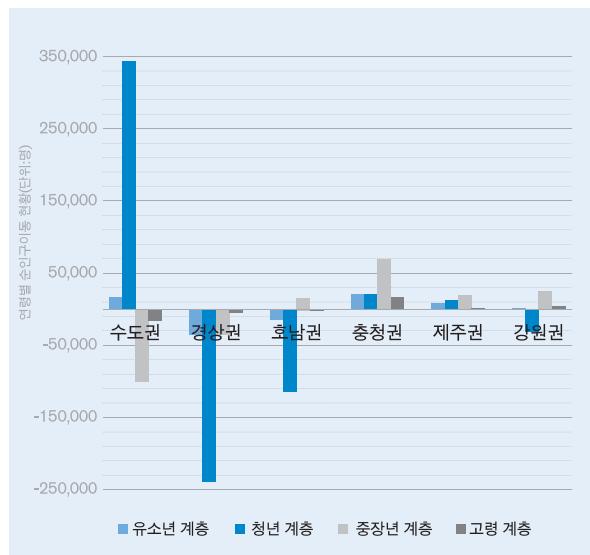
\* 이 글은 장민영 외(2021)의 일부 내용을 발췌·보완하여 작성하였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가 3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4만 명 감소하여 통계 작성(1908년) 이래 최초 자연감소하였고,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추월하였다. 또한 소멸위험지역이 증가하여 228개 시·군·구 중 105개(45%)에 육박하면서 지방소멸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통계청, 2020; 통계청, 2021; 관계부처 합동, 2021).

\*\*\* 통계청의 주민등록연장인구 자료(2011~2020) 분석 결과

는 지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청년정책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상립, 2020).

청년인구 확보를 위한 그간의 청년정책은 출산·양육·귀농 지원금 지급, 창업지원이나 고용 창출 등 주로 소득이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기성세대와 다른 청년세대의 문화와 성향은 이러한 경제적 요인만으로 청년들의 지방 유출을 막을 수 없으며,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엄창옥 외, 2018, pp.50-53; 박진경·김도형, 2020, p.47). 청년세대의 주를 이루는 MZ세대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남과 다른 이색적 경험을 추구하며 사회적 관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소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유로운 생활과 특정 공간에서의 경험을 선호하면서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 싶어 하거나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변화된 인식과 성향을 이해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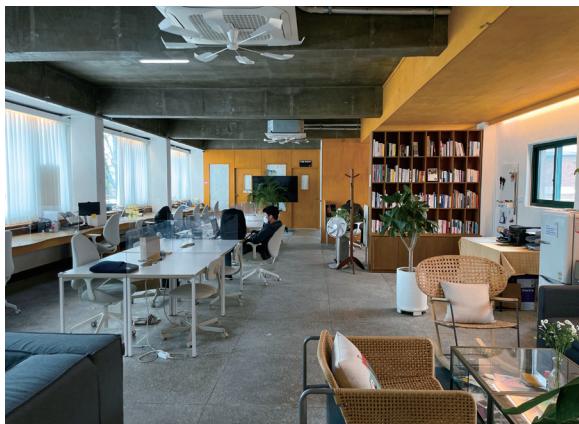


## OO에서 한 달 살아보기

2010년대 초반, 지방이주 관련 정책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여 고령화가 시작되는 시점인 2020년을 대비한 귀농·귀촌마을 조성과 지원체계 마련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 이후에는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도시재생이나 축소도시 전략 마련과 함께 귀농·귀촌 중심의 지방이주 지원정책에서 인구 유입 및 지역정착 지원 전략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주요 대상이 ‘청년’으로 집중되면서 ‘OO에서 한 달 살아보기’나 ‘먼저 살아보기’와 같은 단기 체류 프로그램부터 일자리 경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등 청년들의 지역살이와 지방이주에 대한 각양각색의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다.

청년의 지방이주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과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경상북도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서울시의 ‘넥스트로컬’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에서 창직·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욱이 2022년부터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자될 계획이며,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이 주요 시책에 포함되어 앞으로 청년의 지방이주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uri



청년 대상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 공간  
강원도 강릉의 파도살통(코워킹스페이스, 좌), 전라북도 완주의 로컬베이스캠프(복합공간, 우)

©고산디움힐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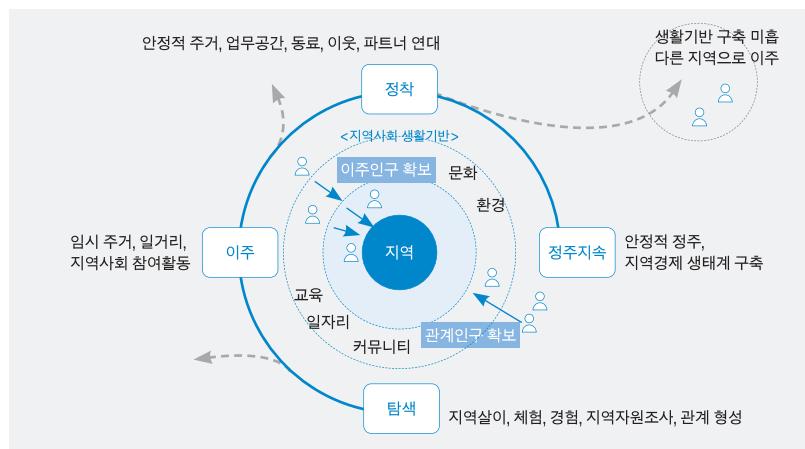


## 지방이주, 라이프스타일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과정

직장이나 가족 문제로 인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이사’라고 한다면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이사를 ‘이주’라 할 수 있다(嵩和雄, 2017, p.5). 지방이주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생활기반을 옮기는 현상으로, 지역에서 주거와 일자리를 구하고 필요한 생활 서비스로의 접근이나 지역사회에서 관계망을 넓혀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김정섭 외, 2018, p.35). 즉 지방이주는 청년의 라이프스타일뿐만 아니라 지역의 변화까지 야기할 수 있다.

청년의 지방이주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매체를 통해 지역정보를 습득하거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탐색단계’부터 시작된다. 다음으로 이주를 결심하고 거처를 옮겨가 지역 활동에 참여하거나 일자리를 마련하는 ‘이주단계’, 이어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활동공간과 소득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 ‘정착단계’, 마지막으로 지역 내 장기적인 활동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정주지속단계’이다. 특히 이주청년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정주지속’의 단계는 지역경제 생태계에서 활동하기 위한 역량이나 지역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탐색-이주-정착-정주지속의 단계에 따라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인프라와 지원정책, 청년공간의 수요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청년 유입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단계별 특성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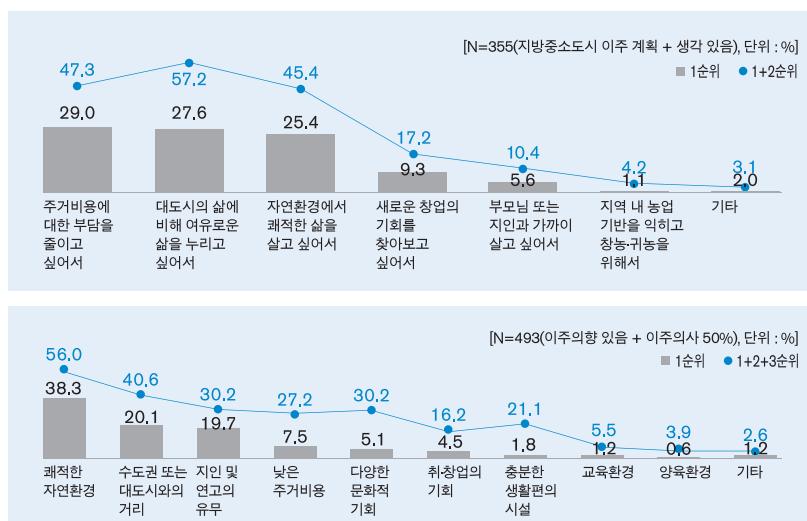


지방이주 단계와 정주지속의 개념  
출처: 장민영 외(2021, p.6) 일부 수정

## 로컬 지향의 청년들이 꿈꾸는 리틀 포레스트

2018년 개봉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고향으로 돌아간 도시청년의 여유로운 시골의 ‘슬로 라이프’를 보여주면서 많은 젊은이에게 지방이주에 대한 로망을 꿈꾸게 하였다. 최근에는 ‘오느른’과 ‘냥숲’ 등 시골 일상을 담아내는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가 트렌드로 주목받을 만큼 한적한 지역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의 지방이주는 지역에 관심이 생기거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어 보고 싶다는 욕구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 세대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리모트워크·워케이션 등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로컬 라이프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및 특·광역시 거주 청년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이주를 고려해 본 청년은 59.2%로 집계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주거비 부담 경감(29.0%)’이 가장 많았으나 ‘여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27.6%)’와 ‘자연환경에서의 쾌적한 삶(25.4%)’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하고 싶은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쾌적한 자연환경’, ‘수도권·대도시와의 거리’, ‘지인 및 연고의 유무’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방이주를 고려한 이유(상), 지방이주 희망지역 선호 이유(하)  
출처: 장민영 외(2021, p.42, p.231)

\* 김난도 외(2021)에서는 러스틱 라이프를 날 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며 도시 생활에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형 라이프스타일이라 하며, 러스틱 라이프를 4단계(1단계 ‘그냥 떠나기’, 2단계 ‘잠시 머무르기’, 3단계 ‘자리 잡기’, 4단계 ‘동지 틀기’)로 구분하였다.

## 청년의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위한 과제

### 정주인구에서 관계인구까지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시급성 때문에 청년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이 급 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주민등록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년 이상 계속 거주자’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지원정책은 정착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기반을 만들어 가려는 청년들에게는 적시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소지 이전이나 거주연수에 대한 조건 없이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군산시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거주연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산 지역 기반의 다양한 로컬 창업을 지원하였던 ‘로컬라이즈 군산(SK E&S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참가팀 상당수는 프로젝트 종료 이후 이 사업을 통해 지역창업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정적인 정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밖에 서울시의 ‘넥스트로컬’이나 충청남도의 ‘충남형 청년캡이어 프로그램’에서는 주소지 이전의 조건 없이 외지 청년들에게 지역자원조사나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 지역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정주인구를 넘어서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것은 지방이주 잠재력을 가진 청년인구를 찾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청년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은 여전하지만 한편으로 로컬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도 잠재되어 있는 것이 현재 청년 세대의 특징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관계인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인구 청년들이 이주와 정착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역과의 거리를 좁히고 지역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내 일자리나 부동산 정보와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주민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이주 컨시어지 기능의 공간으로서 ‘관계안내소’\*\*를 마련하는 것도

\* 언더독스 대표 및 디렉터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1.1.27.)

\*\* 일본에서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접촉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장소를 관계안내소라 하여 빈집·폐교 등을 활용해서 장소를 만들거나 가상공간이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계안내소는 지역 주민과 관계인구가 교류하는 원충지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  
(ライフスタイルの多化と係人口にする懇談, 2021, pp.46-52)



관계안내소 기능을 하고 있는 충남 공주의 반죽동 247과 충북 충주의 세상상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관계안내소는 공공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으나 ‘관계안내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카페나 서점, 코워킹 스페이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장소가 관계안내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공주 감영길에 위치한 ‘반죽동 247’은 지역으로 유턴한 청년이 운영 중인 카페로,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도 하고 마을 안내나 지역살이 프로그램의 운영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충주 판아골의 ‘세상상회’ 역시 이주청년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로, 충주의 로컬 굿즈를 판매하는 로컬 상점이기도 하면서 청년들의 복합문화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들은 이미 지역의 관계안내소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지방이주 단계별 거주공간의 전략적 지원

지방이주 과정에서 ‘거주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며, 외지청년들에게 질 좋은 거주공간에서의 경험은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거주공간은 지방이주 단계에 따라 다양한 수요가 발생한다.

우선 ‘탐색단계’는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구득하고, 지역살이나 청년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는 시기이다. 따라서 ‘게스트하우스’처럼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주거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또 ‘이주단계’는 본격적으로 지역에 이주하여 생활을 하는 시기로,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안정적 거주공간이나 창업공간 등을 물색하는 때이다. 이주초기단계에는 1년 미만 단위로 머무를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이주에서 정착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5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어 ‘정착단계’는 지역정착과 정주 가능성을 확인하고 중장기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시기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을 증빙하기 어려운 청년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적 지원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찍부터 청년정책을 추진해 온 전북 완주군에서는 ‘청년, 완주살 이(게스트하우스 및 프로그램 제공)’, ‘청년쉐어하우스’, ‘청년행복주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주거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의 이주 초기 주거부담은 덜어줘 지역 이주 결심과 정착 과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청년층의 정주촉진과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사업이 지방도시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입주하지만 5년 후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양도형 정주촉진주택이나 20년을 계속 거주하면 토지와 주택을 무상 양도하는 임대단독주택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방이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정주지속으로 이어지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비용경감이나 주거 취약청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도시 주거 지원정책은 지방이주 단계별 특성, 청년과 지역사회의 관계 맺기, 방문청년이나 관계인구 청년을 위한 주거환경 질적 개선을 바탕으로 거주공간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청년 수요를 고려한 거주공간의 다양성 확보와 품질 제고는 지방도시 청년정책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 전북 완주군으로 이주한 청년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1.5.27.)

\*\* 一般財團法人 移住・交流推進機構. <https://www.iju-join.jp/> 참조

청년, 완주살이	청년쉐어하우스	청년행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주 경험을 희망하는 타 시 · 군 청년 대상</li> <li>▪ 게스트하우스 숙박비 80% 지원, 원주 텁방 및 청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주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39세 이하 청년</li> <li>▪ 주거취약계층 청년에게 월 5만 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주거 지원(최대 3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주군에 거주 중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li> <li>▪ 임대료 시세 대비 60~80%, 최대 6년의 입주기간</li> </ul>

전북 원주군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정책

출처: 원주청년정책 청년메카원주. <https://youth.wanju.go.kr/index.wanju>

### 커뮤니티, 일자리, 청년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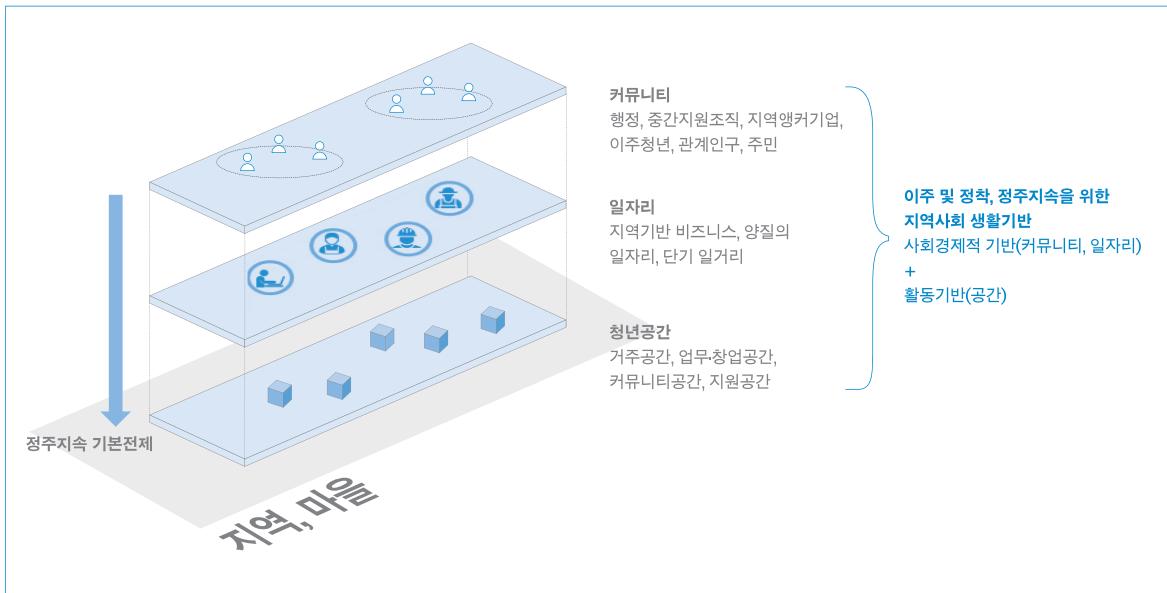
충남 서천과 공주, 전북 원주, 전남 목포 등 전국 도처에서 청년들의 지역 살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프로그램의 참가 청년들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 일자리 및 일거리 등 사회경제적 기반 마련과 함께 청년들의 활동기반이 되는 인프라로서 다양한 기능의 청년 공간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지방이주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이주절차 안내, 지원정책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등의 중간지원기능과 함께 지역에 먼저 정착한 선배 그룹이나 지역생활 멘토가 되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과의 교류,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형성이 안정적인 지역살이와 정주지속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이주초기 머물 수 있는 임시주거나 일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커뮤니티 공간, 실험·팝업공간, 중간지원 센터 등 지방이주 단계별 특성과 청년수요에 대응한 청년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기획한 프로젝트 전시나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팝업공간(충남 공주의 크림, 마주안)

©auri



####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지역사회 생활기반 구축 방향

출처: 장민영 외(2021, p.8) 일부 수정

특히 지역에서의 일 경험과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공간 또는 팝업공간은 지역살이 중인 청년들이나 이제 막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공간이다. 충남 공주에는 유휴공간을 탈바꿈하여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 전시나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팝업공간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다. 청년들은 이 공간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지역살이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내 소비 특성이나 수요를 파악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지역의 잠재자원인 청년주체의 발굴과 성장지원

청년의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위해서는 결국 지역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청년공간 조성,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 청년 거주공간 마련을 위한 사회주택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서 지역의 앵커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플레이어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인재 발굴과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때 소수의 스타 플레이어가 부각되는 데 그치지



지방이주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 속초 소호259(게스트하우스)와 고구마쌀롱(여행자 컨시어지), 강릉 소집(갤러리)

© 2021

않고 지역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청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팀 빌딩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강릉·속초·춘천 일대에서는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원지역은 청년층 유출이 계속되고 청년인구 비율도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주청년들의 로컬 기반 활동은 지역 발전의 잠재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강원지역의 대표적인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로는 강릉의 더웨이브컴퍼니(코워킹스페이스 운영), 갤러리 소집을 운영 중인 U턴 청년, 속초의 소호259(게스트하우스, 여행자 컨시어지 운영), 춘천의 춘천일기(로컬상점,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이 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정착한 청년들은 구도심 내 빈집이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개성 있는 창업공간을 조성하기도 하고, 지역청년이나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 맺음말

청년들의 지방이주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소멸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이주 및 정착과

정은 구직 과정이나 거주지 이전이라는 선택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의 정책 수단들을 통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김정섭 외, 2018, p.64).

지방도시의 인구 수, 도농복합시 또는 군 지역 여부 등 도시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청년들의 이주 목적과 생활패턴, 지역 내 필요한 공간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지역으로 이주한 형태(UIJ된 등)에 따라 지역 사회 관계망 구축이나 일자리 창출도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즉 청년의 지방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책은 지역 맞춤형의 세부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으로서 지방이주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방도시의 청년 유입책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지방이주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말고,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응원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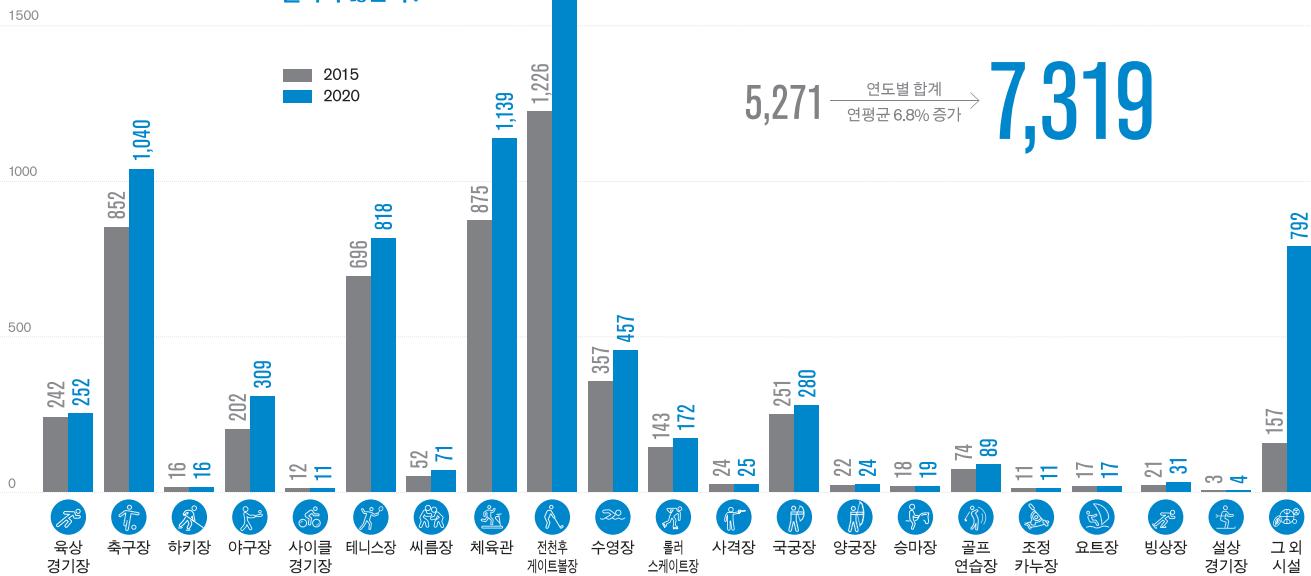
#### 참고문헌

- 1 관계부처 합동. (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 2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이향은, 이준영, 이수진, 서유현, 권정윤, 한다혜, 이해원. (2021). 트렌드 코리아 2022. 미래의창.
- 3 김정섭, 신소희, 구본경. (2018).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청년허브.
- 4 박진경, 김도형. (2020). 인구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 5 엄창우, 노광우, 박상우, 허구치 요시오, 오오타 소우이치, 이영준. (2018). 청년의 귀환. 박영사.
- 6 이상립. (2020).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7 장민영, 임보영, 송윤정, 윤주선. (2021).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8 통계청. (2020).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6월 29일 보도자료.
- 9 통계청. (2021).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잡정 결과. 2월 24일 보도자료.
- 10 ライフスタイルの多様化と関係人口に関する懇談会. (2021). 最終とりまとめ：関係人口の拡大・深化と地域づくり.
- 11 嵩和雄. (2017). 地方移住の現代的意義：移住相談から見る田園回帰.NPOふるさと回帰支援センター.
- 12 완주청년정책 청년메카완주. <https://youth.wanju.go.kr/index.wanju>
- 13 一般財団法人 移住・交流推進機構. <https://www.iju-jp.org/>

# 내가 사는 지역에는 공공운동시설이 얼마나 많을까?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매년 공공건축을 통계자료집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을 발간한다. 이 통계자료집은 공공건축을 일반현황, 계약현황, 인구로 보는 공공건축, 테마통계(특정 용도를 대상으로 한 현황, 서비스 인구 대비 현황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20>에서는 테마통계 대상으로 운동시설<sup>\*</sup>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통계자료실에서는 운동시설의 현황과 지자체별 분포, 인구 대비 분포 현황을 간추려 소개한다.

## Q 우리나라 운동시설, 얼마나 많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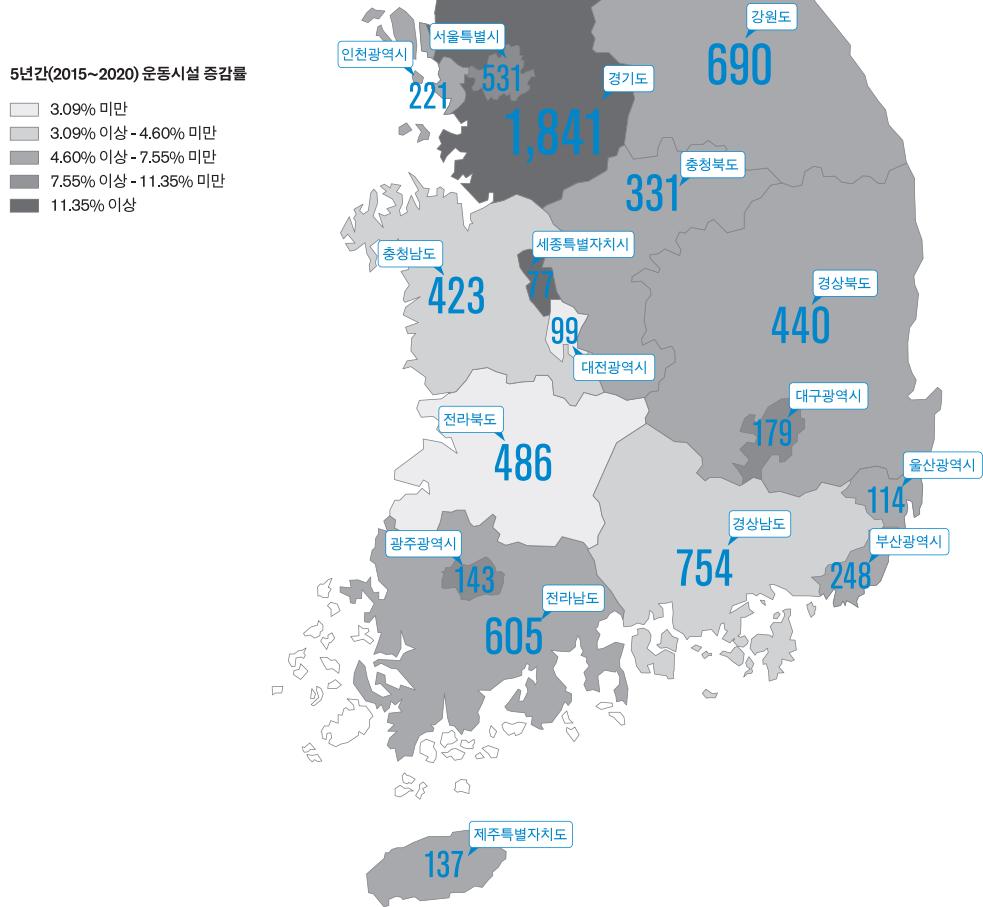


## A 지난 5년간 운동시설은 꾸준히(연평균 6.8%) 증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정보를 활용하여 지난 5년간 운동(체육)시설의 개소 수를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연평균 6.8%)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는 그 외 시설(구분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 38.2% 증가하였고, 야구장(8.9%), 빙상장(8.1%) 순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사이클경기장이 연평균 1.7% 감소하였다.

\* 통계자료실에서 살펴볼 운동시설이란 「체육시설법」 제2장 공공체육시설 중 간이운동장은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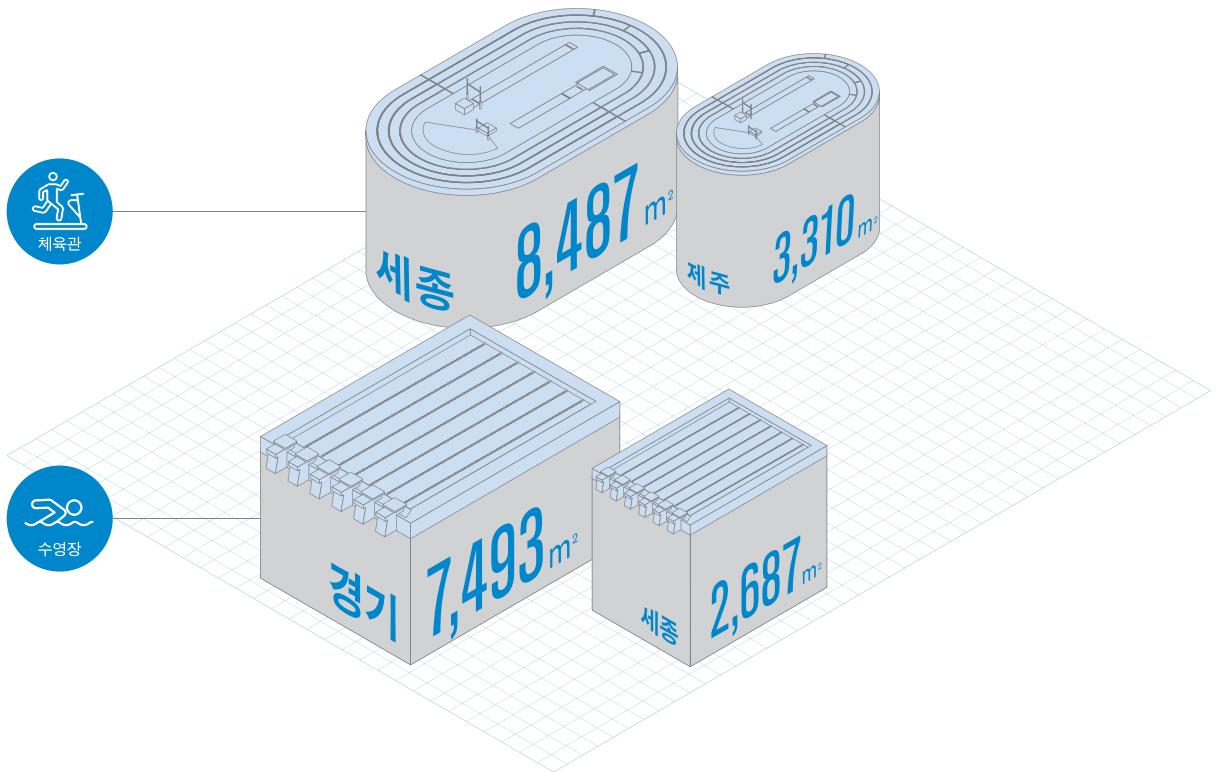
## Q 어느 지역에 운동시설이 많은가?



## A 전국 운동시설의 35.4%가 수도권에 위치

2020년 기준 운동시설 3개소 중 1개소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특별자치시(19.2%), 그 다음이 경기도(11.9%), 대구광역시(9.8%) 순이었으며, 증가율 상위 5개 시·도 중 4개가 특·광역시(세종, 대구, 광주,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시설 유형 중에서 설상경기장은 강원에만 있고, 조정카누장은 특·광역시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Q 어느 지역 체육관과 수영장의 면적이 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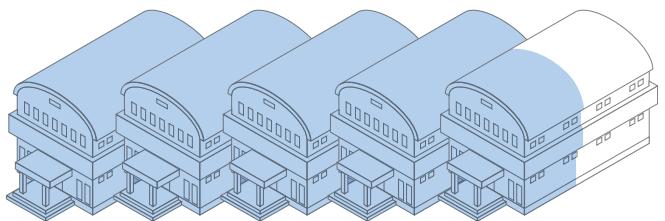
A 체육관은 세종이 가장 크고 제주가 가장 작으며, 수영장은 경기가 가장 크고 세종이 가장 작음

전국 운동시설의 유형별 평균 연면적은 빙상장(1만 3,569m<sup>2</sup>), 육상경기장(1만 602m<sup>2</sup>), 사이클경기장(9,811m<sup>2</sup>), 야구장(8,398m<sup>2</sup>)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체육관의 평균 연면적은 세종(8,487m<sup>2</sup>)이 가장 크고 제주(3,310m<sup>2</sup>)가 가장 작으며, 수영장은 경기(7,493m<sup>2</sup>)가 가장 크고 세종(2,687m<sup>2</sup>)이 가장 작았다. 운동시설 유형 21개 가운데 6개 유형(씨름장, 승마장, 조정카누장, 빙상장, 설상경기장, 그 외 시설)은 도 지역이 크며, 나머지는 특·광역시가 컸다.

Q 인구 대비 운동시설이 가장 많거나 적은 지역은 어디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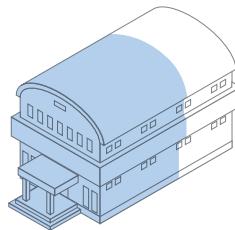


1만 명  
4.407 개소



6.7 배

1만 명  
0.663 개소



A 2020년 인구 대비 운동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인구 1만 명당 운동시설은 1.02개소(2015)에서 1.41개소(2020)로 증가하였다. 2020년 인구 대비 운동시설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4.407개소/1만 명)이며, 가장 적은 곳은 대전광역시(0.663개소/1만 명)로 나타났다. 인구 1만 명당 운동시설 수는 도 지역이 특·광역시에 비해 2.5배, 강원도는 대전광역시에 비해 6.7배 많았다.

건축과 도시공간

—

Vol. 45

Spring 2022

# 건축 도시 동향

Trend Report

## 2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 각국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사업과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과 육아세대의 주거지원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성공적이었던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에 힘입어 2026년까지 추진할 새로운 자전거 계획을 추진하고 관련 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동향으로는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살펴본다. 도입 배경과 필요성,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됨에 따라 도시가 어떻게 변화할지 짚어본다.

개선된 자전거 도로의 모습



Schwedterstrasse 주거 건물



부산시의 2021년 도시농업 관련 행사 모습



해외

육아 지원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일본의 새로운 주택지원사업

058

파리의 벨로폴리탄

사업 성과와

새로운 자전거 계획

063

국내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068

**육아 지원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일본의 새로운 주택지원사업** | 어린이 미래 주택지원사업은 육아 세대나 신혼부부가 높은 에너지 성능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하거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육아 세대나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탈탄소화에 이바지하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주택 물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파리의 벨로폴리탄 사업 성과와 새로운 자전거 계획** |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전거 개발을 지원하고 기속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파리시는 새로운 자전거 계획(Plan Vélo 2021-2026)을 발표하였다. 파리를 100%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20년 만료된 첫 번째 계획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다.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차량 우선 통행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차량을 전면 통제할 수 있는 도로에만 적용 가능한 보행자전용 도로에 비해 더욱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함께 가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 육아 지원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일본의 새로운 주택지원사업

권용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조교수

최근 일본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및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 개척’을 상정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2021년 10월 15일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본부’가 설치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는 재정에 의존한 ‘성장에서 분배, 분배가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제 구축의 필수적 요소로서 ‘사람’과 그에 대한 투자 강화가 강조되었다.

한편 일본은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탈탄소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축 분야에서도 에너지 절약화나 탈탄소화가 최우선 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예컨대 일본 국토교통성 등은 주택·건축 분야와 관련된 탄소중립 대책이나 향후 일정을 정리한 보고서 ‘탈탄소 사회를 목표한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대책 등 추진 방안(脱炭素社会に向けた住宅・建築物における省エネ対策などのあり方・進め方)’을 발표하고 \*\* 주택·건축 분야의 에너지 절약 성능 강화, 에너지 전환, 흡수원 대책 강화(목재 이용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분배를 뒷받침하는 ‘성장’과 다음 성장으로 이어지는 ‘분배’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

\*\* 炭素社会に向けた住宅・建築物の省エネ対策等のあり方検討会(2021.8.)

\*\*\* 예컨대 최근 2025년까지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의무 대상으로 정하는 동시에 5,000만 호를 넘는 기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강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용자를 해주는 제도를 창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목조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 규제나 방화규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의 목조 제료 에너지 주택 취득 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론 감세나 리모델링 세제 확충·연장을 검토하고 2022년 내 세제 개정에 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일본에서는 육아 세대 등의 주거비 지원 강화\*와 주택 분야의 탈탄소화 강력 추진을 염두에 두고, 2021년 11월 26일에 의회를 통과한 2021년 보정예산안에 ‘어린이 미래 주택지원사업’을 반영하였다.

### 어린이 미래 주택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어린이 미래 주택지원사업은 육아 지원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의 관점에서 육아 세대나 신혼부부가 높은 에너지 성능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하거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육아 세대나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탈탄소화에 이바지하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주택 물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보조대상자

이 사업은 ①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육아 세대나 부부 중 어느 한쪽이 3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주문주택을 짓거나 분양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와 ② 세대를 묻지 않고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는 사업의 취지로부터 별도의 세대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다.

①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세대가 직접 거주하는 것 등 \*\*이 요구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i) 제로에너지하우스(Net Zero Energy House: ZEH) \*\*\*이다. 즉 강화외피기준 \*\*\*\*에 적합하고, 적어도 재생가능에너지 등을 제외한 1차 에너지 소비량을 20% 이상 삭감시키는 성능을 가진 주택이 대상이 된다. (ii) 높은 에너지 절약 성능 등을 가진 주택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인정장기우량

주택, 인정저탄소주택, 성능향상계획인정주택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iii) 일정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가진 주택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품질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본주택성능표시기준(日本住宅性能表示基準)에서 정하는 단열등(等)성능등급 4, 1차 에너지 소비량 등급 4의 성능을 가진 주택이 대상이다.

②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의 (i)~(iii) 중 어느 하나의 공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그것을 전제로 (iv)~(viii)의 공사도 대상이 된다. (i) 개구부 단열 개수이다. 이는 개수 후 개구부의 열관류율이 일정 기준 이하가 되도록 창문 교환, 내창 설치, 외창 교체, 문교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열 개수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등록된 제품을 사용한 공사만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 (ii) 외벽,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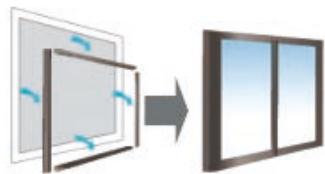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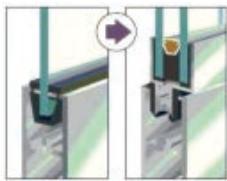
\* 일본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이 강조되는 가운데 주택·건축 분야의 지원 강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육아 세대나 고령자 등 주택 확보에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도도부현 등에 등록한 안전망 주택(セーフティネット住宅)에 입주하는 경우 집세 지원 대상을 확충하였다. 또한 육아 세대가 부모 근처 UR 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경우에 집세를 줄여준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이 곤란해진 세대의 사람들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월세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월세 부담을 줄여준다.

\*\* 해당 세대가 직접 거주하는 것 외에, 토사재해방지법에 따른 토사재해특별경계구역 밖에 입지할 것, 미완성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의 주택 가운데 사람의 거주용으로 제공된 적이 없을 것, 바닥 면적이 50m<sup>2</sup> 이상일 것,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일정 정도 이상의 공사 완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

\*\*\*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제3자 평가기관이 평가·인정한 BELS(Building-Housing Energy-efficiency Labeling System) 평가서에 기재되는 ‘ZEH’, ‘ZEH-M’, ‘ZEH-Oriented’, ‘ZEH-M Oriented’, ‘ZEH Ready’, ‘ZEH-M Ready’, ‘Nearly ZEH’, ‘Nearly ZEH-M’이 포함된다. ‘제로 에너지 상당’은 강화외피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는 전국의 지역별로 요구되는 단열성능 지표, 에너지 절약 기준을 만족하면서 UA치(외피 평균 열관류율)를 강화한 기준이다. 즉 에너지 절약 기준에서 정한 UA치보다도 높은 단열성능이 요구되는 것이 강화외피기준이다.

\*\*\*\*\* 개구부 단열 개수는 지역에 따라 대상이 되는 제품이 다르므로, 공사 전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구부 단열 개수 예시

출처: 国土交通省(2022.1.31.)

천장 또는 바닥 단열 개수이다. 외벽, 지붕, 천장 또는 바닥 부위별로 일정 사용량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는 단열 개수만이 대상이 된다. (iii) 에코주택 설비 설치이다. 여기서 에코주택은 태양열 이용 시스템, 절수형 화장실, 고단열 육조, 고효율 급탕기, 절수 수도꼭지 등을 말한다. (iv) 육아 대용 개수이다. 가사 부담 경감에 이바지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방 범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개구부 개수 공사, 생활 소음에 대한 배려에 이바지하는 개구부 개수 공사, 주방 세트 교환을 포함한 대면화(対面化) 개수 공사 등이 해당한다. (v) 종전의 내진 기준에 따라 건축된 주택 \*\*을 현행 내진 기준(건축기준법 시행령 제3장 및 제5장의 4에서 규정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하는 공사이다. (vi) 난간 설치, 단차 해소, 복도 폭 확장, 흄엘리베이터 설치, 충격완화 바닥 설치 등 배리어프리 개수이다. \*\*\* (vii) 공기 청정 기능이나 환기 기능이 있는 에어컨 설치이다. (viii) 리모델링 하자 보험 등의 가입이다.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하는 주택하자담보책임보험법인이 취급하는 리모델링 하자 보험 및 대규모수선공사하자보험에의 가입이 대상이 된다.

## 지원 금액

지원 금액 등은 기본적으로 ① 주문주택 신축·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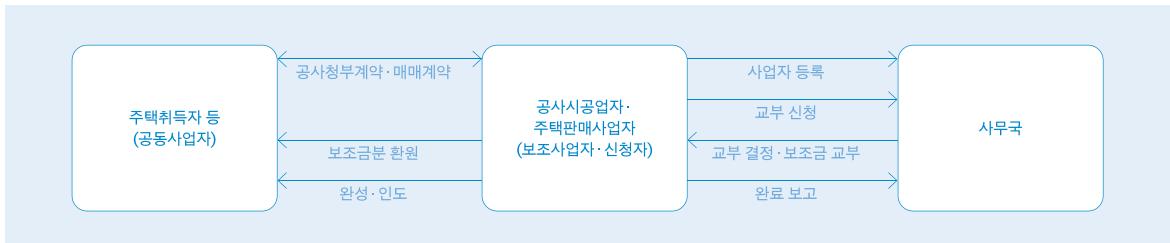
주택 구매인지, ② 리모델링인지에 따라 그 상한이 달리 적용된다. 또한 ①과 ②의 경우도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보조액의 상한이 달라진다. 예컨대 ①에서는 ZEH, Nearly ZEH, ZEH Ready 또는 ZEH Oriented의 경우 100만 엔, 높은 에너지 절약 성능 등을 가진 주택의 경우 80만 엔, 일정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가진 주택의 경우 60만 엔을 보조액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한편 ②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보조액 등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 육아 세대·신혼부부 세대인지, (ii) (i) 이외의 세대인지에 따라 상한을 달리 정하고 있다. 또한, (iii) 기존 주택을 구매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인지, (iv) (iii) 이외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서도 상한이 다르다. (i)(iii) 은 60만 엔, (i)(iv)는 45만 엔, (ii)(iii)은 45만 엔, (ii)(iv)는 30만 엔이 보조액 상한이다. 이러한 구분은 육아 세대나 신혼부부 세대의 주택 문제를 배려한다는 측면

\* 빌트인 식기세척기, 청소하기 쉬운 레인지후드, 욕실 건조기, 택배 박스 등이 해당한다.

\*\*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주택으로 현행 내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 일본에서는 배리어프리 개수 촉진 세제 등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미래 주택지원사업 신청 과정

출처 : 国土交通省(2022.1.31.)

에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②에서는 대상 공사 내용에 따라서도 보조액의 상한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제도 목적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된다.

### 사업 전체의 흐름

이 사업은 주택을 취득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택판매사업자나 공사시공업자가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주택취득자 등은 공동사업자로서 신청 절차에 협력만 하면 된다. 즉 주택판매사업자나 공사시공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사무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해당 보조금 만큼의 금전을 주택취득자 등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에서 진행하면 된다.

기본적인 신청 흐름은 주문주택 신축인지, 분양주택 구매인지, 리모델링인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주문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① 착공 전에 시공업자가 기초적 정보를 사무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 정보 등록은 보조금 교부와 관계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 시점에 주택 물건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따라서 시공업자는 정보 등록 후에 건축주와 공사청부계약과 함께 보조사업 공동실시에 관한 규약\*\*\*을 체결하면 된다. ② 건축공사 착공 후에는 보

조금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예약 신청은 임의이며, \*\*\*\* 보조금 이상의 공사를 완료한 후 \*\*\*\*\*에 사무국에 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③ 시공업자의 교부 신청이 있으면, 사무국이 조사를 실시한 후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보조금은 공사 대금에 충당되고, 그 금액만큼 건축주에게 금전이 환원된다. ④ 보조금을 받은 시공업자는 주택 완성 후에 사무국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로써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분양주택 구매의 경우에는 주문주

\* 주택을 구매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와 달리 매매 관련 세금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어느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보조액을 달리 지급할 경우 특정 지역의 인구 쏠림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수도 있다.

\*\* 기초적 정보 등록 사항은 사업자 정보(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 등), 사업내용(실시예정인 보조사업 내용, 수주 가능 지역), 사업면허 등이다.

\*\*\* 원칙적으로 공사청부계약이나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보조 사업 실시나 보조금 수취에 관계된 공동사업실시규약을 체결하고, 교부 신청 시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규약의 주된 내용은 필요한 증명서류 제출 등 협력하여 보조사업을 실시할 것, 보조금 수취방법(공사대금 등에 충당 또는 보조사업자가 일단 수령한 후에 주택취득자 등에게 인도), 보조사업실시상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 등이다.

\*\*\*\* 예약 신청은 임의사항이다. 다만 이러한 예약 신청을 통해 사무국이 보조금 규모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예산상의 한계를 고려해 사업 기간 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의 대처를 할 수 있다.

\*\*\*\*\* 주문주택 신축의 경우 공사 전체를 완료하기 전일지라도 보조금 이상의 공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건축사가 확인을 한 후, 공사 상황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택 신축과 거의 같은 절차가 요구되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보조금 이상의 공사를 완료한 후가 아니라 모든 공사 완료 후에 교부 신청을 해야 하며, 그에 따라 위 ④의 절차는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다.

### 국내에 던지는 시사점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열쇠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역동성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인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모든 분야에서 확대하고 있다. 사람의 삶을 뒷받침하는 주택·건축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고,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화나 탈탄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강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생 부문의 활동 무대인 주택·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화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대처가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사람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과감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다. 어린이 미래주택지원사업 역시 그 결과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주요국에 견주어 혐난할 것으로 전망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육아 세대 지원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나 탄소중립 실현을 염두에 둔 일본의 과감한 제도 도입 자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 참고문헌

- 1 新しい資本主義実現会議. (2021.11.8.) 緊急提言-未来を切り拓く「新しい資本主義」とその起動に向けて-.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pdf/kinkyuteigen\\_honbun\\_set.pdf](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pdf/kinkyuteigen_honbun_set.pdf)
- 2 国土交通省. (2022.1.31.) こどもみらい住宅支援事業について.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content/001447800.pdf>
- 3 脱炭素社会に向けた住宅・建築物の省エネ対策等のあり方検討会. (2021.8.) 脱炭素社会に向けた住宅・建築物における省エネ対策等のあり方・進め方.
- 4 こどもみらい住宅支援事業 공식 홈페이지. <https://kodomo-mirai.mlit.go.jp/>.

## 파리의 벨로폴리탄 사업 성과와 새로운 자전거 계획

유무종

프랑스 건축사,  
도시설계사

2019년 파리시의 지하철노선을 그대로 지상으로 옮겨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벨로폴리탄(Vélopolitain) 정책을 시행한 이후 2년 동안 도시에서 자전거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자전거 도로 사용량은 47%, 2020년에서 2021년에는 22%나 늘었다. 또한 특정 축에서는 최대 60%까지 증가하였다. 지하철 파업이 겹치고 건강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정책을 따르는 ‘추종자들(출퇴근 위주의 직장인, 대학생)’이 생겨났고, 하루 약 2만 5,000명의 자전거 이용자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전거 개발을 지원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파리시는 새로운 자전거 계획(Plan Vélo 2021-2026)을 발표하였다. 파리를 100%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20년 만료된 첫 번째 계획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와 주차공간을 개조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존 벨로폴리탄 정책의 성과와 함께 향후 새로운 파리시 자전거 계획의 방향을 살펴보자 한다. 벨로폴리탄 정책은 새로운 인프라 개발과 더불어 안전하고 충분한 자전거 주차공간의 확보, 그리고 친환경 자전거 시스템의 강화가 계획의 주된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정책 시행 이후 파리시에는 어떤 도로와 자전거 편의시설이 갖추어지고 있으며,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 자전거 고속화도로 REV의 확충

지난번 계획에서 처음 선을 보인 자전거 고속화도로 (Réseau Express Vélo: REV)는 기존의 협소하고 불편한 자전거 길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넉넉한 도로폭

을 확보하고, 차선을 따라 일방으로 진행되던 방향을 쌍방으로 교체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면서 자동차 이용자와의 도로 위 공존을 도모하였다. REV는 센강의 비탈길을 축으로 동-서, 남-북으로 확장되었다. 초기(2015~2020년)에 1억 5,000만 유로(약 200억 원)를 투자하여 설치한 REV의 사용이 크게 늘면서 새로운 계획에서는 REV 확충에 1억 유로를 더 늘린 2억 5,000만 유로(약 3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파리는 1,000km 이상의 자전거 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300km 이상의 REV 와 코로나19로 인한 1차 도시 폐쇄 기간 중 만들어진 52km의 REV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번에 180km의 새로운 REV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새롭게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첫 5개의 도로 건설과 2030년까지 나머지 절반의 두 단계에 걸쳐 계획된다.

우선 파리의 자전거 인프라는 기존에 개발된 자전거 도로의 축과 그랑파리에 맞추어 새롭게 넓혀질 도시의 축을 기반으로 다음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 파리 자전거 인프라 조성 조건

- 일드 프랑스(Ile-de-France) 지역의 RER-Vélo와 파리 대도시의 벨로폴리탄(Véropolitain)의 통합, 파리 자전거 도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도로 간의 연속성 확보
- 파리 벨로폴리탄 네트워크는 지역 자전거 고속도로(RER-Vélo) 노선을 통합하기 위해 파리 외곽지역을 대도시화로 확장하고 있는 그랑파리 프로젝트와 함께 통합 진행
- 기본 1km가 넘는 자전거 이용에서 쾌적한 밀도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 네트워크 구축 (이는 지역 간 여행에 특히 유용하도록 조성)
- 지역 서비스 네트워크는 자전거 고속도로 여행이 수도의 모든 거리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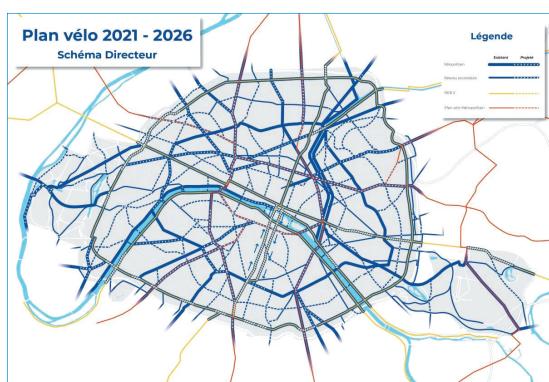
또한 모든 도로는 쌍방향 사이클링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파리 도심과 각 지역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현재 60km가 조성 완료되었고, 450km를 추가로 신설한다.

#### 편리한 교통 및 주차

지금까지는 자동차 위주의 동선이 우선시되었고 늘 규칙적으로 작동하는 신호등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신호등의 특정 조정 시스템인 ‘녹색파도(un système d'ondes vertes)’를 도입하여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동선을 우선시할 예정이다.

파리시에서 2020년에 6,631건의 자전거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해 7% 증가한 수치이다. 자전거 이용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81%는 ‘도난’을 이유로 꺾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파리를 100% 자전거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현재 파리에는 야외에 6만 개의 아치형 자전거 주차대가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는 단순한 형태의 아치형에서 벗어나 자전거의 형태를 고려한 주차대



2021-2026 파리시 자전거 도로 확장 계획도

출처: <https://www.paris.fr/pages/un-nouveau-plan-velo-pour-une-ville-100-cyclable>

\* 사이클 개발 프로젝트는 경찰 본부, RATP, Île-de-France Mobilités, 공동 사이클링 위원회, 차리 사이클링 협회 및 상업 협회 등 38개의 협회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의의 주체다.



개선된 자전거 도로의 모습

넓어진 도로 폭과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여 확실하게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신설된 신호등과 표지판

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는 화물형 주차공간과는 달리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파리시는 주차대를 설치할 적합한 공간을 찾기 위해 대로(boulevard)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으며, 주로 공원 앞이나 복합 운송 허브 및 횡단보도 상류에서 우선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첫 번째는 화물형 자전거 보호소이다. 이 화물형 자전거 주차공간은 지하철 입구나 자동차 주차장에 설치되었다. 각 보호소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고

하나의 보호소마다 6대의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으며, 바퀴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펌프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 주로 기계식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 및 베이비 캐리어 시트가 장착된 자전거를 위한 주차공간이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운받은 코드를 사용하여 주차공간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사용료는 연간 75유로(약 10만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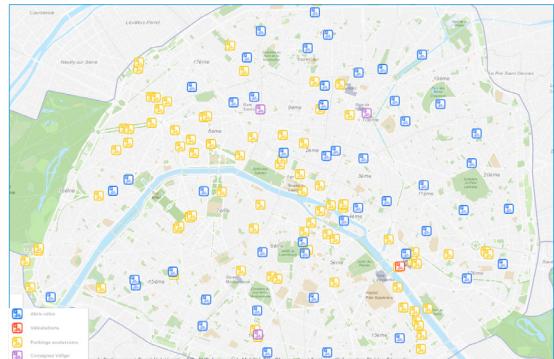
두 번째는 복합 허브형 자전거 주차장이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코드로 주차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보안을 확보하고 일반 자전거, 전기 자전거, 화물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주차 공간에 탈착식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현재 파리 리옹역(Gare de Lyon)과 몽파르나스역(Montparnasse)에 설치되어 있다. 리옹역에는 전기자전거 32대를 포함한 198대의 자전거를, 몽파르나스역에는 375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으며 연중무휴 순찰을 통한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 후 발급되는 배지와 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한 뒤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사용자를 위한 176개의 사물함이 있고, 그중 전기가 공급되는 56개의 사물함을 통해 배터리 또는 전기장치를 충전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두 장소 모두 연간 75유로이다.

세 번째는 자동차 주차장 옆에 마련된 자전거 주차장이다. 400개 자동차 주차장에 총 3,000개 이상의 자전거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가입자에게는 자신만의 주차공간이 보장되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접근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즉시 코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프랑스국영철도(SNCF)와 파리교통공사(RATP), 일드프랑스교통청(Île-de-France Mobilité)이 협력하여 설치하는 자전거 보안 보관대(Véligo Station)가 있다. 파리시에 약 100개가 설치되어 있는 이 보관대는 파리시 대중교통 결제카드(NAVIGO)로 접근이 가능하며, 비용은 10~30유로



파리시에 설치 중인 야외 자전거 주차대



(약 1만 3,000~4만 2,000원)이다. 현재 몽파르나스, 로사파크(Rosa Parks), 동역(Gare de l'Est) 등 세 군데 기차역에 설치되어 있다.

### 자전거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거주자 전용 주차장이 있는 주거용 건물과 2012년 이후에 지어진 사무실은 자전거를 위한 주차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법(Grenelle II)\* 이 제정되었다. 다른 건물의 경우, 파리시는 보안설치 또는 장비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에 기초하여 민간 건물, 사무실, 공공시설에 대한 신축·보수 시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파리시는 '자전거 면허'를 발급하여 파리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일반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목표는 모든 파리 어린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또한 학교용 자전거를 개발할 예정이며, 지구별로 자전거 자가 수리를 위한 워크숍을 열 계획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리시는 자전거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도시관광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광숙박시설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위한 규제 및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리에 있는 주요 자전거 도로

표지판을 개선하고, 복합 운송지점이나 마을 입구에 방문객을 위한 관광지 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일 드 프랑스 지역의 주요 관광지(베르사유 궁전, 생드니 대성당, 지베르니 등)를 자전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여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가방과 수하물을 보관하기 위한 사물함을 제공할 예정이다.

### 시사점

이처럼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파리시의 노력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차량도로가 사라진 탓에 운전과 운송을 업으로 삼고 있는 파리 시민들이 분노하기도 하였다. 시간을 단축할수록 수익이 느는 운송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그리 달가울 수는 없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가중된 이점만큼 자동차 이용자 불편함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즉 파리시 내부에서 운송에 대한 방안, 빠른 배달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 등 자전거 이용 개선에 집중하느라 돌아보지 못한 부분에 남아 있는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 국가 환경약속에 관한 법률로 2010년 7월 12일에 공포되었다.

\*\*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위해 최대 2,000유로까지 작업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전기자전거를 위한 보조장치 설치 비용의 50%, 최대 4,000유로를 지원한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자동차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겸용도로다 보니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다. 2015년에 도입된 ‘따릉이’는 ‘내 삶을 바꾼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에서 3년(2017 ~ 2019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팬데믹 시기의 대여건수가 2019년 대비 24.3% 증가하였고 누적 대여 건수는 2020년 기준 5,900만 건을 넘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따릉이 대수를 늘리고 전용 도로율 7%를 달성하겠다고 계획하였다.

자전거 도로를 위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자전거를 어떤 이동수단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예전에는 차도보다는 보도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 속에 더 익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최근 조금씩 바뀌어 이제는 보도에서의 자전거 이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차도 위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전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정책과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도로 위 자전거에 주어야 하는 우선권 확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권에 맞추어 전용도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좋은 도로가 있어도 나의 생활권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권 분석을 기반으로 도시의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도로 편성을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정 공간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자전거 이용의 이점이 이제는 나의 집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동차 이동을 멈추고 자전거를 이용할 때 누릴 수 있는 보상을 확실히 해야 한다.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자전거 이용객에게 편

의를 제공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적절한 보상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단순하게 바라보면 파리의 면적은 서울의 6분의 1이다. 따라서 파리의 자전거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서울을 6개의 파리로 나눌 수는 없다. ‘개발’ 위주의 서울과 ‘보존’ 위주의 파리가 걸어온 도시 발전의 역사는 그 결이 서로 다르다. 파리와 달리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할 ‘보존’은 옛 건물이나 옛 거리와 같은 과거로부터의 유산이 아닌 도시 발전의 역사 가운데 형성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현재 도시민의 삶의 형태와 생활권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되는 ‘개발’이 자전거 이용에 관한 물리적 환경 조성이다. 자전거가 도로 위 자동차와 동등한 하나의 이동수단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파리시의 물리적 지원을 발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번 파리시의 새로운 자전거 계획은 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 개발 시 필요한 인식 개선과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벨로폴리탄 공식 홈페이지. <https://votez-velo.paris>
- 2 Press, Paris 100% cyclable plan vélo 2021~2026, 2021, ville de Paris
- 3 파리시청 홈페이지. <https://www.paris.fr/>
- 4 Foricher, A. (2021.10.22.) Nouveau plan vélo à Paris: la carte des aménagements cyclable d'ici 2026, BFM Paris, [https://www.bfmtv.com/paris/nouveau-plan-velo-a-paris-la-carte-des-amenagements-cyclables-d-ici-2026\\_AN-202110220180.html](https://www.bfmtv.com/paris/nouveau-plan-velo-a-paris-la-carte-des-amenagements-cyclables-d-ici-2026_AN-202110220180.html)
- 5 Espagnet, M. (2020.3.10.) La carte des emplacements où garer son vélo en toute sécurité à Paris. Le Bonbon. <https://www.lebonbon.fr/paris/news/carte-velo-securite-Paris%20/>
- 6 도시 자전거 및 자전거 관광 홈페이지. <https://www.citycle.com>
- 7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tt/sub/a06/b06/bicycle/screen.do>

##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의 필요성

지난 10년간(2011~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 수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중은 35.5%(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 중 보행 중 사망자 1,093명)로 평균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는 2.9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1.1명)의 2.6배이며, OECD 28개국 중 27위로 보행자의 교통안전 수준은 거의 최하위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환경은 폭 12m 이하인 소로가 전체 도로 연장의 50.6%를 차지(7대 특·광역시에서는 12m 미만 도로가 65%)하며, 폭이 좁고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이면도로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무분별한 불법주정차와 불법적치물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보행자의 안전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실제로 폭 9m 미만의 보차미분리도로에서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82.3%가 발생하였다.

이에 보도와 차도를 완전히 분리하거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는 방식(보행자전용도로)은 한계가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중심의 도로 이용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도로 형태로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해외에서도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와 유사한 개념의 도로를 일찍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1968년부터 ‘본엘프(Woonerf)’ 도로 개념을 도입하여 주거지역 중심으로 보행자의 도로 전 폭 사용, 차량 속도 규제 등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독일의 ‘30구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송호권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사무관

##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해외사례

국가	제도	내용
네덜란드	본엘프 (Woonerf)	본엘프 구역에서는 보행자는 도로 전폭 사용, 차량은 보행속도를 초과하여 통행할 수 없음
독일	30구역 (Tempo 30 Zone)	30구역(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보행자는 차도를 이용하여 통행 가능
영국	홈존 (Home Zone)	홈존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서행하며 언제든 정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함

역(Tempo 30 Zone)', 영국의 '홈존(Home Zone)' 등 본엘프와 유사한 도로 형태가 존재한다.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와 결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45개소의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주택가·상가 등 보행량이 많고 보



네덜란드 본엘프



영국 홈존

도와 차도의 분리가 어려운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친화적 포장과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하였다.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현장조사와 분석을 거쳐 도로를 설계하게 되는데, 이때 도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표지 등의 설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조성 사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후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하고 있으며, 보행친화적인 도로포장으로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음

치 ▲보행친화적인 도로포장(노면 디자인) ▲차량의 속도저감시설(과속방지턱,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요철포장 등) ▲주정차 방지시설(식재대, 말뚝 등) ▲장애인 안전시설(점자블록 등) ▲조경 및 휴게시설(식재와 결합된 다양한 휴게시설 등) ▲안전시설로서의 조명 등을 계획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통해 조성한 보행자우선도로(서울, 부산, 대전, 청주 등에 조성한 6개소)를 분석한 결과 사업 전에 비해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보행환경 만족도는 평균 5.65점에서 8.07점으로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보행환경의 안전성·편리성·쾌적성에 대한 만족도 모두가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체적으로 조성한 58개소의 보행자우선도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6개소) 만족도 조사 결과

- 보행환경 안전성 만족도: (사업 전) 평균 5.6 → (사업 후) 평균 7.9
  - 보행환경 편리성 만족도: (사업 전) 평균 5.6 → (사업 후) 평균 7.9
  - 보행환경 쾌적성 만족도: (사업 전) 평균 5.55 → (사업 후) 평균 8.17
- ※ 만족도는 10점을 척도로 측정됨

조성 전 205건에서 조성 후 146건으로 약 28%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도로의 환경 개선을 통해서만 나타난 결과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와 차량의 속도 저감 등의 제도가 함께 마련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최근 도시 내 차량 속도 관리(5030),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도로교통법」 개정) 등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통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11일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2년 7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행안전법」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와 「지정·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우선 규정」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한다.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행안전법」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

를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의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정의(제2조)하고, 특별시장 등(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광역시 관할의 군수는 제외)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17조의 2)하고 있다. 특별시장 등은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하는 경우 안전 표지 및 안내표지, 속도저감시설, 보행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 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제17조의 3)하였다. 이와 함께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한 경우에는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유지·보수하도록 규정(제19조)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만약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제27조)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28조의 2)도 포함하고 있다.

###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차량 우선 통행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기존에 차량을 전면 통제할 수 있는 도로에만 적용 가능한 보행자전용도로에 비

해 더욱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함께 가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도로 폭이 좁아 구조적으로 보도 설치가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개선의 대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보행자우선도로를 효과적으로 지정·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2년부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며, 실제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인 동시에 건강, 환경,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보행은 우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파리의 15분 도시(도보·자전거로 15분 이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도시) 등의 사례는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로 최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의 유사 제도와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설정이다.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과 함께 정부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보행자가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교통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행정안전부. (2019). 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
- 2 건축공간연구원. (2020). 보행자우선도로 성과분석 및 활성화 연구.

# 주택난 속 비어가는 베를린의 주택, 원인과 시사점

김태환  
09a 파트너

베를린은 유럽에서도 가장 급격한 인구 증가와 집값 상승으로 심각한 주택 부족을 겪고 있는 도시이다. 하지만 2022년 1월 독일의 저명한 매체 <슈피겔(Der Spiegel)>은 빈 채로 방치된 주택이 늘어가는 베를린의 상황을 조명하였다. 십 수년 동안 방치된 집들도 있지만, 주택난이 심각한 최근에 들어서도 주택은 계속 비어가고 있다. 주택 부족과 동시에 비어가는 집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 주거문제를 들러싼 베를린의 상황

베를린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그리고 그 상승폭은 베를린 시의 예측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 2002년 베를린시는 2020년 베를린 인구가 336만 명이 되리라 예측하였지만 실제로는 34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최근의 예측에서는 2030년 3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2007년에 예측한 347만 명과는 큰 차이가 있는 수치이다. 이렇듯 실제 인구상승은 베를린시의 예측보다 항상 높았고, 이는 주택 부족으로 이어졌다.

자연히 집값이 상승하였고,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집값을 억제하고자 베를린시는 기존보다 더 강한 정책을 내세웠는데, 바로 ‘월세상한제’이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월세가 동결되었고, 현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높다면 강제적으로 월세를 내리도록 하였다. 도입 이후 월세가 11% 하락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시민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월세 제한은 베를린시가 아닌 연방의회에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며 제도를 무효화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말 베를린 시민들은 34만 명의 서명을 받아 3,000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민간기업으로부터 주택을 몰수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시민의 73%가 참여한 가운데 찬성 56%를 끌어내며, 시민들이 주택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보여주었다. 베를린시가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 투표 결과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고, 결국 최대 부동산 회사 도이체보넨은 베를린시에 주택 2만 채를 팔기로 약속하였다.



Habersaathstrasse 주거 블록



Schwedterstrasse 주거 건물

## 비어 있는 주거와 그 요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를린의 주택이 비어가고 있다. 그중 하나가 Habersaathstraße에 위치한 주거 블록이다. 100 세대가 넘게 살 수 있는 주거 건물이지만 현재는 9세대만이 남아 있다. Schwedterstrasse에 위치한 주거 건물도 마찬가지이다. 이 주거 건물은 동쪽 중심 번화가 중 하나인 Kastanienallee라는 곳 바로 옆에 있어 주거지로 인기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수년 동안 빈 채로 방치되고 있다. Nachbarschaftsinitiative 단체장 잉그리트 시퍼(Ingrid Schipper)에 의하면 현재 베를린에는 최소 80개의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 부동산회사의 의도적인 방치

비어 있는 주거 건물은 대부분 개인이 아닌 부동산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다. 몇몇 주거 건물의 소유자들은 <슈피겔>의 취재 요청에도 응답을 완강히 거부하며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수년 전 건물 철거 및 신축허가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베를린시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이후 법정 공방까지 가며 건축물 보수 및 유지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살던 세입자들은 스스로 떠나고 말았다.

## 방치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

오래된 건축물을 사서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지어 더 큰 경제적 이득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부동산회사의 당연한 업무이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신축 건물은 몇 가지의 정부 정책을 피해 간다. 그중 하나는 월세 상승 제한이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처음 계약한 월세 금액에서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지만, 신축 주거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 없이 월세 인상을 첫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또 다른 정책 중 하나는 세입자 보호에서 시작한다.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다 보니 세입자가 있는 주거와 비어 있는 주거는 같은 집이라고 하여도 큰 가격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기존 세입자를 반강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건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 주택가격 상승

앞서 말한 두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국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 가격 상승이다.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부동산회사는 의도적으로 건물을 방치하며 정부의 정책을 피해 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렇게 팔게 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이런 부작용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 시사점

지금까지 어떠한 배경과 요인으로 베를린의 주거 건물이 방치되고 비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집값 상승과 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 그 사이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부동산회사. 이와 같은 관계는 비단 베를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한국의 세입자 보호는 독일만큼 강하지 않아 아직까진 부동산회사가 의도적으로 주거 건물을 방치하며 비우려고 노력하는 현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점차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전세 혹은 월세 세입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 글에서 언급한 베를린의 상황은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출처

- 1 Senatsverwaltung für Stadtentwicklung, Bauen und Wohnen. Bevölkerungsprognose für Berlin. [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bevoelkerungsprognose/de/ergebnisse\\_2015\\_2030.shtml](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bevoelkerungsprognose/de/ergebnisse_2015_2030.shtml)
- 2 Altmayer, A (SPIEGEL TV). Leerstand trotz Wohnungsnot. <https://www.spiegel.de/panorama/gesellschaft/berlin-leerstand-trotz-wohnungsnot-warum-in-der-hauptstadt-ganze-haeuser-nicht-vermietet-werden-spiegel-tv-a-bd0c4dfa-1c47-49aa-8aca-2afe1559b6f9>

## 스페인, 지속가능한 도시 위한 '건축품질법' 승인

<https://www.archdaily.com/976267/the-spanish-government-approves-the-law-on-quality-in-architecture>  
<https://www.mitma.gob.es/el-ministerio/sala-de-prensa/noticias/mar-18012022-1541>

지난 1월 18일, 스페인 각료 위원회는 건축의 품질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스페인 의회에 제출한 '건축품질법(Architecture Quality Law)'의 초안을 승인하고 의회 절차를 개시하였다.

법안은 스페인 정부 부처인 The Ministry of Transport, Mobility and Urban Agenda(MITMA)의 주도 아래 현대사회의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건축유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통한 건축의 국내외 보급, 스페인 기업 및 전문가 지원, 품질 인정 인센티브 도입,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축 품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안내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기본 기구인 'House of Architecture'와 'Architecture Quality Council'을 창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건축 관련 학문을 보급하고 문화·외교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등 건축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개선과 자문 응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서 구성될 예정이다. 법안은 New European Bauhaus, \* Renovation Wave, \*\* 다보스 선언 등 유럽 내 주요 규제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며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에너지 빈곤 퇴출 등 에너지 효율성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건축물 복구 및 개선 등을 촉진하고자 스페인 정부가 승인한 The Recovery, Transformation and Resilience Plan(PRTR)의 구성 요소 중 일부를 함께 다룬다.



©Shutterstock

- \* 건물이 위치한 지역 내 문화, 전통, 미적 기준을 충족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콘셉트
- \*\* 2020년 10월 건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럽 리모델링 전략

## 암스테르담, 공공공간에 설치하는 센서에 대해 등록제 도입

<https://zoek.officielebekendmakingen.nl/gmb-2021-368183.html>  
<https://www.amsterdam.nl/privacy/camera-sensoren-privacy/>

암스테르담에서 대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를 설치할 때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암스테르담 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일반 지방 조례 2008’을 개정, 공공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센서 등록제’를 도입했다. 연구 또는 상업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부, 기업, 과학 및 연구기관은 2021년 12월 1일부터 각 센서와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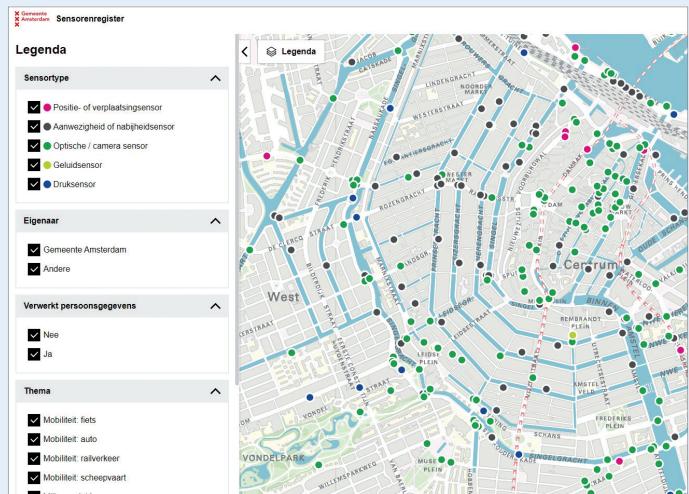
조례에서 지칭하는 센서는 시민의 이동을 감지하는 센서부터 소리 감지 센서와 감시·보안을 목적으로 한 카메라 등을 포함하며 쇼핑몰 내 카메라,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교통 카메라, 공기 질을 측정하는 센서 등이 모두 해당된다. 기관은 도로·차량·선박 등 공공시설에 이러한 센서를 설치할 때 최소 5일 전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수집한 기관 및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거나 공공질서 유지와 범죄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센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한다.

암스테르담은 센서 등록제를 시행하는 네덜란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로, 이를 통해 암스테르담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2021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센서 등록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일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카운팅 센서 및 Wi-Fi 추적 표지판

출처: 암스테르담 정부 홈페이지. [www.amsterdam.nl/innovatie/digitalisering-technologie/data/zicht-sensoren-openbare-ruimte/](https://www.amsterdam.nl/innovatie/digitalisering-technologie/data/zicht-sensoren-openbare-ruimte/)(검색일: 2022.3.14.)



센서 등록 현황

## 글래스고, '20분 도시' 향한 도시 재편 본격화

<https://www.glasgow.gov.uk/index.aspx?articleid=27947>  
<https://www.glasgow.gov.uk/index.aspx?articleid=27062>  
<https://www.glasgow.gov.uk/CHtppHandler.ashx?id=53409&p=0>

영국 글래스고시가 '20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 디자인 개선안 도출 등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글래스고는 작년 6월 'Liveable Neighbourhoods' 사업을 발표하고 10년간 시 전역의 가로 설계와 도시공간 활용 방향을 개선해 ▲20분 도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때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공공서비스 주요 제공처로서 지역주민센터의 활용 및 접근성 제고 ▲보행, 자전거 이동의 편의와 안전성 제고 ▲사람 중심의 가로 설계 등을 설정한 바 있다.

글래스고 전역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2개 대상지\*에 대해 개편 디자인안을 구체화하였다고 시의회는 전하였다. 개편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2개 대상지가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시는 주민들이 지역을 이동하며 겪는 문제를 듣는 것이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개선안에는 교통 정온화와 보행로 개선, 벤치 등 공공시설 설치, 파크렛(parklet) 도입, 교차로 재설계, 미이용 토지 재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이번 개편안이 전체 사업 대상지에 적용할 수 있는 예시하자 예산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모델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에서 지속가능성 및 탄소감축(Sustainability and Carbon Reduction)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애나 리처드슨(Anna Richardson) 의원은 "각 지역에 대한 개선안은 작은 조치처럼 보이지만 그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하면서 "크게 보면 차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고 사업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 'Liveable Neighbourhoods' 툴킷

출처: Glasgow City Council. (2021.6.) Glasgows Liveable Neighbourhoods Toolkit.

\* Ruchill-Cowlairs 지역, Langside-Toryglen 지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 제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  
2021.12.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공공건축 설계 방법과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공공건축물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지침서는 감염병에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목적으로 공공건축물의 건축 공간설계 및 설비의 기술적 설계기준, 유지관리 시 운영기준 그리고 사업별 실제 적용 사례를 삽화와 함께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는 감염병에 대해 ‘3밀 요소 제거 방식’을 중심으로 오염원 차단과 확산방지, 비상상황 분야로 나누어 대응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61건의 설계요소를 건축계획(배치·평면·입면 38건), 설비계획(환경·위생 13건), 유지관리(운영·장비 10건) 등으로 분류하였다.

### 감염병 예방설계 대응방향 및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



출처: 행복청. (2021). 코로나19에 맞서 공공건축물이 변신한다. 12월 28일 보도자료.

3밀 요소는 밀접·밀집·밀폐 요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침서에서 ▲밀접 요소는 자동화 설비, 항균성능 미감재 등으로 비접촉 환경을 구성해 제거하고 ▲밀집 요소는 시설의 분산 배치, 진·출입구 및 동선 분리 등 거리두기 ▲밀폐 요소는 창호계획, 공기조화 설비 등 환기로 해소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오염원 차단과 확산방지 차원에서는 고효율 필터와 자외선 살균 기능의 기계환기설비, 배수관별 별도의 배수처리와 통기관의 분리 설치를, ▲비상상황 대응 분야에서는 비상시 분산 배치에 따른 출입구 통제 및 동선 차단으로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건물별 개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행복청은 향후 건립 예정인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합강동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 평생교육원공공건축물 설계에 이번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 도시계획·개발 때 탄소중립 계획요소 반영 위해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활력지원과  
2021.12.28.

국토교통부는 지역과 도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탄소중립 계획요소 등을 반영토록 하였다.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하였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수행하는 기초 조사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수단, 예상 감축량 등을 담은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공간구조, 교통 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 부문별 탄소중립 계획요소 세부 내용

공간구조	온실가스 현황지도,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흡수원 분포 등 탄소중립 관련 도시 현황 지도를 구축하여 공간구조 개편에 적용
교통체계	자전거·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
주거환경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식재 등 주택 내 탄소흡수원 확충
에너지·폐기물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방안,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자원순환유도 등
공원·녹지	탄소흡수원 확충, 도심바람길 조성 등 열섬현상 완화 등

출처: 국토교통부. (2021).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 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 검토. 12월 28일 보도자료.

###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기초조사 때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신 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추가로 조사하고, 범위를 넓혀 신 재생에너지의 발전·이송·활용시설의 설치 여부까지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해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제로 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로 검토해 건축물에너지의 소요량을 최소로 줄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의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통합운영 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 쾌적한 도시환경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22.3.9.

인천시 도시경관건축과  
2022.1.27.

### 서울시, 공공디자인 일러스트 가이드라인 최초 개발

서울시가 도로, 공원, 버스정류장, 시설안내표지판 등 97종 공공디자인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그림 형태로 설명한 '공공디자인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기존 '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항목별로 방대한 내용의 규정·지침을 텍스트로만 안내해 경험이 적은 실무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새로 개발한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은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 방향과 내용, 정량적 수치를 도식화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 구조도와 함께 그려 공공시설물의 위치·용도·기능 등 도시 맥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서울시가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공공디자인은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공공디자인사업 등 모두 4개 분야 97개 항목이다.

한편 공공디자인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및 자치구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자책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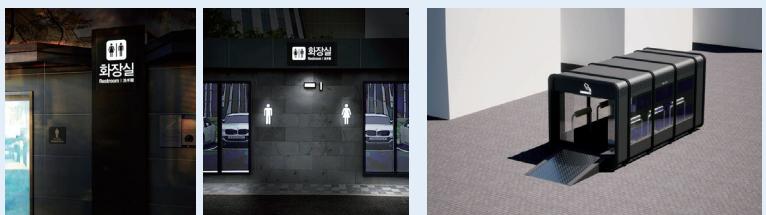
공공디자인 일러스트 가이드라인 책자

출처: 서울시. (2022). 서울시, 97종 공공디자인 현장에 손쉽게 적용한다…'일러스트 가이드라인' 최초 개발. 3월 9일 보도자료.

공공시설물(신호등) 체크리스트 이미지

### 인천시, 표준형 화장실 안내사인 및 흡연부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8차 개발' 용역을 통해 화장실 안내사인 가이드라인과 흡연구역·흡연부스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우선 간이화장실과 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현황을 조사해 멀리서도 찾기 쉽고, 통일성 있는 화장실 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화장실 내외부 안내사인의 경우 야간 인지 강화를 위해 조명을 추가하고 반려동물의 대기장소 안내사인을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였다. 또한 민간용과 공공기관용을 구분된 흡연구역·흡연부스 디자인은 길거리 흡연 방지 및 금연인식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화장실 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예시

출처: 인천시. (2022). 인천시, 표준디자인으로 시민 생활을 쾌적하게, 안전하게 바꾼다!. 1월 27일 보도자료.

## 지자체별 다양성 갖춘 도시농업 사업 확산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2022.2.22.

대전시 일자리경제국 농생명정책과  
2022.2.16.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2022.2.23.

### 인천시,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운영' 진행

인천시가 학교 및 공공텃밭 활용을 통한 도시농업 확산과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2022년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운영' 사업의 참여대상을 모집한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운영 사업은 도시농업관리사를 텃밭 전문 강사로 양성하고, 이들을 텃밭 현장으로 파견해 학생들과 공공텃밭을 분양받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방법, 병해충 관리, 친환경 농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시기별로 도시민들이 직접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10개소이며, 학교 텃밭을 운영하는 인천 관내 초·중등학교와 공공텃밭을 운영하고 텃밭관리 교육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대전시, 도시텃밭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 분양

대전시는 도심 속 유휴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심 속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도시텃밭인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부터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1세대당 1구획씩 신청할 수 있다. 분양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분양대상자는 20㎡ 규모의 텃밭을 3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 부산시, 2022년 도시농업 육성계획 추진

부산시는 '그린스마트 도시'의 비전 실현을 위해 올해도 도시농업 육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수요에 맞춘 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학생·농업인 등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도시농업 수요 맞춤형 교육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교육 ▲귀농귀촌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16개 과정 총 138회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도시농업 시범사업(7개)에 2억 5,700만 원을 투입해 학교교육형 텃밭모델화, 치유농업 프로그램, 그린스쿨 오피스 조성, 아파트 조경 디자인·설계·시공·설비 등 새로운 시범모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4월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제18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를 열어 도시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그린스마트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려는 기틀을 마련한다.



부산시의 2021년 도시농업 관련 행사 모습

출처: 부산시(2022).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도시농업'이 이끈다! 2월 23일 보도자료.

## CPTED 활용한 시책으로 시민안전 확보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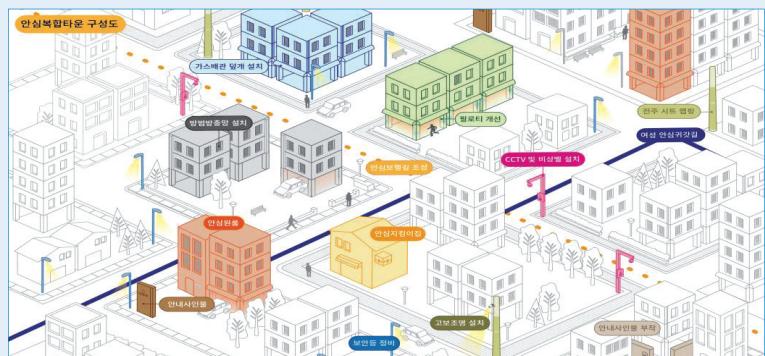
부산시 도시디자인과  
2022.1.20.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  
2022.2.6.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2022.2.15.

### 부산시, 전국 최초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부산시가 혼자 사는 여성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룸 밀집 지역인 금정구 장전동과 남구 대연동에 '여성친화형 1인 가구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이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기존 1세대 셤테드\* 사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2세대 셤�테드 집약 사업이다.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110억 원이 투입되며 ▲혁신 셤테드 인프라 조성 ▲범죄 취약가구 방법시설 지원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셤테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특화 등 4개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안심복합타운 구성도

출처: 부산시(2022). 부산시, 전국 최초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추진! 1월 20일 보도자료.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등 5곳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생활 안전 취약지의 야간 보행로를 개선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안전 취약 수준 ▲시·군 및 주민참여 의지 ▲사업 내용의 타당성 ▲모범사례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지 5곳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별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환경분석을 통한 기본설계 과정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설계단계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뿐 아니라 셤테드 전문가 조언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 경상남도, 2022년 안심골목길 사업대상지 3개소 선정

2015년부터 매년 3~5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테드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는 올해 김해시 진례면 고모마을, 의령군 부림면 종동마을, 고성군 고성시장 뒤편 등 3곳을 새 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LED 가로등 및 CCTV 설치, 골목 담장 벽화, 안심비상벨 설치 등을 통해 안심하고 24시간 걸을 수 있는 보행로가 만들어진다. 경상남도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범죄 발생률이 줄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주민행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셤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범죄 예방 환경설계

# 현장 기반 연구의 플랫폼, 캐나다 도시연구소

문보람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 들어가며

캐나다의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와 같은 주요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매번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지역이다.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기준은 개인마다를 수 있지만 안전, 인프라 서비스, 문화, 환경, 교육과 같은 요소가 공통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반면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위협요소로 도시의 높은 인구 밀도, 인구의 고령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이슈는 현재 전 세계 많은 사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며, 이는 캐나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도시가 가진 다양한 문제들을 캐나다는 어떤 차별화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 글에서는 현장 기반 연구의 플랫폼인 캐나다 도시연구소의 비전과 목표, 주요 역할과 최근의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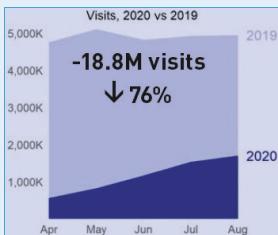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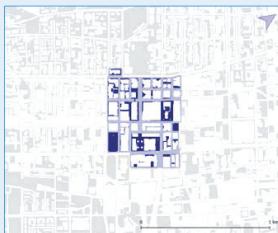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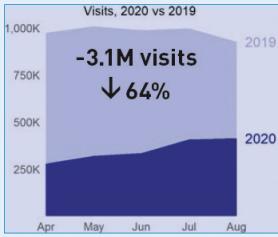
1990년에 설립된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건강한 도시 조성 및 개발을 위해 수립된 비영리 응용연구기관이다. 수행한 연구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획하며, ‘도시계획은 모두를 위해야 하고,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는 가치를 앞세우고 있다.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지역 주민, 정책 결정자, 도시 전문가, 공무원, 기업, 사회 활동가,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모이는 국가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연구·참여·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캐나다가 더욱 생동감 있고 공정하며 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이다.

## 기관의 역할 및 예산

기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연결’이다. 이는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과 포럼 등을 기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촉진’이다. 연구소는 도시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지역 주민, 정책 결정자, 도시 전문가, 공무원, 기업, 사회 활동가,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모이는 국가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니펙시의 King Street 중심가(상)와 몬트리올시의 Saint-Catherine 중심가(하)의 2019년과 2020년 방문객 감소 추이

출처: Canadian Urban Institute(2020a, p.14)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우수 사례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통’이다. 캐나다의 다양한 도심 생활을 반영하고 견고한 정책 리더십과 민관 협작 투자, 현장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예산은 다양한 파트너로부터 편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8개의 주요 재정 조달 기관은 캐나다의 비영리 지원 재단과 신용조합·투자은행 등으로 구성되며, 100개가 넘는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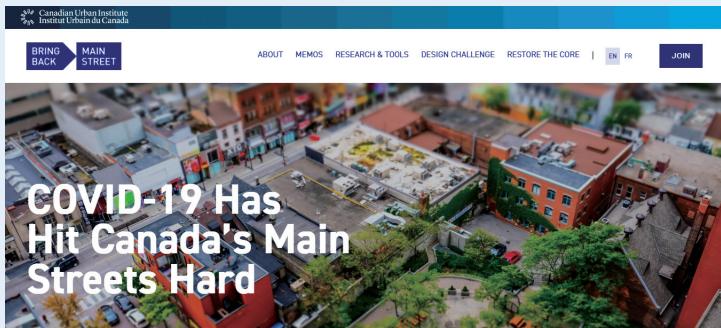
### 핵심 연구과제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지불 가능한 주택, 도시 경쟁력, 스마트 성장, 에너지·물 관련 솔루션, 고령친화 커뮤니티, 오염지역 정화와 같은 특정 이슈가 포함된 도시계획을 주로 연구하고 실행한다. 또한 도시계획, 도시관리, 서비스 공급, 환경관리, 지역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 도시 및 지방과 협업하는 활발한 국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글에서는 시내·중심가의 공동체 회복성 및 지속가능성, 고령친화 주거,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대표 과제를 소개한다.

### ‘캐나다 중심가 되찾기(Bringing Back Canada’s Main Streets)’ 프로젝트

캐나다의 주요 중심가들은 도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에 있어서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주요 중심가들은 전례 없는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미 많은 수의 소상공인이 폐업하였고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캐나다 중심가 되찾기’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조율된 연구 및 실행 캠페인으로, 캐나다의 주요 중심가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위기로부터 더욱 회복력을 가질 수 있게끔 기획되었다.

프로젝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민들의 이동 패턴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대도시 상업지구와 소도시 중심가 등 캐나다 전역의 9개 중심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프로젝트에서 발간한 액션 리포트에서는 실행 방안을 즉각적 실행과 장기 실행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중심가 되찾기’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 화면

출처: Bring Back Main Street 홈페이지. <https://bringbackmainstreet.ca/>



중심가 디자인 챌린지 플레이북의 디자인 사례  
출처: Canadian Urban Institute(2020c, pp.17, 27, 29)



### 캐나다 주요 중심가 전경

출처: Canadian Urban Institute(2020a, pp.15, 25)

### Rapid Placemaking to Bring Back Main Street

A Pandemic Recovery Toolkit for Local Communities  
Volume 01 - August 2020



'캐나다 중심가 되찾기' 프로젝트의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툴킷(좌)과 커뮤니티를 이루는 다양한 주체(우)  
출처: Canadian Urban Institute(2020,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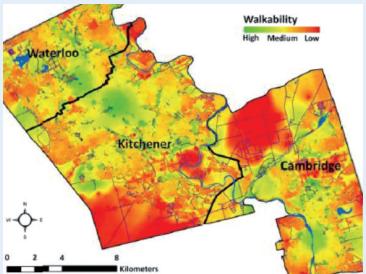
또한 중심가 상점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캐나다 왕립건축연구소(Royal Architectural Institute)와 함께 중심가 디자인 챌린지 플레이북을 발간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가, 학생, 계획가, 조경 건축가, 공간 기획자, 커뮤니티 활동가,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요 연구 보고서 및 캠페인 결과, 수집된 데이터, 행사 및 시민들의 의견을 자세하게 공유하고 있다.

### 고령층을 위한 도시·주택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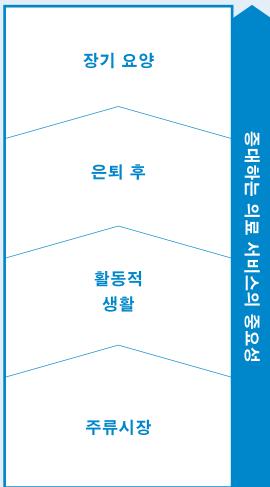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캐나다에서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14년 기준 15% 이 하였던 65세 이상 인구는 2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30년에는 약 2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Government of Canada, 2014).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대비하여 교통, 주택, 고용, 서비스, 행정기관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캐나다 도시연구소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 워털루시 도시계획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교통 서비스 공급과 그에 따른 주택 형태 및 입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이와 동시에 시 정부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개선하고 자가용 사용 감소를 권장하기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 노인들이 증가할 경우 이는 확대 및 개선된 대중교통 체계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Bring Back Main Street. <https://bringbackmainstreet.ca/>



워털루시의 물리적 보행환경 수준(2009년 기준)  
출처: Canadian Urban Institute(2014, p.48)



고령층 대상 주택 산업 범위  
출처: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2020b, p.25)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 디자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캐나다 도시연구소에서는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와의 협력을 통해 '55세 이상(over 55)'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친화 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지역 조성 방안, 모든 연령층을 위한 디자인,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수요, 다양한 형태의 거주권과 창의적 파트너십, 적응력 높은 주택 모델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설계적 측면으로 입구, 거실 및 식당, 주방, 침실, 화장실, 창고, 세탁실, 파티오 및 발코니 등 집안 전체에 대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 거주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주택 디벨로퍼, 지자체, NGO, 디자이너, 서비스 에이전시 등 지불 가능한 고령층 대상 주택을 만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이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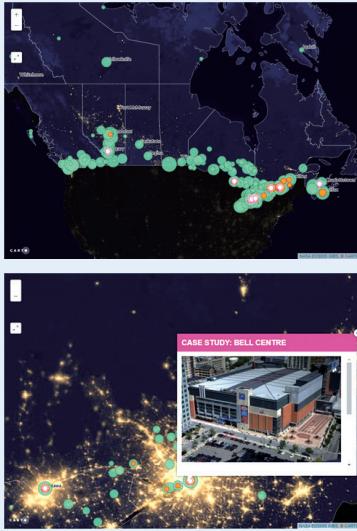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군가는 작은 주택에서의 거주를 선호하거나 혹은 활동적인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사를 원할 수도 있다. 다만 대부분의 캐나다 고령층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희망한다. 이에 고령층을 위한 주택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고령층 관련 인구통계적·지리적 추이, 동향, 주택 옵션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 인구 개개인별로 재정 및 건강 상황이 다르다는 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고령층의 주택 수요와 기회는 퇴직자들의 시장 중심 주택부터 요양시설까지 광범위하다. 또한 공동거주(co-housing), 활동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커뮤니티, 공유자본모델 등 오늘날 고령층의 수요를 반영한다 양한 혁신적 대안을 검토한다.

####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시작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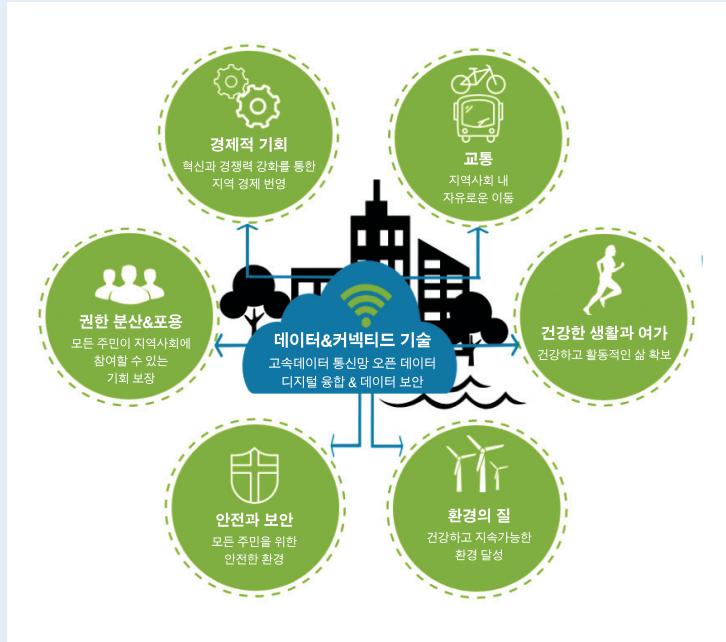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네트워크화된 LED 가로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추진해 왔다. 이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구성된 LSNetwork (LED Streetlights Network)는 스마트 커뮤니티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각 공공 서비스의 인프라를 연결하고자 지방정부를 돋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시도해 왔다.

LSNetwork는 이미 LED 가로등으로 전환이 완료되고 제어 시스템을 갖춘 캐나다 전역의 지점들을 지도화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 정보는 LED 가로등 개수, 에너지 절감비용 및 잠재적 온실가스 감소량 등이 포함되며, 2020년 1월 기준 캐나다 전역에서 최소 53%의 가로등이 LED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LSNetwork는 일터와 가정, 여가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돋고 있다. 많은 수의 캐나다 지역사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여섯 가지 분야(경제적 기회, 권한 분산·포용, 환경의 질, 건강한 생활과 여가, 교통, 안전과 보안)를 포함하는 프레임워크를 설정한다. 과거에는 지역사회의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이 민간 산업 주도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LED 가로등 전환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LED 가로등 지도  
출처: LSNetwork(n.d). <http://www.lsnetwork.org/map>



#### 스마트도시 구성요소

출처: Canadian Urban Institute(2018, p.3)

제시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시티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가이드 발간을 통해 단계별로 수립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일곱 가지(가로등, 교통과 주차, 환경 모니터링, 안전과 보안, 주요 공공서비스 인프라 연계, 신수익 창출, 시민 참여)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 도시를 말하고, 보고, 공유하다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CityTalk', 'CityWatch', 'CityShare'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와 끊임없이 토론하고 소통하고 있다.\* 다른 주제는 경계가 없고 광범위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왜 도시에 중요한지, 도시 내 주택 다양성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 선거 이후의 도시 변화는 무엇일지, 험리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도시 내 젠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가 무엇일지, 청년들이 바라보는 도시 어젠다는 무엇인지, 도시 내 대학의 미래는 무엇일지에 관한 토론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 글의 처음에 제기된 질문인 '도시가 가진 다양한 문제들을 캐나다는 어떤 차별화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고 있을까?'를 다시 곱씹어 본다. 도시가 가진 현재의 위기와 도전 요소, 위와 같은 다채로운 주제에 대해 캐나다 도시연구소

\* CityTalk(<https://canurb.org/citytalk-canada/>)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토론 및 세미나 영상은 영상의 전체 버전뿐만 아니라 주요 결과 요약, 토론자들의 전체 발언을 속기한 스크립트, 영상에 참여한 청중의 채팅 질문까지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다.

“도시가 가진 위기와  
도전 요소 등  
다채로운 주제에 대해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현장에 뛰어들어  
이야기를 모으고,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전달하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

는 현장에 뛰어들어 이야기를 모으고,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전달하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 캐나다 도시연구소의 이러한 시도와 접근이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 참고문헌

- 1 Bring Back Main Street 홈페이지. <https://bringbackmainstreet.ca/>
- 2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2020a). Housing for Older Canadians: The Definitive Guide to the Over-55 Market – Designing the Project.
- 3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2020b). Housing for Older Canadians: The Definitive Guide to the Over-55 Market – Understanding the Market.
- 4 Canadian Urban Institute 홈페이지. <https://canurb.org/>
- 5 Canadian Urban Institute. (2014). Supporting the Big Shift with Age Friendly Development.
- 6 Canadian Urban Institute. (2017). 2017 Annual Report.
- 7 Canadian Urban Institute. (2018). Smart Planning Our Future Cities.
- 8 Canadian Urban Institute. (2020a). In it together: Bringing Back Canada's Main Streets action report.
- 9 Canadian Urban Institute. (2020b). Rapid Placemaking to Bring Back Main Street.
- 10 Canadian Urban Institute. (2020c). Main Street Design Challenge Playbook.
- 11 Canadian Urban Institute. (2020d). City Talk. <https://canurb.org/citytalk-canada/>
- 12 Government of Canada. (2014). Action for Seniors report.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seniors-action-report.html/>
- 13 LSNetwork. (n.d.). <http://www.lsnetwork.org/map>

건축과 도시공간

—

Vol. 45

Spring 2022

# 장소 탐방

Place Review

# 3

부지가 생긴 모양 위로 자연스럽게 들어선 양천공원 책쉼터는 그 애음새만큼 시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레 녹아든다. 방문객들은 간결하고 평연한 이 공간에서 특별할 필요 없는, 매일의 휴식을 즐길 수 있다.

LH 해설당은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계획은 물론 지역 경관에 녹아드는 건축, 커뮤니티에 속한 모두에게 기여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시도가 돌보인다.

양천공원  
체육터



동네 풍경 속 LH 해설당



풍경이 흐르는 책 마루

– 양천공원 책쉼터

090

고령자와 도시환경을 위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모델

– LH 해심당

104

풍경이 흐르는 책 마루 – 양천공원 책쉼터 | 서울시에서는 흑한기나  
혹서기에도 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 안에 쉼터 만들기 사  
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생활SOC사업이고 공간복지를 구  
현하는 일인데,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동네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많이 있다는 건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고령자와 도시환경을 위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모델 – LH 해심당 |  
'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실 수 있는 집'을 의미하는 해심당은 기존의  
도봉구에 사는 고령 인구들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편의시설과 건강·돌봄 등의 서비스가 연계된 생활형  
SOC 공간이 일체화된 공공임대주택이다.

# 양천공원 책쉼터

## 풍경이 흐르는 책 마루

김정임

(주)서로아키텍츠 대표

### 개요

위치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11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도서관)
대지면적	33,797.9m <sup>2</sup>
건축면적	464.55m <sup>2</sup>
연면적	464.55m <sup>2</sup>
규모	지상 1층
높이	5.2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장 마감재	와이드 벽돌
내부 마감재	노출콘크리트
구조설계	윤구조
책임설계	김정임
설계팀	이상미, 조하연
시공	(주)자안건설(건축), (주)베스트하우즈(인테리어)
기계·전기설계	(주)주성이엔지(기계), (주)한길엔지니어링(전기·통신)
조경	동인조경마당
건축주	양천구청



양천공원 책쉼터



놀이터의 둥근 선형을 따라 조성된 건축

양천공원 책쉼터는 개방된 하나의 공간으로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실 같은 분위기가 되길 바라며 계획하였다.





상·하 공원 속 책쉼터



상      외부 잔디밭과 연결되는 내부 공간  
하·좌    김나무쉼터  
하·우    편안한 분위기의 책쉼터 내부



상 곡선을 따라 조성된 내부 통로  
하 스텝식 좌석 주변 서가

© 노경, (주)서로아키텍츠 제공



© 노경, (주)서로아키텍츠 제공



© 노경, (주)서로아키텍츠 제공



좌      부지의 경사로 자연스럽게 생긴 레벨  
좌·상      풍경이 펼쳐진 창가  
우·하      나무로 채워진 내부

감나무와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나무그늘 아래  
둘러앉을 수 있는 외부공간을 만들고,  
서쪽의 놀이터와 동쪽 잔디밭의 둥근 선형을  
그대로 가져와 집을 앉혔다.  
먼저 있었던 존재들 사이를 조심스레 비집고 들어가  
집이 앉은 모양새이다.

©노경, ©서로아키텍츠 제공



책쉼터와 놀이터 사이 그늘공간

## 자연스러운 자리에 앉다

처음 해야 할 일은 공원 안에 집을 앉힐 자리를 찾는 것이었다. 야외 공연장 무대 구조물을 개조하여 어린이 놀이터로 만든 장소 옆에 자리를 잡아 비슷한 기능을 끓어주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 집을 앉힐 터에는 들판에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수형이 예쁜 감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그 나무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시작한 것이 결과적으로 예전부터 그곳에 있어온 것들의 존재를 다 수용하며 집을 앉히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감나무와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나무그늘 아래 둘러앉을 수 있는 외부공간을 만들고, 서쪽의 놀이터와 동쪽 잔디밭의 둥근 선형을 그대로 가져와 집을 앉혔다. 먼저 있었던 존재들 사이를 조심스레 비집고 들어가 집이 앉은 모양새이다.

## 다양한 풍경이 흐르는

부지에 있던 1.2m 정도의 레벨 차이는 내부에서 그대로 경사로로 연결하여 아래 레벨은 카페와 어우러져 차 한잔하면서 책 읽는 공간으로, 위 레벨에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를 두어 조용하고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었다. 또한 레벨 차를 이용해 몇 단의 스텝식 좌석을 만들었는데, 그 앞쪽의 잔디밭을 향한 외벽은 폴딩 도어를 설치하여 계절 좋은 날에는 열어서 작은 음악회나 영화상영 등 공원과 연계된 다양한 이벤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면. (주)서로이카(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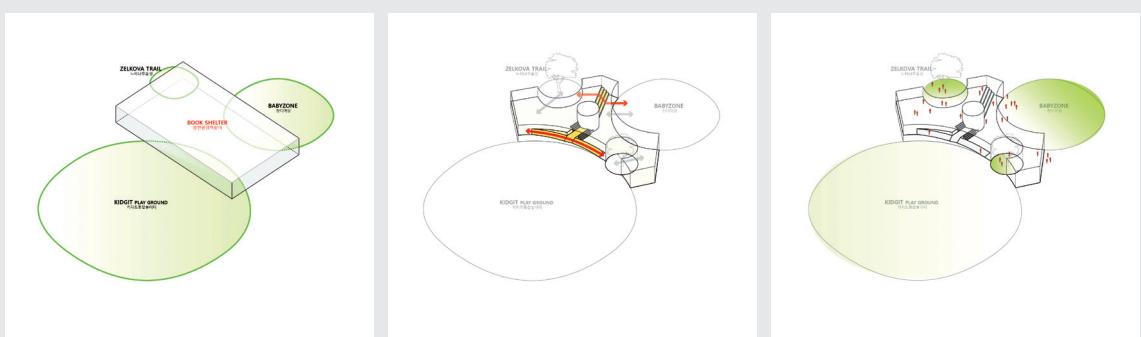
상 공원 속 책쉼터  
하 외부 잔디밭과 연결되는 내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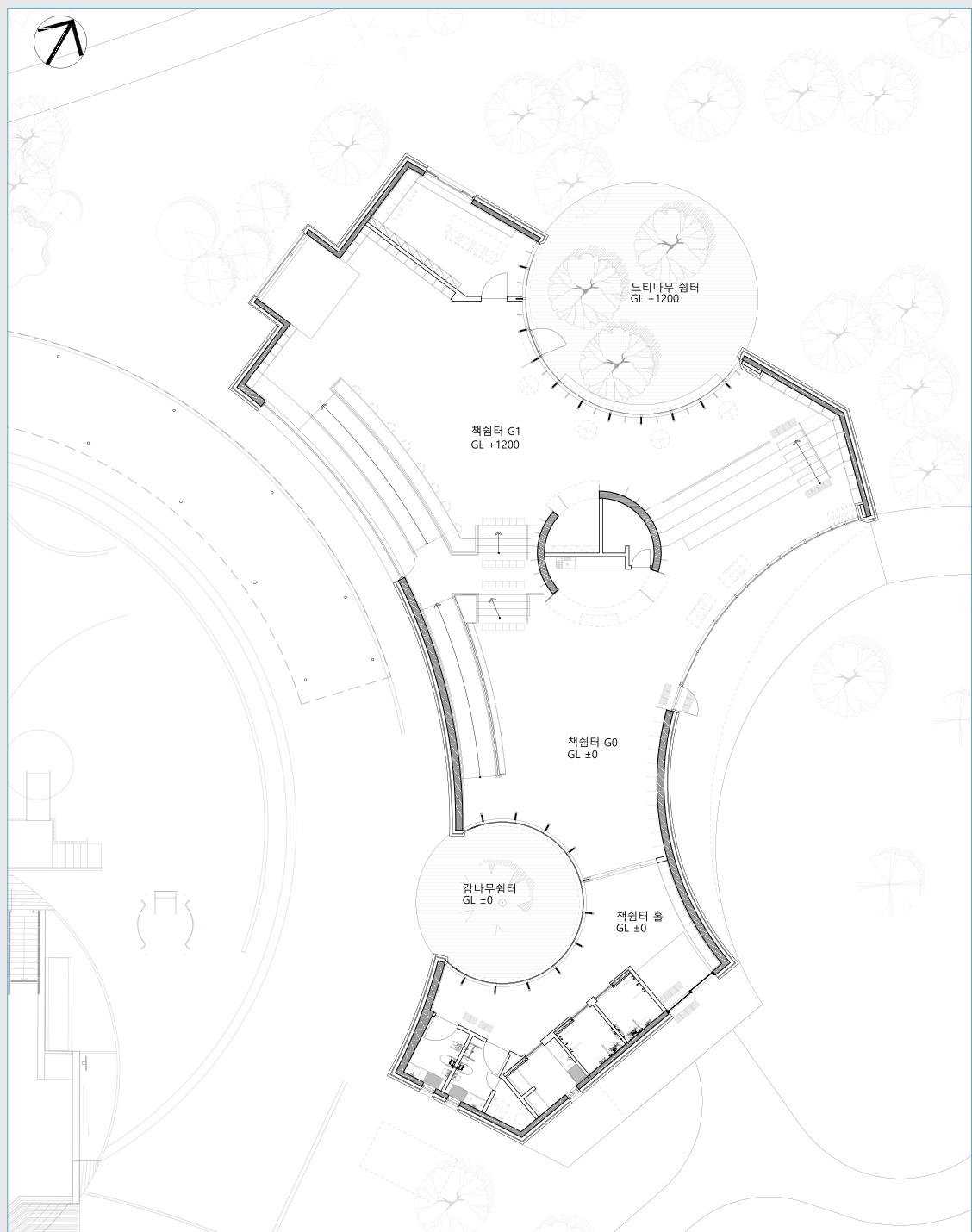
아이소매트릭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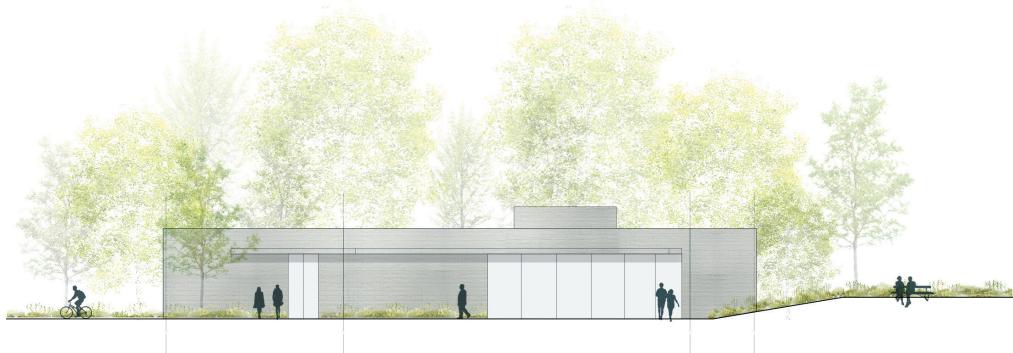
콘셉트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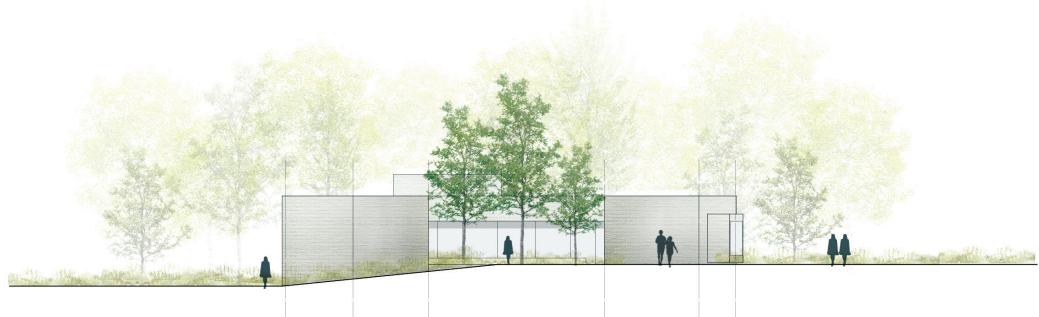
평면도



남측면도



동측면도



북측면도

도서관을 설계할 때 예전에는 서재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면, 요즘은 거실 같은 분위기의 공간으로 만드는 추세이다. 양천공원 책쉼터도 개방된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여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실 같은 분위기가 되길 바라며 계획하였다.

### 늘 공원 속에 있던 것처럼

공간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 구조부재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고 중앙의 커피스탠드와 원형 보이드를 이용하였다. 커피스탠드는 지붕 전체 하중을 지지하는 중심 역할을 하도록 콘크리트 구조물로 계획하고, 두 개의 원형 보이드 경계에는 책장과 결합된 스틸플레이트를 설치하여 단부에서의 치짐을 받게 하였다. 약 460m<sup>2</sup> 규모의 단층 건물은 녹음이 우거졌을 때나 잎을 떨군 후 짙은 색의 나뭇가지들이 돋보일 수 있는 배경이 되도록 아이보리색 벽돌로 마감하였다. 놀이터와 책쉼터 사이에는 두께 9mm 철판을 가느다란 원형 기둥으로 받친 간결한 형태의 캐노피를 만들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그리고 함께 온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그늘공간을 두었다. 건축물과 주변 환경이 엮여서 하나의 장소로서 기능하며 다양한 사용풍경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 일상 속 쉼터

공원과 도서관은 참 잘 어울린다. 개관 후 거기서 일하시는 사서 선생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 생각해 보니 곳은날 건물 안의 아득한 분위기 속에서 책장을 넘기며 공원을 바라보는 기분이 꽤 팬찮을 것 같다.

서울시에서는 혹한기나 혹서기에도 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 안에 쉼터 만들기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생활SOC사업이고 공간복지를 구현하는 일인데,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동네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많이 있다는 건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물론 이를 설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건축가에게도 무척 보람된 일이었다.

©도경 (주)서로이기 디자인 협회



상 편안한 분위기의 책쉼터 내부  
중 부지의 경사로 자연스럽게 생긴 레벨  
하 책쉼터와 놀이터 사이 그늘공간

L  
H  
해  
심  
당

# 고령자와 도시환경을 위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모델

김성훈

(주)지음플러스 대표

## 개요

위치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15나길 11
용도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665.70m <sup>2</sup>
건축면적	356.56m <sup>2</sup>
연면적	1,488.75m <sup>2</sup>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높이	16.4m
건폐율	53.56%
용적률	171.4%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설계	(주)지음플러스, 개인건축사사무소
설계담당	김성훈(지음플러스), 이창민(지음플러스), 윤주호(개인건축사사무소)
시공	한맥종합건설
건축외장 전문시공	(주)엠비케이
파사드 기술지원	포스코스틸리온
파골라 전문시공	(주)고진티엔씨
옥상그린커뮤니티 환경조성 컨설팅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옥상정원 시공	소셜벤처(주)심바이오리빙텍
설계기간	맛있는 정원 코리아
시공기간	2019~2020
공사비	2020~2021
건축주	약 28억 원
	LH 사회주택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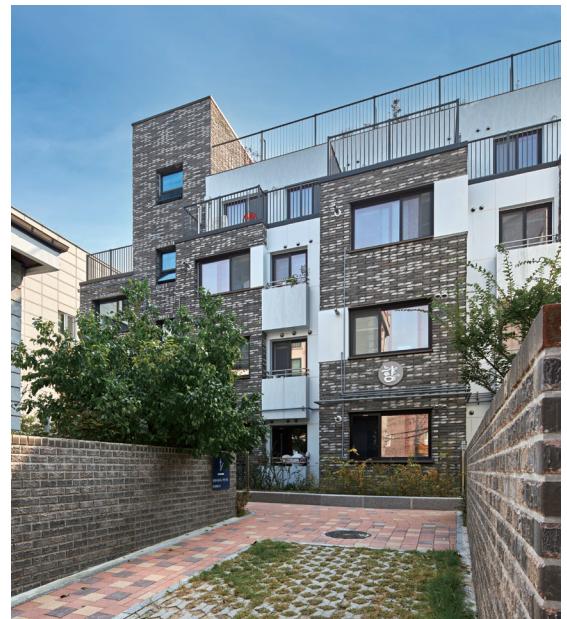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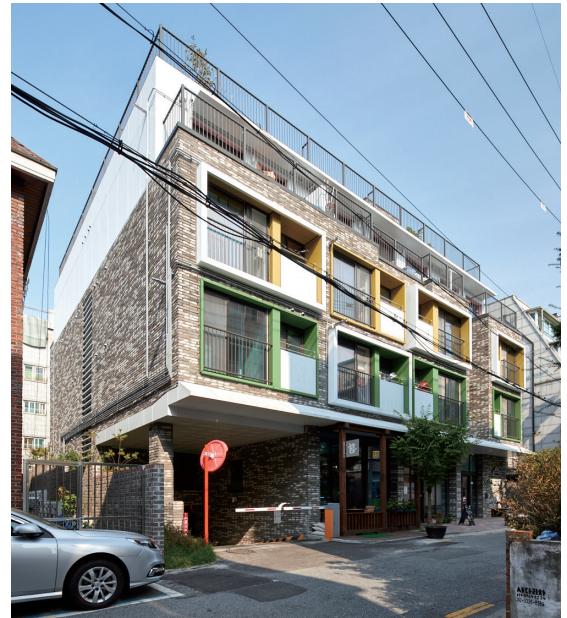
하늘에서 본 LH 해설당



동네 풍경 속 LH 해심당



©㈜지음플러스, 이춘구



상 컬러 포인트가 돋보이는 창가  
하 LH 해심당 진입로



상 지역 주민들을 위한 1층 쉼터(카페)  
하 리운지의 벽면녹화



상 하 정원과 농업이 결합된 키친가든  
내부 주거공간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지속해서 존재해 왔다.  
하지만 해심당은 지역과 거주민에게 특화된 공간 계획과  
건축 디자인을 통해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이자 볼거리,  
그리고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 멋진 장소 또는 건물이 될 것이다.

©주지음플러스. 이춘구



옥상 키친가든이 돌보이는 LH 해심당

## 어르신 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도심형 공동체 주택

해심당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며, 도심 내 공공성 기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하여 임대주택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역에 부여하고자 하는 LH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모델이다. ‘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실 수 있는 집’을 의미하는 해심당(海心堂)은 기존의 도봉구에 사는 고령 인구들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편의시설과 건강·돌봄 등의 서비스가 연계된 생활형 SOC 공간이 일체화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새로운 주택모델은 고령자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이들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층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 2층은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 3층은 할아버지, 4층은 고령자 부부 형으로 나뉘 세대 특성에 맞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특히 층마다 특화된 디자인은 고령자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이들도 거주할 수 있게 설계되어 LH 최초로 소규모 주택 배리어프리 인증을 취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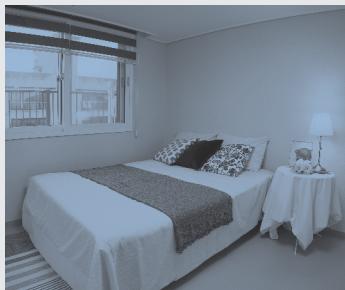
###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다

지상 1층 도로변에 인접한 곳에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여 저렴한 가격에 음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쉼터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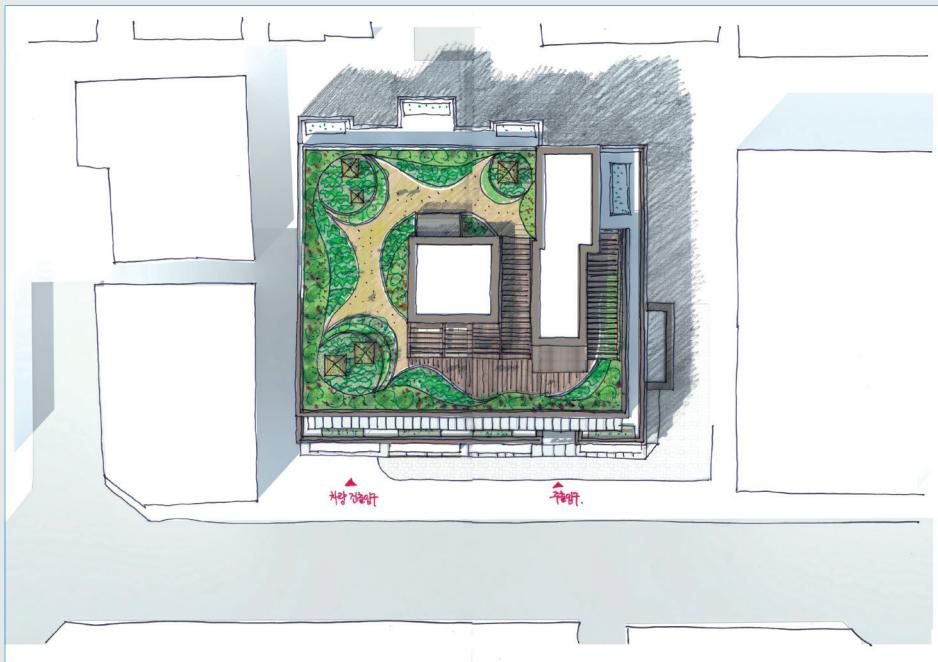
층별 커뮤니티 시설인 공동거실(경로당)에서 휴식을 하거나 교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하늘과 맞닿은 천창이 있는 최상층 복도(안마당)에서도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옥상 텃밭에서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밖에도 동네의 경관과 어울리는 벽돌 마감, 각층에 생활환경 인지 디자인을 적용한 컬러,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포스코스틸리온의 인피넬리(Infineli) 외부 강판 마감 등을 통해 고령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네에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을 제공하였다.

© 주거재생모스  
이하 구



상 하늘에서 본 LH 해심당  
중 동네 풍경 속 LH 해심당  
하 내부 주거공간



마스터플랜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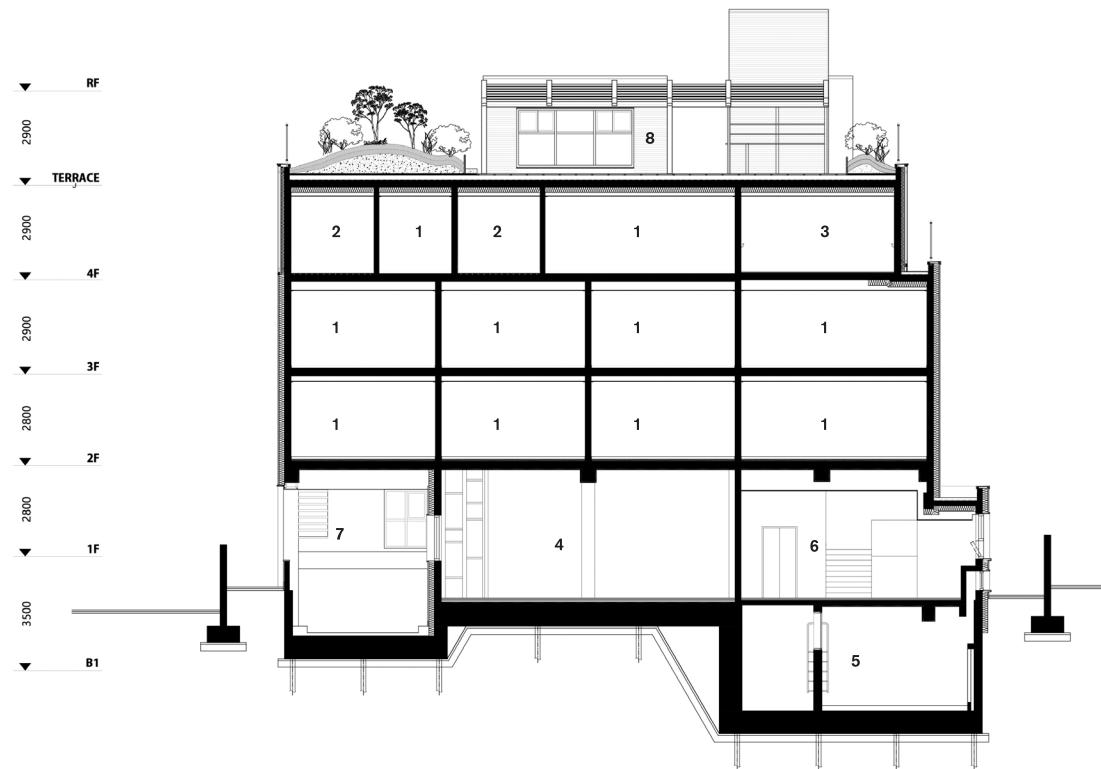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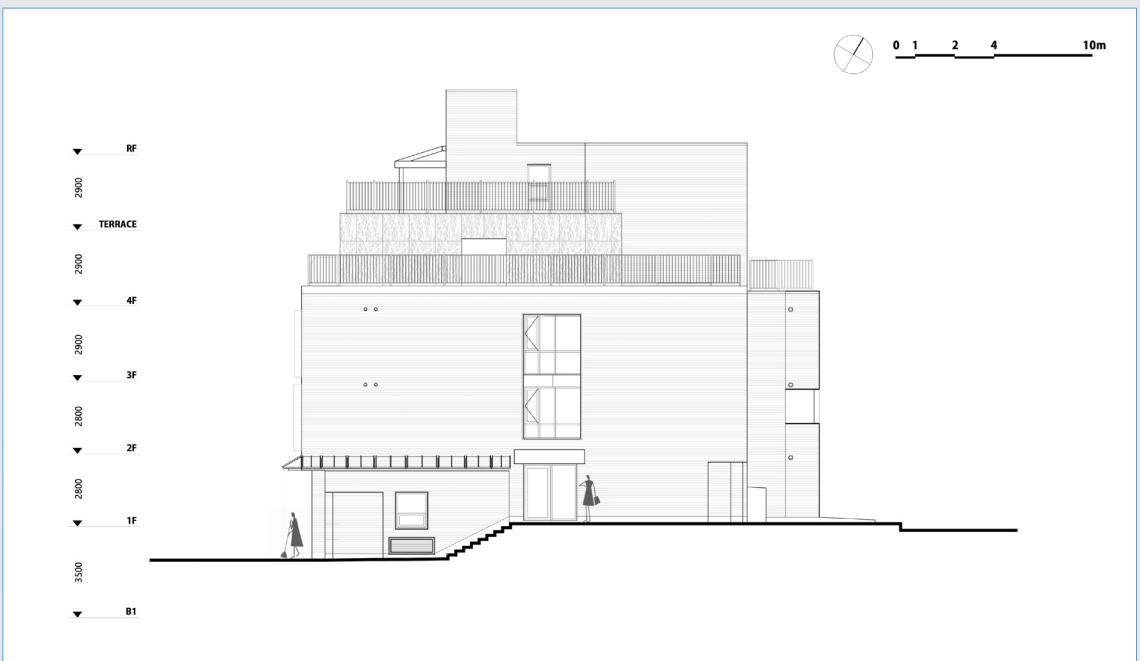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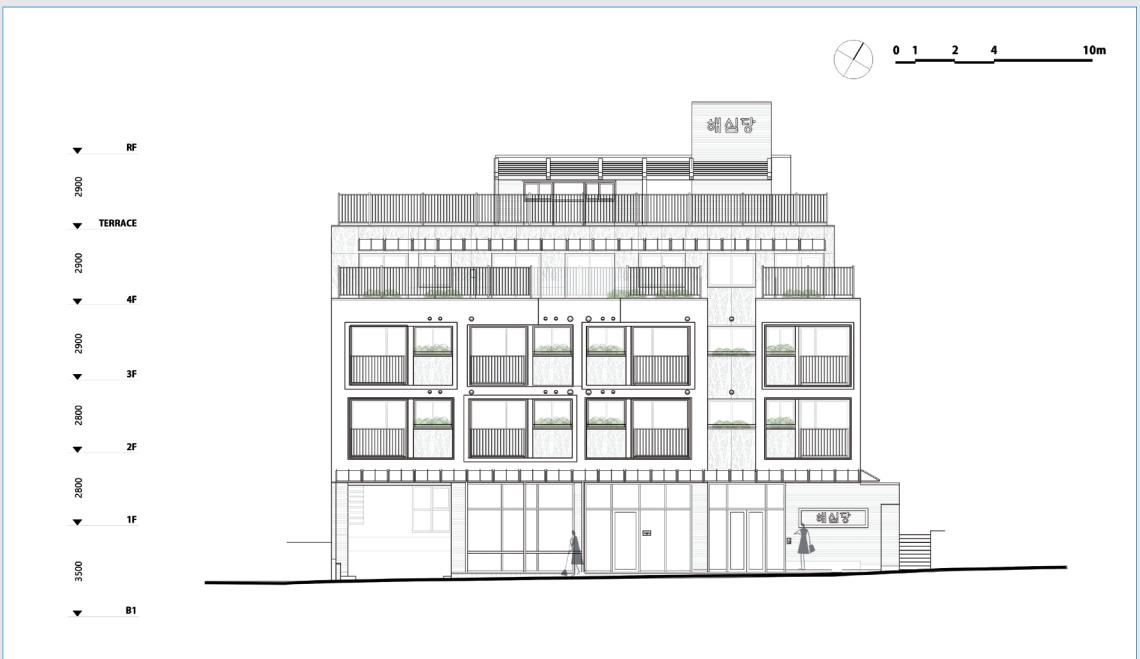
0 1 2 4 10m



- 1 주거공간
- 2 편의시설
- 3 라운지
- 4 커뮤니티 공간(주민 쉼터)
- 5 기계실
- 6 출
- 7 주차장 입구
- 8 키친가든



동측면도



남측면도(파사드 계획)



◎(주)지름풀먼스  
이종구



상 정원과 농업과 결합된 키친가든  
중 리운지의 벽면녹화  
하 지역 주민들을 위한 1층 쉼터(카페)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택의 새로운 모델

해심당은 아직 국내에는 생소한 바이오플릭 디자인(Biophilic design)을 건축계획에 반영하였다. 바이오플릭 디자인은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바이오플리아(Biophilia)에 기반을 둔, 자연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자연을 현대적인 건축과 어우러지게 하여 일상의 공간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게 한다.

먼저 옥상 정원과 텃밭은 단순한 도시 텃밭과 정원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생물과 식물이 상호작용하는 지속 가능한 정원과 농업이 결합된 퍼마컬처(Permaculture)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비록 200m<sup>2</sup>의 작은 옥상 공간이지만,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는 ‘도심 속 정원’의 역할을 한다.

1층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해 각종 공용공간에 적용된 벽면녹화는 자연의 환경을 실내에 제공하여 거주민과 이용자들에게 자연의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많은 건물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 또는 절감에 비중을 두었다면, 해심당은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녹색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해심당은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공건물로서 사회주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공공의 가치, 지역사회와 상생을 담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지속해서 존재해 왔다. 하지만 해심당은 지역과 거주민에게 특화된 공간계획과 건축 디자인을 통해 우리 동네의 사랑거리이자 볼거리, 그리고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 멋진 장소 또는 건물이 될 것이다.

해심당은 거주민인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자립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생을 추구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은다.

# auri 소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18

포럼 및 세미나

125

연구원 단신

127

건축공간연구원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을 통한 근린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장민영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형 놀이자원망 구축 방안 연구	강현미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지역파급효과 분석방법 연구	방보람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정책방향 재정립 연구	임유경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생활권 단위 공간계획 모형 연구	남성우
	보편적인 주거수준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기준 정비방안	김상호
	소멸하는 농촌마을 공간관리 도입방안 연구	여혜진
	탄소중립 실현 및 폭염대응을 위한 도시 기로녹지계획 연구	김영자
	공유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건축도시공간 대응방안 연구	허재석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연구	권영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김영하
	신산업 건축물 관련 규제 개선방안	이주경

## 기본과제

①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을 통한  
근린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디지털 전환과 뉴노멀 시대의 진입은 여가, 소비, 교육 등 삶의 방식이나 기준 등을 변화시키며 실제 도시공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근거리 동네 안에서 일상생활을 즐기는 '로컬택트(localtact)'와 '동네회' 경향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일명 '슬세권'이라고 하는 집 주변 생활환경에서의 먹거리나 즐길거리, 놀거리, 일거리 등을 누릴 수 있는 동네 인프라와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 기반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하이퍼로컬 서비스 확산 추세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기존의 지리적·행정적 지역 구분방식은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의 규모나 현안, 구체적 장소, 소규모 공동체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하이퍼로컬 동네 단위로의 접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변화하는 도시공간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유연한 공간계획을 마련하고자 도보 자족형 근린생활권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근린 단위의 도시계획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n분 도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시정책 전환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및 하이퍼로컬 서비스 확산에 따라 변화된 지역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동네 단위의 공공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동네생활권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동네생활권 단위로 공급해야 할 생활서비스 범주를 도출하고, 실제 근린 단위에서의 생활서비스 공급유형 및 범위와 주민들의 이용패턴을 교차 검토하여 하이퍼로컬 서비스 영역과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동네생활권 기반의 근린재생 지원방안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

네생활권 개념의 도입 방향을 제시하고, 동네생활권 단위의 생활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와 주민참여체계 개선 방안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밀착형 근린재생정책 및 사업추진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장민영

## ②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 지역사회 통합형 놀이자원망 구축 방안 연구

놀이는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유엔 아동 권리협약 제31조),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전인적 발달에 필수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들은 학습 부담으로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놀 권리의 보장받지 못하며, 삶의 만족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제한 여건에서 빈곤아동의 학습·여가·휴식시간이 줄고 게임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은(이시효, 2020),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적 교류와 놀이 활동을 보장하는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놀이는 아동의 선호와 양육자의 허용 및 지원, 균린 환경과 사회적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활동으로 놀이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놀이의 영향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 영국은 2008년 국가 차원의 '아동놀이 정책의 핵심 기구'인 PLAY ENGLAND를 수립하고, 아동 놀이 기회 및 자원 개선을 목표로 ▲모든 아동에게 놀 수 있는 공간·기회·시간 제공 ▲아동친화적인 균린환경 조성 ▲놀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서 '아동 놀이 시간과 공간 확충 및 아동친화적 놀이·여가환경 조성'을 중점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놀이혁신 선도사업(보건복지부)을 통해 지역사회 주도의 아동 놀이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놀이터를 비롯한 아동 놀이 공간의 조성 및 관리 업무가 다양한 부처로 나뉘어 있고, 지자체의 놀이 공간 개선 사업 대부분이 개별 시설 위주로 추진되어 지역의 놀

이 자원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놀이터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점 단위의 놀이 공간 공급과 관리만으로는 놀이기회 격차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근린 내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는 놀이자원망의 개념과 요건을 제시하고, 균린·도시 단위의 놀이 공간 공급 현황 및 이용 실태를 진단하며,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통합·연계하여 놀이 공간 부족 지역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아동의 놀 권리의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놀이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강현미

## ③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 지역파급효과 분석방법 연구

건축·도시, 문화재 분야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과 '역사문화자원 특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범정부 차원에서의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공간이 지역경쟁력 요소이자 지켜야 할 존재로 인식되면서 국가·지자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문화공간의 보전·활용보다 철거·개발이 가치 우위로 받아들여지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부동산 투기요인으로 인식하는 등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는 실제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와 지역 사회 영향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함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문화공간 사업 선정을 위한 조사·평가와 유사사업에서의 실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추진 이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news

및 진단체계가 희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역사문화공간 정책 추진 동력 확보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실증적 효과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특성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분석 방법(안)을 도출하고 실제 사업 대상지에 시범적용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효과 분석 방법과 사업효과 분석방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역민 공감대 형성 및 재원확보를 위한 실증적 근거 마련과 실효성 있는 사업관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방보람

#### ④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정책방향 재정립 연구

2007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13년에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 조성 시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19년에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은 더욱 확대되었고, 2021년에는 1,000여 건에 이르는 설계공모가 시행되었다. 이는 2014년 대비 4배가 넘는 수치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설계공모는 약 4,400건에 이른다.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설계공모 제도가 기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설계공모 이후 설계와 공사 등 공공건축 생산과정이 합리적으로 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제도 변화로 설계공모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 이후 설계 및 공사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은 미흡하였으며, 당선 이후 빈번한 설계 변경이나 공사 과정의 설계의도 구현 미흡 등의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설계공모가 과연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설계공모 이후 설계 및 공사 단계의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공공건축 생산과정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유경

#### ⑤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생활권 단위 공간계획 모형 연구

바야흐로 21세기는 탄소중립의 시대이다. UN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며 파리협정에 따른 1.5°C 온도 상승 억제를 실천하기 위해 저탄소를 위한 발전전략(LEDS)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실행 전략들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건물과 도시공간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전략으로서 2021년 말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건물 32.8%와 수송 37.8% 등의 탄소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건물과 도시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주공간이자 일터이며 인간의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서 ▲건물은 제로에너지화 ▲국토와 도시는 수소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 탄소중립 공간을 조성·확대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건물과 도시공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포함한 공간 단위에서 탄소중립 도시조성 전략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개발 업무지침'의 개편(2021년 말)은 이와 결을 같이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탄소중립 전략을 생활권 공간 단위에서 구현할 수 있는 계획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생활권 단위는 커뮤니티·마을 단위에서 지구단위 계획·도시개발사업 단위의 규모로 가장 효과적이고 실

천적인 공간 모형이 제시될 수 있는 범위이다. 이러한 생활권 단위에서의 기준 도시개발과 탄소중립 도시개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공간 계획 요소와 기술들을 도출함으로써 이를 적용한 최적의 공간계획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남성우

## ❶ 보편적인 주거수준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기준 정비방안

2021년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단기적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보급률과 1인당 주거면적 등 양적 지표의 개선과 별개로 주거 수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주택의 비율이 4.2%에 이르는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소규모(소형) 공동주택에서 두드러지는데 「주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경우 구조·설비·부대 복리시설 등에 관한 별도의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지만 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이나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성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사회초년생·저소득층 등의 주거시설로 많이 이용되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축기준을 운용하고 있지만 최소 규모와 구조기준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안전 및 환기성능 등 생활공간으로써 갖춰야 할 보편적인 주거성능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기틀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2인 가구 및 청년가구 등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소형)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실태 파악 및 보급 확산 원인 진단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형별, 규모별 건축 관련 기준 적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적정 품질 확보를 위한 건축 관련 기준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소규모(소형) 공동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 인구 및 주택정책의 방향 설정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호

## ❷ 소멸하는 농촌마을 공간관리 도입방안 연구

농촌은 우리 국토의 83.3%(2018)에 달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2020년 5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읍·면의 약 85%가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며 역내 모든 읍·면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공동화가 자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농촌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의 상업지역보다 많은 112개 용도가 허용되어 개발압력이 높고, 정부 및 지자체의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시책이 추진될 때마다 개별입지 공장·축사·신재생에너지시설·쓰레기처리시설 등 각종 시설의 입지규제 완화,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 수차례 규제강화와 완화가 누적되면서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과 농업생산활동에 대한 누적적 환경침해, 농촌 고유의 경관적·생태적 가치 훼손은 법적·사회적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성장관리제도를 통한 공장입지 규제와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한 농촌 위해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토지이용계획 이론에 기반한 현행 토지이용관리제도는 도시 토지이용의 입지 개념을

news

농촌 토지이용에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용도지역제로 허용된 토지이용 간 경합을 조정하거나 입지를 배제할 수 있는 입지 조정기능이 매우 부실하다.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구는 신규 개발수요에 초점을 둔 사업지구형 위주이고, 규제지구는 포괄적 행위규제로 실질적 관리 기능이 취약하여 현재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집합적 조정·관리 필요와 미스매칭한다. 또한 농촌공간이 갖는 생산공간, 생활공간, 자연공간이 혼재되고 공존하는 공간적 정체성이 도시공간과 차별화된 계획적 관리를 요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농촌 토지이용의 미시적, 집합적, 입지 및 행위규제를 위한 농촌 용도지구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촌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쟁점에 대응하는 용도지구 유형과 유형별 입지 및 행위규제 요소 체크리스트를 제시함으로써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여해진

## ⑧ 탄소중립 실현 및 폭염대응을 위한 도시 가로녹지계획 연구

최근의 여러 기후변화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의 1.5°C 상승은 예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표적 이상기후 현상인 폭염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이에 도시열섬 현상이 함께 나타나 이전보다 더욱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무더운 도시환경이 도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더위를 피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 증가, 승용차 이용 증가 등은 탄소 중립 달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더운 도시환경은 보행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보행자는 직사광선과 높은 기온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높은 열스트레스가 축적되며, 이는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또한 보행

자의 외부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개인차량의 이용을 증가시켜 더욱 더운 도시환경을 만드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보행과 옥외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도시민,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도시 차원에서 외부공간의 폭염대응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로변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 띠녹지, 건물 앞 조경공간 등의 가로녹지들은 보행자의 열스트레스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주요 자원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같은 관련 법정계획에서 가로녹지에 대한 계획은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특히 지자체의 가로녹지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도로 노선별 가로수 식재 현황(개수, 수종 등) 정도만 파악하고 있어 가로녹지의 구체적인 현황,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로녹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보행자에게 보다 쾌적하고 시원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로녹지 계획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시적인 도시 열환경 현황과 가로녹지 조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에 보다 취약한 가로유형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로녹지 계획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가로녹지 계획을 수립·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지

## ⑨ 공유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건축·도시공간 대응방안 연구

공유모빌리티는 대중교통 연계 및 단거리 차량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퍼스트-라스트마일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유모빌리티의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이용자 간 상충 및 안전사고

문제, 무분별한 주차 및 방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정의와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었다. 이에 공유 전동킥보드 등 공유모빌리티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자전거 인프라가 가지는 한계(연속성, 연계성 등)가 존재하며, 공간 및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도로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만을 초래하는 공간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공유모빌리티가 주요 교통 수단으로 정착하고 대중교통 연계 및 단거리 차량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특성과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공유모빌리티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이용실태 및 물리적 이용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물리적 환경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공유모빌리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이동경로의 연속성 및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방안, 안전한 주행을 위한 통행공간 개선 방안, 이용행태와 접근성을 고려한 주차공간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유모빌리티 관련 정책·사례·민원 등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용현황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수단과 공유모빌리티의 효율적 연계 및 공존 방안을 제시하고 공유모빌리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하재석

#### **⑩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연구**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식민지 건축유산의 보전·활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동시에 '근대문

화유산'이 학술용어로 등장하면서 식민지 건축유산은 현재 삶의 근간이자 일제강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물로 인식되는 한편 보전·활용에 대한 반대의 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6·25전쟁과 군부독재정권 등 비교적 가까운 시대와 관련된 건축물이 보전·활용되면서 갈등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보전·활용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대립이 격화되면서 유산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나 보전·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책이 결정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포함한 건축유산의 보전·활용 의사결정은 관련 전문가 및 정책 결정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전·활용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경우 사건 당사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기존의 건축유산과 가치 기준이 상이하며, 정책결정 이전에 유산의 보전·활용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 유형에 대한 이해와 유형별 갈등관리의 구체적 방법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 갈등관리 운영규정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과정에서 유산과 관련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유산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보전·활용 방법에 대해 참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권영란

#### **⑪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전국적인 도시쇠퇴 대응을 위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은 8년간(2014~2021년) 534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2014년 도시재생사업지로 최초 선정된 '도시재생 선도 지역', 2016년 선정된 '도시재생 일반지역' 등 초기 도시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작년까지 총 37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이 종료되었으며, 앞으로도 사업종료 지역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시재생사업 종료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쇠퇴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에 부족한 행정·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을 공급하고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다수 공급되었으나, 그간 시설의 '공급'에 초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종료 이후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종료 이후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귀속됨에 따라 시설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시설이 방치되는 등 거점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에서도 제한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 운영주체의 참여 등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한 해법 마련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계획·조성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 중인 거점시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유형별 운영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중 거점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계획 수립 항목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장기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김영하

## ⑫ 신산업 건축물 관련 규제 개선방안

최근 신산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를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2021년에는 정부 최초로 제1차 신산업 정비 기본계획

을 수립하였다. 도심형 신산업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제조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도시 내에 신산업 지원 시설인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시설 공급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산업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 법제는 미흡한 편이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나 입주 가능 업종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별 기준은 「건축법」으로 다루고 있어 행정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2018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용 시설 중 하나의 용도로 신설되었으나 건축물의 목적이나 구조, 이용행태가 방송통신용 시설과 차이가 있다. 도심형 시설로 조성되어 도시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시설안전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지만 관련한 건축 기준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심형 신산업 지원 시설에 대한 건축 법제 현황과 조성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산업과 관련하여 도시 내에 새로 공급되고 있는 시설 중 「건축법」 용도체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경우, 각 사업체가 요구하는 시설 특성이 뚜렷하고 새로워 건축 기준 검토가 필요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센터 등 도심형 신산업 지원시설이 규명되고 관련 산업 특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건축 법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주경

## 2022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월 23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먼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이주현 기획총괄과장이 '생활SOC 3개년 계획 추진 성과'를 주제로 투자·시설 확충 및 사업혁신,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분야별 체감성과를 제시하고 3대 분야의 생활SOC 성과지표의 달성을 공유하였다. 이어 건축 공간연구원 성은영 연구위원은 '생활SOC 정책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를 통해 생활SOC 정책을 통한 공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지자체 주도적 공급 및 관리·운영 ▲범 부처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정책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정목 대외협력담당관 연구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생활SOC 계획 및 사업 추진 사례'를 통해 생활SOC 5개년 계획 및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관련 현황 분석이나 계획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와 연계한 다양한 데이터 생성 및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로건축사사무소 최재원 소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생활SOC 디자인'을 주제로 생활SOC 디자인 사례인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풍기읍사무소 ▲영주장애인복지관 등을 소개하였다.

발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 산·학·연·관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관점에서 생활SOC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 AURI 마을재생 포럼 ‘넥스트 도시재생: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월 27일(목) ‘넥스트 도시재생: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지 재생’을 주제로 AURI 마을재생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원도심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의 정착을 통한 활성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와 함께 여러 전문가가 모여 로컬리즘 기반의 지방 중소도시 재생의 실행방안과 지향점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로컬 플레이어’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장민영 부연구위원이 ‘로컬 플레이어, 청년의 지방이주와 실험적 정착’에 대해, 박주로(주)로모 대표가 ‘10년 후 로컬을 위한 중소 앵커기업 육성’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로컬신’을 주제로 윤주선 부연구위원이 ‘방법에서 방식으로: 길바닥 연구자의 길’을, 개항로프로젝트 이창길 대표가 ‘지역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개항로프로젝트’를 각각 발표하였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로컬리즘’을 주제로 한 마지막 주제발표는 서수정 선임연구위원의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방향’에 이어 김정태 mysc 대표의 ‘도시재생의 다변화와 협업: 스타트업, 임팩트 투자, 그리고 사회혁신’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민영 부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발제자들과 함께 로컬리즘을 기반으로 중소도시재생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auri



2021  
아시아  
도시경관상  
국내 수상작  
시상식 개최



news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1월 20일(목) 대회의실에서 '2021 아시아도시경관상(Asian Townscape Awards) 국내 수상작 시상식'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하였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아시아인에게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자 2010년부터 타 도시의 모범이 되며 성과를 이룬 도시와 지역, 사업 등을 선정하여 시상해 왔다. 건축공간연구원은 2020년부터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본부,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아시아 해비타트협회,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와 함께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총 24개 작품을 예비심사 대상으로 접수했으며,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중국과 홍콩·인도네시아·일본·한

국에서 총 11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는 '양천공원'(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금빛수로'(김포시청), '서울경관기록화 사업'(서울특별시청), '삼각지마을'(영주시청)이 각각 본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국내 수상작 시상식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국제 시상식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국내 수상작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편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는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통해 국내 우수 경관 사례를 발굴·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일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 2021 AURI 우수 연구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월 24일(월)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AURI 우수 연구 시상식 및 발표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2021년 한 해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중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 대상(2건) 및 우수상(3건)을 수여하였다.

먼저 대상은 공동 수상으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임유경 연구위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 체계 구축방안(변은주 연구원)'에게 수여되었다. 우수상은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고령 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고영호 연구위원)', '지속가능 보행도시조성지원사업(한수경 부연구원)', '제2차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논문상에는 박유나 연구원이 '침입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공간 특성에 대한 연구 외 4건'으로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이후 마련된 발표회에서는 수상자 대표로 나선 과제 책임자가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연구 수행 과정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3월 18일(금)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시·건축 주요 기관들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자료수집) 도시 및 건축 자료 기증·대여, 복제품 제작 등 자료 확보 협력 ▲(운영협력) 후원·인적교류·시설지원 등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전시홍보) 전시 자문 및 연계 프로그램 등 콘텐츠 지원, 협약기관 전시시설 지원 및 특별전 등 홍보사항 발굴 등이었다.

한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로 기획되었으며 향후 전시 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 콘텐츠를 구축 및 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 당선작(2020)

출처: 국토교통부. (2022).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성공적 건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한다. 3월 22일 보도자료.

## 건축공간연구원-(사)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동천 업무협약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3월 25일(금)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사회주택협회와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사무처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 사회, 주택 등 환경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문화 구현 관련 주택 정책 연구 ▲사회주택과 관련한 기존 사업 평가 및 제도 개선, 법제화 방안 등 연구 ▲주거복지 및 주거문화 관련 학술활동 개최 협력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협약식에서는 다양한 주택 공급과 운영체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최경호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회의 ‘사회주택 현황과 과제’,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주택 연구 추진 방향’,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의 ‘사회주택 법률지원, 제도 연구 및 출판 계획’ 순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향후 세 기관은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문화 구현을 위해 이슈 발굴, 제도개선, 정책개발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news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http://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 2021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1-1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2  
스마트건축 산업화 모델 및  
제도 기반 확장에 관한 연구  
3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3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4  
쇠퇴지역 공간관리를 위한  
빈집 정책 개선방안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 방안  
3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6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7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계획 및  
사업 개편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8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9  
포스트코로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언택트 어버니즘 전략 연구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0  
인구감소시대 노후공동주택 빙집의  
실태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  
2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1  
시민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2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3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3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3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4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정책 방안  
28,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5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28,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1  
건축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2  
건축을 환경·성능설계  
도입 및 제도화 연구  
14,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3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4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위한  
건축기획 개선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5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11,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6  
농촌마을의 공동화 현황 및  
공간관리 수요 분석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1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  
특·광역시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과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2  
스마트도시 기술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방향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3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CRDPs)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5  
범죄두려움 저감을 위한  
도로조명 조도 기준 연구  
1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6  
근린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운영방안  
2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7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8  
보행자길 조성·관리를 위한  
보행행태 및 인식 분석:  
보도를 중심으로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9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  
국민체육센터  
2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10  
민간시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  
15,000원

## 2020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0-1  
민·관 협력을 통한 노후 공원  
재정비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2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3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4  
지역 경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5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6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도입 방안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7  
스마트건축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 인증제도의 개편 방향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8  
미세먼지 민감군을 위한 공공건축물  
시설 계획 기준 연구  
2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9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체계 구축 방안  
3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0  
한국형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장소프로파일링 기법 개발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1  
공개공지의 지속기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2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2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5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공간 조성 방안 20,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1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 재생 방안 연구 4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3 고령자 건강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 생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6 한국 공공건축물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2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2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 조성을 위한 보행네트워크 분석 연구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4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2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4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효과성 분석 1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7 중소도시 마을연계형 거점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16,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3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5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방안 연구 21,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5 서울시 도로다이어트사업의 성과 및 효과평가 연구 - 2018~2019년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8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23,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4 건축을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기준 개선 연구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6 리빙랩을 활용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주거계획 지원방안 2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6 2019년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의 성과 및 효과평가 연구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 14,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9 자연재해 재난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연구 21,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5 거주자 행태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대응방안 연구 1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7 노상주차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가로공간 개선방안 연구 2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7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0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한목적용 활성화 방안 2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6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8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8 그린뉴딜을 통한 도시 기후변화 정책개선 방안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1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성 분석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1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방안 연구 20,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1 건축규제 협력화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9 건축률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2 도시 내 공공건축物 저층부 및 외부공간 개선방안 연구 29,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2 공공건축 설계용역 밸류제도의 현황과 과제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3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3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3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서울시 5개 CPTE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3 산업단지 경관기아드라인 마련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4 노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현황진단 및 개선방향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4 노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현황진단 및 개선방향 연구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4 한국건축양식 개념 및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 담론 연구 2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4 창의적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 포용적 균형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5 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3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5 한국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18,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5 보행편의지수 개발 및 보행정책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2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6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31,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6 지역 특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세종 - 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을 중심으로 - 13,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6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을 외부 발코니 활성화 방안 8,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3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조성·활용을 위한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2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7 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18,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7 2019 기후변화 대응 건축·도시 정책동향 21,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1 국토경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경관법 개정 방안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4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이용자 참여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8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19,000원	

# 건축공간연구원 신간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auri.re.kr](http://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비매품이 아닌 발간물은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